

2020 NPO 참여예산제 결과 자료집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연구조사 보고서



2020 NPO 참여예산제 결과 자료집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연구조사 보고서

| 목 차 |

I. 서론

- 1. 조사배경과 목적 ————— 9
- 2. 조사방법과 한계 ————— 11

II.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15
- 2. 조사 결과 ————— 17
 - 1) 활동기간별 대응활동 현황 ————— 17
 - 2) 활동영역별 대응활동 현황 ————— 23
 - 3) 활동지역별 대응활동 현황 ————— 27
- 3. 시사점과 한계 ————— 28

III.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심층인터뷰 결과

- 1. 조사 개요 ————— 33
- 2. 조사 결과 요약 ————— 34
- 3. 활동지역별 활동 분석 결과 ————— 47
- 4. 활동영역별 활동 분석 결과 ————— 61

IV. 결론

- 1.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총평 ————— 93
- 2.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한계 ————— 96
- 3. 제안 ————— 99

V. 부록

- [질문지]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심층인터뷰 ————— 103
- [참여자 목록]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심층인터뷰 ————— 104
- [답변내용]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심층인터뷰 ————— 105

| 표목차 |

[표1] 분류 세부내용	15
[표2] 기간별 활동(총합) 빈도	17
[표3] 기간별 활동영역에 따른 활동 빈도	18
[표4] 기간별 조직구분에 따른 활동 빈도	18
[표5] 기간별 활동지역(From)에 따른 활동 빈도	19
[표6] 기간별 활동지역(To)에 따른 활동 빈도	20
[표7] 기간별 활동대상에 따른 활동 빈도	21
[표8] 기간별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 빈도	22
[표9] 기간별 자원조달 방법에 따른 활동 빈도	23
[표10] 영역별 조직구분에 따른 활동 빈도	24
[표11] 영역별 활동대상에 따른 활동 빈도	25
[표12] 영역별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 빈도	26
[표13] 영역별 자원조달 방법에 따른 활동 빈도	26
[표14] 지역별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 빈도	27
[표15] 심층인터뷰 참여자 목록	33,104
[표16]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37

I

서론

1. 조사배경과 목적
2. 조사방법과 한계

I. 서론

1. 조사배경과 목적

1) K-방역의 성공과 정부의 역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과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재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가마다 방역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K-방역'을 통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개방성, 투명성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은 국민과 시민사회로부터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K-방역 성과에 대한 정부과잉 대표성과 시민사회의 역할

그러나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 대책이 마치 정부만의 노력의 결과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방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강력한 집행 권한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영역을 맡는 소위 제3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활동과 역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이나 마을에서 자원봉사자나 공익활동가, 마을주민 등이 스스로 방역 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코로나 초기 마스크가 부족할 때 스스로 재원을 모아 마스크를 제작·배포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 주민들을 보살피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활동은 결국 시민사회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 문을 닫았을 때 현장을 지키고, 시민을 만나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찾아간 것은 시민사회의 공익 활동가들이었다.

그 외에도 국가 통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때 시민권 보호 운동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 것 또한 시민사회의 숨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업을 당연시해왔던 정부나 기업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실업 시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과 같은 정책적 대응도 시민사회가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해 온 중요한 성과이자 역할이었다.

3)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을 통해 드러난 시민사회의 대응과 역할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그러나 언론에 비친 K-방역의 성공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나 역할은 도외시된 채 오로지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정책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어 매우 위험하고 옳지 못하다. 또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시민들이 잘 따라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과 판단도 결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정부의 성과를 과대평가하려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언론의 소극적이고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위기 때마다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 또한 정당한 평가의 부재는 향후 발생할 위기에서의 민관협력 그리고 시민사회 참여의 위축과 역할의 축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회위기 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가치와 사회적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은 위기 극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과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사회적 재난과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대응 성과, 객관적 자료 부재

그동안 시민사회는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태안기름유출사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나 국가 위기 때마다 전 국민적인 참여를 조직해 위기 극복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어떠한 활동과 역할을 했는지, 그 결과 사회위기 극복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나 평가 작업이 턱없이 부족하다. 개별단체나 각 영역별로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사회 전체의 활동이 취합되어 평가된 적은 전무하다.

시민사회의 대응 성과가 담긴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한 것과, 이에 대한 공식 평가가 없다는 것은 역으로 국가나 사회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정과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사회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들의 역할과 사회적 필요성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5) 시민사회의 활동과 역할을 드러내는 객관적 자료 필요

따라서 해당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째, 코로나19 위기 시에 행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단체별, 영역별, 지역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가치와 기여를 공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수집하였다. 둘째,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응활동이 위기 극복에서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취합된 활동자료를 분석하여 시민사회 간, 시민사회-정부 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시민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며, 각 지역영역에서의 시민사회 간, 시민사회-정부 간 공동협력 및 대응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과 한계

시민사회 생태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코로나19 타파연대(이하 타파연대)'라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주목하는 연구조사팀을 구성하였다. 타파연대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산인권센터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의 주체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첫째, 시민사회단체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드러내고 객관화하기 위해 총 584건의 대응활동을 직접 수집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 영역은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연계협력이 가능한 영역과 지역 범위 안에서 취합이 가능한 활동자료를 중심으로 양적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본 조사가 시민사회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둘째,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로는 환산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다층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앞선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시민사회 내 주요영역 연대단위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자문과 양적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26명의 활동가를 선정하였다.

끝으로 본 조사는 자료 수집의 한계에도 사회위기 시 시민사회의 활동과 그 가치를 드러내고, 정당한 사회적 인정과 평가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과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동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II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II.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코로나19 위기 시 시민사회의 대응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이 수집되어 가공되었다.

①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소속단체 중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부터 2020년 2월에서 6월(초)까지 각 네트워크의 소속단체들의 코로나19 대응활동 관련 소식을 전달받음

②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활동의 ▲활동영역 ▲활동주체 ▲협력기간 ▲조직구분 ▲활동기간 ▲활동지역(FROM) ▲활동지역(TO) ▲활동대상 ▲활동분류 ▲활동내용 ▲재원조달 방법 ▲원본주소(WEB link)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각 구분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 참고

③ 시민사회단체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이 예상되는 지역은 뉴스검색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추가 취합하였음 (검색어 예시: #시민사회단체 #코로나 #00지역)

[표1] 분류 세부내용

분류	분류 종류
활동영역	활동의 '영역'을 5개로 나누어 기재함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어드보커시 ▲중간지원 ▲펀딩/모금
활동주체	활동주체의 법인(단체) 명을 기재함 - 개별 사업의 경우에는 각 단체의 공식명칭 - 연대사업(활동)의 경우에는 가능한 전부 나열하여 명기함 (또는 '00 외 00개 단체' 로 명기)
협력기관	후원처 혹은 협력기관이 있었을 경우 기재함
조직구분	활동주체의 조직유형을 6개로 구분하여 기재함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재단,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 ▲주민조직 ▲민간네트워크(연대체) ▲기타
활동기간	기간은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함 (2월의 경우 대응활동 건수가 적어 3월과 합산, 6월의 경우 조사시점 상 5월로 합산함)
활동지역(From), 활동지역(To)	활동지역(From)은 대응활동이 시작된 지역을 의미하며, 활동지역(To)는 대응활동을 통해 지원받은 지역을 의미함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전국 :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온라인 활동,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 등 ▲해외

<p>활동대상</p>	<p>활동대상은 16개로 분류하여 기재함 ▲시민일반(불특정다수) ▲취약계층 전반 ▲아동, 청소년 ▲이주민, 난민 ▲빈곤층, 노인 ▲장애인 ▲의료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인권활동가, NGO ▲코로나 환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기타</p>
<p>활동분류</p>	<p>활동분류는 10개로 나누어 기재함 ▲물적지원활동 ▲정서적지원활동 ▲자원연계, ▲어드보커시활동 ▲모금 및 기금 캠페인 ▲민관협력, ▲후원금 기부 ▲방역활동 ▲기업협력 ▲기타</p>
<p>재원조달 방법</p>	<p>재원조달 방법은 6개로 나누어 기재, 확인이 어려운 곳은 자체예산으로 분류함 ▲자체예산 ▲정부예산 ▲일반모금 ▲기업지원 ▲모금기관 지원 ▲그 외</p>

2. 조사 결과

1) 활동기간별 대응활동 현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한 2020년 2월 25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였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아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을 맡으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가. 기간별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기간별 전체 대응활동 빈도는 ▲2-3월 380건, ▲4월 67건, ▲5-6월 101건, 확인할 수 없는 활동 ▲36건으로 코로나19가 1차 대유행한 3월에 현저히 많다. 그 이후로는 총력대응이 아닌 간헐적인 대응수준으로 빈도가 낮아진 모양새가 확인되었다. 5월 수도권지역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였을 때는 3월만큼의 대응활동은 없었지만, 전월(4월)에 비해 많은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기간별 활동(총합) 빈도

(단위 : 건)

구분	2-3월	4월	5-6월	정보없음	총계
활동 빈도	380	67	101	36	584 ¹⁾

나. 기간별 ‘활동영역’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기간별 활동을 활동영역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취합된 전체 활동자료는 584건으로 이 중 사회적경제 영역이 253건(4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어드보커시 139건(23.8%), 마을공동체 122건(20.9%)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펀딩/모금활동과 중간지원 활동이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가장 활동 비중이 높은 2-3월 (380건) 중 사회적경제 영역이 242건으로 전체의 41.4%를, 마을이 86건(14.7%)을 차지했다. 한편, 어드보커시 활동은 5-6월에 타 영역 대비 현저히 높은 78건을 기록했다. 이는 타 영역 활동이 주로 신천지 발 집단감염 대응에 집중할 때 어드보커시 활동이 사회, 정책적 이슈 대응에 더 많은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 데이터 성격 별 중복건수 포함 혹은 제외에 따라 각 [표]의 총계가 상이함

[표3] 기간별 활동영역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구분	2-3월	4월	5-6월	정보없음	총계
마을공동체	86	6	9	21	122
사회적경제	242	3	3	5	253
어드보커시	13	39	78	9	139
중간지원	8	10	5	0	23
펀딩/모금	31	9	6	1	47
총계	380	67	101	36	584

다. 기간별 ‘조직구분’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기간별 활동을 조직구분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전체 704건(중복 포함)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형태의 활동이 237건(3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단, 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159건(22.6%), 민간네트워크(연대체)의 활동이 118건(16.8%)으로 많았다. 주민조직 활동도 86건(12.2%)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경우 2-3월에 227건의 활동이 집중되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10건에 그쳤다. 이에 비해 재단,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와 민간네트워크에서는 2-3월의 활동량을 5-6월까지 꾸준하게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4] 기간별 조직구분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조직구분	2-3월	4월	5-6월	정보없음	총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227	3	3	4	237
재단, 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54	46	57	2	159
중간지원조직	34	7	8	7	56
주민조직	62	5	6	13	86
민간네트워크	51	17	46	4	118
기타	2	17	29	0	48
총계	430	95	149	30	704

라. 기간별 ‘활동지역(From)’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기간별 활동지역(From)에 따른 활동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전체 608건(중복 포함) 중 2-3월에 388건(63.8%)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4월 67건, 5-6월이 11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3월에 대구지역 신천지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하 신천지 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활동지역별로는 서울이 91건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천지 감염의 중심지였던 대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많은 시민사회 활동이 진행되었다. 전국단위의 시민사회 활동도 50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소 특이한 점은 전국적 활동이 시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에서의 활동이 2-3월 대구 신천지 발 집단감염 대응에 집중되었다면, 전국은 방역대응을 포함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전반에 관한 활동이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5] 기간별 활동지역(From)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활동지역(From)	2-3월	4월	5-6월	정보없음	총계
서울특별시	83	2	4	2	91
부산광역시	6	-	-	-	6
대구광역시	37	-	-	-	37
인천광역시	7	-	-	1	8
광주광역시	25	4	4	2	35
대전광역시	19	-	-	3	22
울산광역시	14	-	-	-	14
세종특별자치시	4	-	-	-	4
경기도	20	1	-	8	29
강원도	21	-	-	-	21
충청남도	26	3	1	-	30
충청북도	18	6	8	-	32
전라남도	13	-	-	-	13
전라북도	21	-	1	9	31
경상남도	12	1	-	-	13
경상북도	5	-	-	-	5
제주특별자치도	7	-	-	-	7
전국	50	50	92	18	210
해외	-	-	-	-	-
총계	388	67	110	43	608

마. 기간별 ‘활동지역(To)’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기간별 활동대상 지역(To)에 따른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시민사회 활동(지원)대상 지역으로는 전체 619건(중복 포함)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활동대상이 된 곳은 전국이 176건(28.4%)이었지만, 지역으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128건(2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신천지 발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으로 대구지역을 지원하는 활동이 지역 또는 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신천지 발 집단감염이 확산된 2-3월에 대구광역시 지원 비중이 전체 410건 중 119건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표6] 기간별 활동지역(To)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활동지역(To)	2-3월	4월	5-6월	정보없음	총계
서울특별시	60	2	5	2	69
부산광역시	8	1	-	-	9
대구광역시	119	2	1	6	128
인천광역시	6	-	-	-	6
광주광역시	5	1	1	2	9
대전광역시	16	-	-	3	19
울산광역시	11	-	-	-	11
세종특별자치시	3	-	-	-	3
경기도	16	1	-	7	24
강원도	16	-	-	-	16
충청남도	23	3	1	-	27
충청북도	16	6	8	-	30
전라남도	6	1	-	-	7
전라북도	11	-	1	6	18
경상남도	8	1	2	-	11
경상북도	46	2	-	1	49
제주특별자치도	4	-	-	-	4
전국	35	49	90	2	176
해외	1	-	2	-	3
총계	410	69	111	29	619

바. 기간별 ‘활동대상’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기간별 활동을 활동대상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시민사회가 지원한 전체대상 744건(중복 포함)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상은 일반시민(176건/ 23.7%)이었다. 감염병 위기극복이라는 국민적 방역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 84건(11.3%), 빈곤층 및 노인이 81건(1.9%), 취약계층 전반이 5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문제 해결 중간 매개체인 의료인(75건)과 인권활동가(60건), 공무원(54건)으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들어갔다.

한편 현장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9건으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지원을 행하는 주체로만 인식할 뿐 그들도 현장에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의 가장 큰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지원도 25건, 장애인 지원은 28건에 그치며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지원 빈도가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표7] 기간별 활동대상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활동대상	2-3월	4월	5-6월	정보없음	총계
시민일반(불특정다수)	62	37	66	11	176
취약계층 전반	46	1	2	4	53
아동, 청소년	69	5	6	4	84
이주민, 난민	10	6	5	4	25
빈곤층, 노인	64	5	10	2	81
장애인	23	1	-	4	28
의료인	64	2	6	3	75
공무원	47	-	-	7	54
자원봉사자	8	-	-	1	9
인권활동가, NGO	46	4	5	5	60
코로나 환자	10	-	1	1	12
자영업자, 소상공인	11	1	2	-	14
농민	7	5	2	-	14
기타	33	8	16	2	59
총계	500	75	121	48	744

사. 기간별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기간별 활동을 활동분류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시민사회에서 가장 많이 행한 사업 및 지원은 331건으로 약 50%를 차지한 ‘물적지원활동’이었다. 그 다음으로 어드보커시 활동이 137건(25.7%)으로 높았다. 물적지원활동이 많은 것은 신천지 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인해 우선 마스크나 생필품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대부분의 지원이 신천지 발 집단감염 이슈가 터진 2-3월(449건/67.9%)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어드보커시 활동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19위기, 이로 인한 경제위기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5-6월에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전국 대책위)’가 구성되고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한 이슈가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정서적지원활동’이 15건으로 낮은 지원활동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직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위기가 시민 및 취약계층에 정신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데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에 따른 활동 고민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민관협력(8건)과 기업협력(11건)이 현저히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사회가 위기 극복 거버넌스에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위기 극복 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회위기 시 민관협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점은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표8] 기간별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활동분류	2-3월	4월	5-6월	정보없음	총계
물적지원활동	285	12	13	21	331
정서적지원활동	5	3	6	1	15
자원연계	18	5	3	-	26
어드보커시활동	12	38	87	-	137
모금 및 기금 캠페인	23	6	2	-	31
민관협력	8	-	-	-	8
후원금 기부	31	2	3	1	37
방역활동	39	-	-	6	45
기업협력	11	-	-	-	11
기타	17	1	2	-	20
총계	449	67	116	29	661

아. 기간별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기간별 활동을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재원조달 방법은 총 678건(중복 포함)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자체예산을 통한 활동이 대부분(553건/81.6%)을 차지한데 비해 정부지원은 39건(5.8%), 기업지원은 34건(5.0%)에 그쳤고, 모금기관의 지원은 7건(1.0%)에 불과해 사회위기 시에 정부의 공적지원과 기

업지원, 모금중간지원기관들의 사회적 지원이 매우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9] 기간별 자원조달 방법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자원조달 방법	2-3월	4월	5-6월	정보없음	총계
자체예산	359	63	105	26	553
정부예산	21	7	8	3	39
일반모금	31	4	5	1	41
기업지원	28	-	3	3	34
모금기관 지원	4	1	1	1	7
그 외	3	1	-	-	4
총계	446	76	122	34	678

2) 활동영역별 대응활동 현황

본 조사는 활동영역(유형)을 크게 ▲마을공동체(122건), ▲사회적경제(253건), ▲어드보커시(139건), ▲중간지원(23건), ▲펀딩/모금(47건)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였다. 영역별 세부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역별 '조직구분'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영역별 활동을 조직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형태로 총 237건 중 213건의 활동을 하였고, 재단,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드보커시'의 형태로 총 146건 중 80건의 활동을 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과 주민조직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를 주된 형태로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네트워크(연대체)를 조직해서 활동한 곳으로는 '사회적경제'와 '어드보커시'가 총 110건으로 5개의 조직구분 중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영역별 조직구분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조직구분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어드보커시	중간지원	펀딩/모금	총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20	213	1	-	3	237
재단,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7	19	80	8	32	146
중간지원조직	29	11	-	13	3	56
주민조직	68	8	1	1	8	86
민간네트워크 (연대체)	5	44	66	1	2	118
기타	2	1	46	3	1	53
총계	131	296	194	26	49	696

나. 영역별 ‘활동대상’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영역별 활동을 활동대상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어드보커시’는 시민일반(불특정다수)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100건)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아동-청소년, 빈곤층-노인, 장애인)과 조력자집단(의료인, 공무원, 인권활동가-NGO)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마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많았고, 사회적경제와 유사하게 조력자집단에 대한 지원활동도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았다.

[표11] 영역별 활동대상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활동대상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어드 보커시	중간 지원	펀딩 /모금	총계
시민일반	37	28	100	8	3	176
취약계층 전반	23	22	1	-	7	53
아동, 청소년	11	45	3	4	19	82
이주민, 난민	3	5	8	3	3	22
빈곤층, 노인	25	33	5	-	18	81
장애인	7	20	-	-	5	32
의료인	40	46	4	-	12	102
공무원	21	32	-	-	-	53
자원봉사자	5	3	-	-	1	9
인권활동가, NGO	14	32	2	3	9	60
코로나 환자	4	5	1	-	3	13
자영업자, 소상공인	5	8	1	1	1	16
농민	4	5	1	4	-	14
기타	9	28	2	3	-	42
총계	208	312	128	26	81	755

다. 영역별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 빈도

영역별 활동을 활동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활동유형은 물적지원활동(332건/50.1%)과 어드보커시(136건/20.5%) 활동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어드보커시 영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물적지원활동이 가장 많았다.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우 전체 283건 중 186건이, 마을공동체 영역의 경우 139건 중 101건이 물적지원활동이었다. 어드보커시 영역의 경우 총 136건 모두 어드보커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영역별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활동분류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어드 보커시	중간 지원	펀딩/ 모금	총계
물적지원활동	101	186	1	10	34	332
정서적지원활동	7	1	-	3	4	15
자원연계	5	15	-	4	2	26
어드보커시활동	-	-	136	-	-	136
모금 및 기금 캠페인	-	6	2	-	23	31
민관협력	2	2	-	2	-	6
후원금 기부	5	22	-	2	8	37
방역활동	8	36	-	-	-	44
기업협력	5	5	-	-	1	11
기타	6	10	-	9	-	25
총계	139	283	139	30	72	663

라. 영역별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영역별 활동을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5개의 활동영역에서 모두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빈도(525건/87.2%)가 현저히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우는 총 288건 중 251건(87.2%)이었고, 마을공동체의 경우는 125건 중 90건(72%), 어드보커시는 142건 중 139건(97.9%)이 자체예산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펀딩/모금 영역의 경우는 59건 중 일반모금이 27건(45.8%)로 자체예산 25건(42.4%)보다 조금 높았다.

[표13] 영역별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재원조달 방법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어드 보커시	중간 지원	펀딩/ 모금	총계
자체예산	90	251	139	20	25	525
정부예산	16	9	2	11	1	39
일반모금	7	4	1	2	27	41
기업지원	9	22	-	1	2	34
모금기관 지원	3	1	-	-	3	7
그 외	-	1	-	2	1	4
총계	125	288	142	36	59	650

3) 활동지역별 대응활동 현황

지원받은 활동지역(To)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전국, ▲해외

가. 지역별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 빈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역별 활동을 활동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영남(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역 대상 활동이 전체 666건 중 204건(30.6%)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구경북 중심의 신천지 발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활동의 결과로 보인다. 전국 활동이 188건(28.2%), 수도권이 115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활동 빈도가 낮은 지역은 호남 47건, 강원 18건, 제주 10건에 그쳤다.

활동분류로 보면 물적지원활동이 666건 중 335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어드보커시 활동이 136건(20.4%)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역의 경우도 대부분 물적지원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특히 영남의 경우 204건 중 147건(70.6%)이 물적지원 활동이었다. 다만 전국단위는 물적지원활동보다 어드보커시 활동의 빈도가 69.7%를 차지하며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민관협력활동의 빈도가 가장 낮았는데 총 666건 중 7건에 불과했다.

활동지역으로 보면 강원, 호남, 영남, 제주지역에서 민관협력은 전무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민관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이 포함된 영남지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민관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기업과의 협력 역시 11건에 그치며 사회적 위기 시 시민사회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지역별 활동분류에 따른 활동 빈도 (단위: 건)

활동분류	수도권	충청	강원	호남	영남	제주	전국	총계
물적지원활동	60	59	11	33	147	7	18	335
정서적지원활동	7	-	-	1	1	-	6	15
자원연계	10	5	1	2	4	-	2	24
어드보커시활동	1	-	-	2	2	-	131	136
모금 및 기금 캠페인	-	-	2	-	13	1	15	31
민관협력	4	1	-	-	-	-	2	7
후원금 기부	6	8	3	-	17	-	3	37
방역활동	18	6	1	5	13	1	1	45
기업협력	-	2	-	2	4	1	2	11
기타	9	3	-	2	3	-	8	25
총계	115	84	18	47	204	10	188	666

3. 시사점과 한계

1) 양적분석에 대한 총괄평가

조사된 결과를 요약하면 ▲시기별로는 대구 신천시 발 집단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2-3월(380건)에 가장 집중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고, ▲활동영역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영역과 마을영역, 어드보커시 영역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활동내용으로 보면 물적지원활동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나 전국을 중심으로 어드보커시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민관협력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신적지원활동도 일부 건수에 불과하였다. ▲지원대상으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아동청소년, 빈곤층 및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많았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전국단위, 수도권에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활동지원 대상 지역으로는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2-3월 대구 신천지 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전국 시민사회에서 대구 방역활동을 지원결과로 평가된다.

2) 시사점

① 사회적 위기와 극복과정에는 항상 시민사회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시민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사회적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위기극복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신천지 발 집단감염을 계기로 대구광역시의 위기가 확산되자 전국 시민사회 차원에서 자체 자원을 동원하여 긴급하게 대구를 지원활동을 전개한 것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② 시민사회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새로운 시민사회로 등장한 사회적경제와 마을 영역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시민사회 활동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영역은 사회적경제영역과 마을영역의 코로나19 위기극복 활동이었다. 물론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평가받았던 어드보커시 활동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는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으로 떠오른 사회적경제와 마을 영역에서의 활동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 활발하게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2~3월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될 시기 사회적경제와 마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방역활동은 물론 물적지원활동을 주도한 것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③ 시민사회의 코로나19 사회적 위기극복 과정에 공적 재원의 배분이 부재하였다

시민사회 대부분의 코로나19 위기극복 활동에서 사용된 재원은 자체재원이나 모금이었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위기극복 과정에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원 자체가 부족한 시민사회가 자체재원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 재원을 조달한 것은 공적 재원조달과정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정부의 공적재원 배분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와 같은 공적재원의 비합리적 배분방식으로는 위기가 장기화 혹은 확산될 경우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공적재원배분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④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 민관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민관협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이하고 의아한 점이 시사점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 민관협력반이 운영된 사례가 그나마 의미 있고 일상적인 민관협력체계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지역에서의 상시적인 민관협력체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민관협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원인에 대한 향후 냉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⑤ 시민사회 내 사회적 재난 및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았다

우선 지역별 대응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한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영역 간 네트워크가 부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즉 영역 내 연대와 협력은 활성화되었으나 영역 간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국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주로 진보진영이나 노동계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영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활동면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사회 영역은 주로 방역 및 물적 지원활동이 많았으나 전국시민대책위의 경우 어드보커시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져 전국이나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시 시민사회가 움직였던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시민사회 내 지역네트워크와 영역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시민사회 내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단과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⑥ 시민사회의 고유의 어드보커시 활동은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대부분의 시민사회 활동이 2-3월에 집중되고, 그 이후 약화되는 현상을 보인 반면 어드보커시 활동은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어드보커시 활동이 사회서비스나 제공이나 물적 지원활동과 달리 코로나19 전 과정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응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해고 없는 고용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공공의료 확충 등과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등은 여전히 사회적 위기와 재난 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자 영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소수자나 이주민,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시민권 침해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책으로 꾸준히 사각지대를 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활동이었다고 평가된다.

3) 한계

본 양적 데이터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소속단체 중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자료와 타파연대에서 파악한 추가 자료조사를 포함해 최대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사가 영역별 실제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어 영역 또는 시민사회 전체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역별 활동 정도에 대한 비교나 평가는 단순히 취합된 자료의 양에 의한 결과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또한 활동내용과 활동대상 등 여러 분석항목에서 한 가지 항목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분석의 편의상, 분류의 어려움 등으로 분류에 있어서 조사자의 주관적 분석이 개입되어 있음도 한계로 평가된다.

Ⅲ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심층인터뷰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요약
3. 지역별 활동 분석
4. 영역별 활동 분석

III.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심층인터뷰 결과

1. 조사개요

서론에 기술했듯 심층인터뷰는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충하고,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직접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다산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인터뷰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시민사회 내 주요영역 연대단위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자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영역을 포괄하여 선정되었다. 코로나19 대응활동이 돋보였거나 활동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인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인권/어드보커시, 보건의료, 마을공동체, 모금, 국제개발”과 유의미한 코로나19 대응활동이 진행된 활동지역인 “대구광역시, 중앙단위”로 분류하여 주요 24개 단체를 선정한 후, 코로나19 대응 담당자 혹은 집행책임자 26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16] 참고)

인터뷰 시기는 2020년 7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 인터뷰 대상자의 소속단체 및 본인소개 등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 (2) 코로나19 대응활동에 관한 질문, (3) 코로나19 대응활동 평가에 대한 공통질문을 활용하여 9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표15] 심층인터뷰 참여자 목록

분류	단체명	인터뷰 대상	쪽수
지역/중앙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제준 공동상황실장	105
지역/대구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센터장	107
	대구4.16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	109
	대구 장애인 지역 공동체	조민제 사무국장	112
	성서공단 노동조합 상담소	김용철 소장	114
자원봉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	117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	12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원민 차장	124
사회적경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	127
	천안사회적경제연대	장동순 집행위원장	130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나비문고	이영도 대표	132
인권/어드보커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김영아 대표	13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팀장	140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나영정 활동가	14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랄라 활동가	145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희우 활동가	149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152
마을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윤성미 총괄국장	154
	전주도시혁신센터	김도훈, 김경호 공동체지원팀원	157
	연수구 코로나19 마을과 함께 이겨내기 모임	장수진 대표	159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진곤 팀장, 김희정 과장	162
	지역재단협의회,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	164
국제개발	글로벌케어	백은성 대표	170

2. 조사 결과 요약

인터뷰를 진행한 24개 단체 모두 전사회적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영역과 단체의 특성에 따라 긴급 구호, 의료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 고용조정 제로선언, 정확한 정보 전달, 긴급생계비 지원, 방역 및 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양적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각 영역별 대응활동의 세부 과정과 한계, 아쉬운 점 등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각 영역별 활동가들의 고충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며 각 영역 내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다.

더불어 재난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위기 시 더욱 생존을 위협받는 취약계층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통적으로 시민사회 영역 간, 시민사회-정부 간 원활한 협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위기에 반응하는 시민사회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력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대구지역 집단감염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지역과 영역에서 대구지역으로 물적자원 및 의료자원을 지원했다. 대구 시민사회는 쌓이는 물적자원을 확인하고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물품이 전해져야 하는지 파악하고 배분했으며 동시에 방역정책에서 배제되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직접 찾아가 방호복을 입고 방역을 하고 검진 및 자가격리를 돕는 등 매뉴얼이 없는 위기 시에도 신속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 방역지침 대상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다국어로 번역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에 게시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사회적 혐오와 차별에 따른 당사자들의 심리적 공포감 완화를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인권 영역에서는 방역조치를 통한 인권침해 이슈가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개별 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정책 대응뿐 아니라 의제별 토론을 통한 사회적가이드라인 발표, 대응활동 기록 백서 제작, 의료공백 실태 조사를 위한 TF팀을 꾸려 후속활동을 기획하는 등 발 빠르게 따로 또 같이 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3월 초부터 연대기구를 꾸려 노사대표들이 모여 고용조정 제로선언을 발표했으며 개별 기업들이 경제적 위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임대료 및 긴급자금 대출사업을 추진했다.

2) 기존 활동 범위를 넓혀 대응한 시민사회의 확장성

코로나19 1,2차 대유행 시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인권 영역 시민사회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 및 돌봄기관들이 일제히 휴관 조치되면서 기존의 취약계층이 더욱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홀로 있게 했으며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들이 끼니를 굶게 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등록이주민, 난민을 두고 주민등록증 시스템에 근거한 공적마스크 배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도를 실행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 영역 시민사회는 기존에 진행하던 어드보커시 활동과 함께 긴급생계비 지원사업과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다른 영역과 협력하여 대응했다.

3) 시민사회-정부 간 협력의 어려움

코로나19 위기 시 시민사회 각 영역은 소외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대응하며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정부 간 협력이 부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력보다 인력 요청 혹은 협조 요청 형태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고, 제한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자체가 당장 방역 차원에서 집단감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협업을 제시할 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해소되고 난 이후의 후속 사업 논의 및 소통을 지속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 협력이었다. 전사회적인 사회경제적 재난 시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정부 간 견고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4) 활동을 위한 자원 마련의 한계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목표와 다르게 대응활동을 기획하고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야 했다. 24개 인터뷰 단체 중 개별 단체가 직접 모금하여 시민 후원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단체는 14곳, 사랑의 열매 등 재단 및 모금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단체가 11곳, 기업 후원을 받은 단체 5곳, 분담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한 단체가 5곳, 정부 지원을 받은 단체는 3곳이었다.

전사회적인 코로나19 위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시민사회가 대응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나 이는 추후 또 다른 사회경제적 재난 시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시급한 구호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단체에서는 모금 및 지원금을 받는 과정 동안 재난구호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한계를 갖는다. 분담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한 단체의 경우에는 이후 재정적 여건이 나빠지는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재난 시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며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이 꼭 필요함을 공감하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자원 마련 대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 일상적 네트워크와 연대 경험의 중요성

코로나19 집단감염 위기 시 이슈별로 시민사회 영역별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협력과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일상적인 네트워크가 있었던 영역, 기존에 동일 이슈에 함께 대응했던 연대의 경험이 있는 영역은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수월했다.

6) 추후 재난 발생 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기록, 분석하여 한계를 공론화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추후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장선에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부재했다는 점을 공통적인 한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계를 느낀 지점들은 지원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미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난 시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최대한 촘촘히 설계하기 위해서, 평소에 재난 위기관리를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하기 위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영역 간, 시민사회-정부 간 재난대응 논의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표16]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지역/중앙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 조 직화 및 사각지대 발굴 - 정부정책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참여 단체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취약계층과 다른 코로나 취약계층 (특수고용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부의 지원 필요 - 보건의료단체들이 중요한 연대체로 등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대책위라는 연대체를 통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 - 긴급재난지원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람 발굴 - 네트워크 속도가 느린편 - 정부지원 및 재원 마련 어려움 - 위기상황장기화로 인한 단체들의 활동병행 어려움 	모색한 대안들 정부 정책과 법안으로 반영하는 과정 필요
지역/대구	대구시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 지원물품 배분 - 외부에서 지원된 물품을 배포하기 위해 정보 파악 및 리스트작성 - 현장활동가응원 인터뷰 부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금2500만원 - 후원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지원센터,지역재단 협의회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이 전달되었음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와상황실구성함 - 대구지원자원을시민사회와 행정이함께협력해체계를구축했다면지원이더수월했을것임 - 대구시에서기부금모금허가를내주지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재난구호활동이아니라지속적대비의의미로활동가인터뷰등기록으로남기는작업 - 지역문제해결플랫폼으로이어서감염병위기의대응방향성을고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에대한정보부족 - 재난상황에서의역할을파악하기힘듦 - 대구시초 기대응 미흡,행정(대구시)과의 연결 실패 - 초기에방역과돌봄이충돌하여대응이미흡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안심을 위한 방역작업 - 어디에무엇이필요한지에대한리스트작성,업데이트 - 후원품목전달자논의 - 물품이정확하게전달될수있도록네트워크필요 - 매뉴얼,훈련등에대한 논의 필요 - 기후변화대응필요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지역/대구	대구진보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6연대및가족협의회를통한성금및물품을통해취약계층지원 - 의료진식료품및생필품지원 - 재난대응연대기구형성및정책제안,토론회진행 	시민 모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여성,의료노조등다양한단체와의연대활동 - 취약계층지원에공백이발생하여시민사회가함께대처함 - 자원봉사센터와연계를시도하였으나불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지원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직접 지원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 지자체와시민사회가함께정보를공유하고지원하는시스템구축필요 - 자원봉사인력등을활용할수있는지자체의상상력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안전물품을충분히구비하여긴급상황시대응 - 지자체와시민사회 의상시적협업시스템 필요
지역/대구	대구 장애인 지원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 확진 업무지원 - 장애인과활동지원자대상구호물품,간편식품공수및배급 - 장애인감염병지원 대책에대한정책제안과매뉴얼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기업모금 - 재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연결고리가 되어 각 영역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후원 물품을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느끼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를 인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및기관이매뉴얼을실제로적용가능하도록수정할 필요가있음 - 민간단체및복지기관이휴관하지않고역할을고민하며 재난비상체계를만들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사가확진 사실을숨기거나말없이그만두는등의경우에대비하여대체인력을구할방안을찾아야함 -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격리에대한 대책마련시급
지역/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방역물품전달 - 다국어방역지침전달 - 코로나관련노동,의료상담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물품 시민,노동단체로부터 지원 - 1천만원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국노동자커뮤니티를통해신속한정보번역및물품전달 - 이주단체의공동대처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됨 - 지역주민들에게 이주노동자 실태를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들이코로나상황에서감금되고,가짜뉴스로인해공포에떨었음 - 구조적으로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정책에서배제되는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방역지침홍보 - 미등록이주노동자의료지원및근본적제도개선필요 - 이주노동자건강보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 이주노동자차별사 회적이슈화					험가입확대,고용보 험가입의무화등사각 지대해소노력필요
자원봉사	전주시자원 봉사센터	- 손세정제 만들어 사용하기캠페인 - 방역봉사 및 열화 상카메라 운영봉사 - 다중이용시설 내 향균필름 부착 캠페 인 - 마스크포장,면마스 크제작 및 나눔 - 심리방역응원 및 물품전달 - 지역소비촉진 및 방역물품,식료품지원	기업,공공기관,사 랑의열매등총 7220만원	- 중간지원조직,봉사단체 들과의 연계협력 - 전북도청으로부터공적마 스크판매봉사자배치요구받 아협의하여파견함	심리 방역 효과 있었다고 평가	- 초기에자원봉사활동매뉴 얼이없어서어려웠음 - 표준자원봉사활동매뉴얼 제작필요 - 감염병에대한봉사자안전 문제심각함.봉사자의감염 위험에대해책임을질수없 음.	- 자원봉사자의감염 위험에대한예방책과 보험보장등시스템보 완필요 - 재난시자원봉사자 가이드라인미리준비 하여즉각대응필요
자원봉사	한국중앙자 원봉사센터	- 자원봉사현장지침 및뉴스레터전달 - 마스크양보캠페인, 지역농산물소비운동, 자가격리자및소외계 층에식료품지원 - 방역소독봉사활동	- 물품기부대구 경북전달 - 사랑의열매,농 협,이마트등의지 원으로사업시행	- 주민자치와마을활동가등 과의 협력 - 마을조직,사회적경제협 동조합등과초기부터활동을 공유하고공동대응했으면 좋 았을것	- 자원봉사참가자76만명, 수혜자348만명 - 서로를배려하고격려하는 사회분위기	- 기부전문조직과의협력으 로 사업을시행함 - 비대면사회에서온라인이 외에자원봉사활동을어떻게 이어갈수있을지고민	- 재난시기에총괄을 맡은사람이마을단위 로조사하고파악하고 대응할수있도록커뮤 니티방역체계를만들 어야함 - 시민사회재난대응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체계가필요함 - 마을공동체에서안 전학습,훈련이필요
자원봉사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 마스크양보 및 나 눔캠페인진행 - 드라이브스루진료 소자원봉사자모집	자체 재원	- 대구지역집단감염상황에 서자원봉사자와센터관리팀 이현장에서일할수있는체계 필요 - 재난발생시가장시급한곳 을미리확보하지못해네트워 크를통해급히대처	- 심리 방역 효과 있었다 고 평가	자원봉사자의 질병보험 처 리 불가능 자원봉사자를 책임지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와 연대가 필 요함	시민사회 재난대응 네트워크가 꼭 필요 행정이 보지 못하는 문제나 사각지대를 챙길 수 있도록 민 간의 네트워크 필요
사회적경제	한국사회적 경제연대회 의	- 코로나현황 파악, 통계정리, 정책제안 - 모금활동 - 임대료지원사업 - 코로나관련현황점 검및사업제안워크숍 - 고용조정제로선언 - 사회적경제상생마 켓	- 자체모금액1억 2천 - 사랑의열매코 로나대응위기자 금매칭	- 노동계와의 협력 필요, 방법을 고민 중 - 상생마켓을통해사회적경 제기업활동가치인정및품질 컨설팅도병행하여협력함	- 고용 조정 제로 선언으 로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을 확인함	-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소비시장 미확보 - 지역,업종,분야별소통 연 대의틀 미비 - 자체적사용기금 없음	- 단체와 기업을 돕 는 상생협력기금필 요 - 사회적경제인들의 공제필요성 -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 사회적경제노동자 들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천안사회경 제연대	- 취약계층방역물품 나눔(면마스크) - 대구지역지원	- 자체 재원	-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구매진행 - 재생산구조형성을위한학	스스로를 수혜자로 생각하 지 않고 사회적 자본의 형 성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시스템의 성취감을 확인함	지역사회가의제를가지고연 대하며문제의대안을찾아야 하는데현재는단순한수준	- 재생산을 위한 시 스템화작업필요 - 궁극적 안전망 만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 천안농산물상호구매및수익금일부협동자조기금으로기부		습모임지속 - 시민사회와사회적경제의관계가후원이상으로넘어서지못하여아쉬움 - 풀뿌리희망재단은기존의틀을벗어나기어려워협업에한계			들기 위한 시스템 - 공동구매,연대기금등의시스템
사회적경제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추진위원회결성하여노사대표자가NO고용조정공동선언 - 울산사회적경제자조기금으로긴급대출자금마련	단법인 밴드로부터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자금 매칭됨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 연대 협력 어려움	사회적 기업들과 네트워크 형성	- 상근자가없는구조라실무가제대로분배되거나시행되지않음 - 정부나재단의지원을받으면서당사자조직들의능동성떨어짐	- 협력을위한시간을강제하여참여도를높이고,연대의의미를다짐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만들어사회적기업들이노동자복지기금지원할수있도록준비 - 당사자조직들의사회적경제협의체중요함
사회적경제	주식회사 나비문고	주민들에게 책을 기부함	- 자체조달 - 사회적기업들 협력및교보문고물품기부	지역 내 여러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진행함	-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 신뢰 - 시민의식개선	- 연대활동에에너지가많이투입되면서상시활동부실위험 - 일감분배어려움	개인의 활동 역량 강화 방안 필요함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인권/어드 보커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관련 정보 및 뉴스번역 및 전달 - 난민/이주민직접연락 및 지원 - 정부정책대응활동(이주민배제규탄) - 난민관련 언론대응활동(마스크지원) - 코로나시대의난민, 이주민지원관련토론회및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재단사람 지원사업 - 시민,단체모금 - 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민생계비지원사업 - 세이브더칠드런난민아동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난민단체네트워크평등하게공동대응했음 - 서울시에서다양한시민사회간담회진행했으나연결실패 - 지자체안에서중간지원조직이생기면서시민단체역할 축소됨 - 학교와의협력희망했으나 실패함 - 지역과의연결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달 빨랐음 - 난민인권네트워크 연대체 즉각 대응 - 지자체재난지원금정책규탄하여정책시정이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 기반이 부족 - 이주민,난민들의심리적 공포 - 이주민들의해고로인한생계위협심각함 - 난민당사자와의커뮤니티형성이부족해직접적의견을모으지못함 - 중앙정부와의신뢰관계는없어서정책을직접수정해내지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 모금이나 후원비도 일상적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인권/어드 보커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배제정책인권위진정 - 이주민을위한방역물품및생필품지원 - 소외이주민긴급생계비지원 - 방역지침및코로나정보번역제공 - 이주민긴급재난지원을위한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재단 5000만원, 바보의 나눔 5000만원, 사랑의 열매 5억 지원하여 방역 물품, 생필품, 긴급 생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이주민 관련 네트워크 단체 80여개가 직접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이주민 상담 후 서류 작업까지 도와서 긴급생계비를 1749명에게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호 활동까지 하면서 활동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혐오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쉬움 - 외국인을방역보호안에서배제한정책에대한아쉬움 - 정보나지자체의정책들이오히려사각지대를만들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사각지대해소를위한제도개선및정책제안 - 이주민관련기관들과의MOU제안 - 미등록이주민에대한료비문제 - 정부가주민센터가폐쇄하면서이주민지원은더욱힘들었음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 외국인관련긴급재난보호법령이 작동하지 않음
인권/어드보커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 성소수자검진독려, 홍보, 방역당국모니터링및대응 - 성소수자커뮤니티대상상담운영 - 활동기록하여백서제작	- 성소수자커뮤니티 내 개인후원 - 서울시시민소통담당과홍보사업	- 이주민의 개인 정보에 대해 확진자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주민과의 연대와 협력 어려움	-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동명의의 사업을 진행 - 성소수자커뮤니티 대상 홍보사업안정감 - 문제제기를 통해 가이드라인 수정됨 - 사안의긴급성크며피해자가있어서연대와협력이신속함	지자체와의 관계가 파트너십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호소 관계에 머무른 점, 긴급성이 떨어진 이후에는 소통이 안 되는 상황	- 국가인권위원회가이드라인 시급 - 인권침해요소를 주의하며 대처하도록 하는것
인권/어드보커시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 인권단체활동가 집담회를 통한 문제의식 공유 - 행정조치들에대한 대응활동 - 인간의존엄과평등을위한사회적가이드라인발표 - 이슈대응TF팀활동(의료공백실태조사등)	- 대부분의 사업 예산없이 진행 - 인권재단사람119기금(200만원)으로사회적가이드라인발표회진행	- 다양한분야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공동작업 - 국회토론회및기자회견에 시민사회단체연명 - 서울시가확진자동선공개,정보추적관련매뉴얼작업함께진행	- 인권단체활동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함 - 가이드라인을만든의미와 다른사람들이참고하고인용하는것	- 온라인 소통방식의 어려움 - 예산이없어서사업기획불가 - 개별단체나영역의활동이있어서네트워크단위활동참여율이낮았음	- 예산, 시간 필요 - 코로나19생존자실태조사필요(인권, 차별의관점에서) - 공공기관이취약계층을 위해 폐쇄하지 않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인권/어드 보커시	진보네트워크센터	- 코로나19인권대응 네트워크참여활동 - 서울시정보인권회의TF - 코로나19정보인권 관련성명,민원등언론 발표	APC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 "한국 정보인권 보고서" 지원금	-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여러분야단체들과모여토론 - 서울시확진자동선공개방식발제및조례제정논의 - 참여연대,민변등과헌법소원청구함	- 다양한활동가들과 이야기하며 시야를 넓힘 - 확진자동선추적에대해대응하며정부의지침이개선됨 향후제도적개선기대함	- 방역당국에문제제기를하는입장에서국민을위한다는거대한명분에대응하기어려웠음 - 한국의방역모델이세계적으로독특하고,유례가없기때문에참조할모델이없어서문제와해결방안을오롯이활동가들이논의함	- 현행 감염병 예방법의 대안을 만들어 개정 - 정부기관이나지자체와의협력사업으로소통과의견반영시스템정착이필요
인권/어드 보커시	보건의료단체연합	- 코로나방역 및 치료정책제안, 기존정책비판 - 현장의료진,전문가등인터뷰및보고서아카이빙	- 자체 재원	- 연대기구구성과단체참여 - 사회적이슈를이야기할수단과물리적공간이부족함	- 공공의료필요성 및 공감대형성에 기여 - 시민사회,운동진영의인력이주요직책에참여	- 정부를 압박했음에도 예산 증액폭 적음 - 한정적재원과인력으로제한된활동만가능	인력 확충하여 이슈파이팅을 위한 대외협력, 시민 대상 콘텐츠 개발 등 활동 확대
마을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의료진, 노동자 등에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방역물품, 생필품, 식료품으로 구성된 응원꾸러미 제작 및 배포	시민 모금 활동	모금 참여 및 꾸러미 준비를 위한 구매, 제작, 전달 전 과정에서 시민들, 중간지원조직들, 노동조합들이 참여함	- 지역단체/주민들의 협력의 경험 축적 - 시민사회비공개집담회를 통해지역사회네트워크구성 필요성확인	- 재난상황컨트롤타워부재하여도움이필요한사람과봉사자간의연결부재 - 거리두기로논의가어려움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십과 민관거버넌스 필요
마을	전주도시혁신센터	- 지역소비촉진캠페인 - 물품기부캠페인	- 정부보조금 - 시민후원금	- 민간영역 간 의견차 커서협력불발 - 주민들이영상통화플랫폼	시민들 자발적 참여율 높았음	- 코로나 상황의 활동제약 - 활동에 대한 고민	- 소수로 대면할 수 있는 방식 제시 - 법,제도개선필요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 마을계획사업 - 마스크포장봉사활동		어려워해비대면행사어려움			
마을	연수구 코로나19 마을과 함께 이겨내기 모임	- 의료진도시락지원 - 방역물품만들기 - 아동간식지원 - 청소년교육/식사지원	- 인천시민재단 기부금 - 개별후원 - 주민참여예산 제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사업 기획도움 - 인천시민재단재정정리문 제로협력거절	- 마을공동체와의협력 - 기존사업들변경하여진행	- 취약계층을위한사회복지 기관이폐관하면서돌봄서비 스가필요한사람들이사각지 대에놓임 - 체계가없었음	- 재난교육 및 심리 치료 교육 - 약자보호를위해기 관/센터폐쇄금지 - 관의경직된구조와 체계변화와융통성필 요
모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코로나19특별모금 진행 - 방역,위생,취약계층 생계지원,의료지원등 에모금액배분 - 한국민간코로나19 대응활동취합및해외 NGO들에배포 - 코로나19워크숍진 행	특별모금 (기업, 개인,단체)	- 직접배분사업실시하여 협력파트너 확장 - 교류협력영역확장됨 - 워크숍진행에서카카오, 미스크등과교류함 - 시민사회의용어와교류가 낮음	- 모금회가빠르게판단하고 협력을확대하는등변화함 - 다양한주체와협력을경험 - 기부문화확대에따른모금 액증액 - 국제사회배포	- 기관마다 처한상황이 달 라 협의가 어려움 - 한정적재원과인력으로제 한적인활동	- 인력확충필요 - 다양한주체들이협 력하는경험의확대와 이를위한네트워크
모금	지역재단 협의회	- 대구지역지원공동 모금 - 대구지역활동가인	각 지역 재단별 로 자체 모금	대구지역 지원 및 개별 지 역 코로나 지원 동시 진행	조직 차원에서 지원 영역 의 한계와 가능성을 느낌	대구지역 긴급 공동모금은 지원 영역과 수혜자 선정 이 명확하지 않아 모금 과	

분류	단체명	주요 활동	재원조달 방법	협력 여부	활동의 효과	활동의 한계	필요한 후속조치
		터부자료집제작 - 국내민간코로나대응활동영문매거진에 실어해외배포				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모금	부천시희망재단	- 부천지역마스크지원사업 - 취약계층생필품지원사업(아동,청소년) - 노인가정에에어컨 지원 - 대구지역지원공동모금	- 기업모금 - 부천시복지정책과와공동조성기금4800만원 - 시민모금및자체기금 - 총5억	- 영역별협력활발함(자원봉사,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연합회,노인복지관,주민자치회,공공기관등) - 선거법등으로지자체장등이기부촉진소극적 - 공적기관들이휴관하여취약계층지원시파악및선정에 도움을받기어려움	- 부천지역사회에서 지역재단의 역할이 홍보됨 - 지역사회내에서협력네트워크구축됨	- 시민사회지원하고자했으나도움요청하는단체가없었음 - 어드보커시단체혹은사회서비스중간지원조직만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직접지원을하고자함	- 주민자치회와의연계협력필요(공동기금을 통해 지역기금 조성목표) - 지역차원의모금과 기부활성화에지자체장의역할필요,제도적개선필요
국제개발	글로벌케어	- 대구의료지원, 의료진간식지원 - 대구지역소외계층방역물품/식량지원 - 감염병연구리포트작성,해외지원활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료기기지원금10억 - 자체모금2억	- 대구시와의협력 불발 - 의료지원사업에서의료진끼리의갈등	- 중환자실확대운영 - 소외계층식량을기호에맞게지원	- 중환자실설치설득과정, 의료기기구입등어려움 - 정부가지원하기로한후복잡해진절차	- 재정적지원 -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NGO가 취약계층 직접지원하기 어려움 지자체와의연계필요

3. 활동지역별 활동 분석 결과

1) 서울특별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민관협력반을 중심으로

① 민관협력반 구성배경 및 주요내용

초기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감염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한 민간영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위 주체들로 하여금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방역에 적극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공감으로 이어졌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한 정부정책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서울시에서는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올바로 쉬운 언어로 방역대책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방역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닿지 않는 미등록 이주민, 노숙인 등 계층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민관협력반(이하 민관협력반)이 구성되었다.

민관협력반의 구성은 행정영역에서 서울특별시 민주주의위원회 협치담당관, 지원관 등 민간거버넌스의 담당자들, 민간영역에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의 자원봉사 영역, ▲다산인권센터 등의 인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시민넷 등의 풀뿌리 및 마을공동체 영역,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의 어드보커시 연대기구로 이루어졌다. 민관협력반은 코로나 대응시기기 매주 1회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를 통해 주간단위로 마을, 인권, 시민사회, 보건의료 등 각 영역별 대응활동을 공유하였다. 또한, 서울시 방역지침에 대한 요청사항을 내기도 하고, 협력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 민관협력반 자체 토론회, 집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② 주요 활동내용

첫 번째로, 방역 및 정책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간영역 연속간담회를 개최하며, 정책제안에 대한 수렴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현황, 이주민 및 난민을 위한 방역정보 제공과 재난지원금 지원확대, 비영리민간단체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각 민간영역들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하였다.

두 번째로, 민관협력반 차원에서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서울시 안팎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인터뷰 방식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매 주 발간하였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

폐인 사례들을 수집하여 알리고, 온라인을 통한 상시소통, 분야별 소규모 회의 등을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협력형 재난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사례를 아카이빙하고, 재난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토론을 진행하였다.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사례 기록을 위한 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과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쟁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③ 민관협력반의 성과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까지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행정과 민간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한 경험은 전무했다. 하지만, 민관협력반을 구성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은 재난거버넌스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른 취약계층, 미등록이주민 등의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포함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기극복을 민관협력반의 주요 의제로 다루었던 점은 재난극복을 위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확산이 자칫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던 상황을 대응하고, ‘불법체류자’가 ‘미등록이주민’이라는 표현으로 전환되도록 한 과정,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밴드’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른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민관협력반과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시정되고 방역정책에도 반영되었던 점은 재난위기 시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인권감수성에 대하여 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④ 민관협력반의 과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과 재난위기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이후의 재난거버넌스는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보다 섬세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협력반의 논의결과가 행정에 전달되고 실행되는 과정까지의 절차 속에 민관협력반 주체들의 개입력과 권한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재난대응 관련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민간이 어느 시기에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른바, 방역의 골든타임 시기에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재난거버넌스의 협력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작업과 이를 만들기 위한 행정과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과 시민사회 사이의 재난 시 협력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민간영역의 일상적인 재난네트워크 강화를 어떻게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행정차원의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앙(전국) 단위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세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위기도 함께 찾아왔다. 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 4월 28일 전국적 연대체를 꾸릴 준비와 함께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코로나19 시민대책위)’를 발족한다. 시민대책위는 ▲코로나19 사회 경제위기 시기 정부의 차별 없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및 취약 계층 맞춤형 추가지원, ▲코로나19-경제위기 시기, 해고 금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 ▲인권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가방역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 ▲집중피해 집단 실태조사 종합 및 맞춤형지원 실현 운동(사각지대 제로 운동), ▲농수축산물 가격 보장 및 임대료 감면, 강제철거 중단, 인권과 민주주의 확대 등 요구,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의(교섭) 추진, ▲코로나19-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연대, 남북협력 강화,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안 수립 사업 (병행 과제, 대안적 과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약 350여개의 단체와 함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민간체제로써 역할을 자임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민대책위는 자원마련의 한계, 행정과의 협업부재, 네트워크 내의 협업지점 모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제준 공동상황실장

Q1 코로나19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전적으로 참여 단체의 분담금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근데 참여단체들이 다 어려워요. 코로나 여파가 시민사회단체들에도 찾아오는 거죠. 그래도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모았는데, 항상 모자라죠. 상황실 활동가가 7~8명이 있는데, 회의하고 밥도 못 먹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에는 빚 걱정도 하고 있어요.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 행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진행하는데 기초비용들을 적자로 지출하고 있어요. 현수막, 자료집출력비용 등. 토론회를 하면서 발매비를 드릴 형편도 되지 않아요. 돈이 없다보니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외부 재단에 사업 제안서를 내려고도 했는데, 재단 쪽에서는 단위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했거나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위는 한시적인 연대체라 지원 받을 수가 없었어요. 대책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재원이 필요한 곳은 대책위인데, 제약 조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추후에는 시민 모금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코로나 재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

회안전망도, 방역 체계도, 재난 시기에 회부 금지, 이런 것들도 모두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적 사안들을 집대성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시민사회도 있어야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들, 한편으로는 관까지 힘을 모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협의도 하자, 지자체 별로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에서 **정작 시민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자원들 마련은 매우 어려웠고, 특히 전문가 분들도 연구를 하시려면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원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는 정부, 지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재난 시기에 정부, 지자체만 움직여서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도 국민의 마스크 쓰기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부로서 역학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국민들의 여러 어려움들, 개선해야 할 방안들처럼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에는 자원이 없어서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재단이나 관의 예산지출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추후에 다른 종류의 재난이 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재난 시기 민간단체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이 미흡하죠. 지자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재단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사실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잖아요. 민관이 협력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기껏 정부가 추진했던 게 노사정, 노동자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한 건데, **그건 협소한 틀이었어요. 피해 계층이 노동자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 약자, 빈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내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원 조달 문제,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축소해서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열 일 제치고 대구로 간 의료진들! 조금 애물단지처럼 여겨지지만 의료진들, 정부의 기획이나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의료진들도 민간이에요.

Q3 기존 단체에서 활동했던 내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실 게 있으니까요?

코로나 시기에는 대중 활동이 불가능해요. 모이는 게 안 되니까 집회가 안 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시민사회나 진보민중주의는 이런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또, 저희를 뒷받침하는 매체라고 하는 게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같은 온라인 매체였어요. 당시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기에서 방송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구독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완

전혀 새로운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매체들이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보수 세력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활로를 열었어요. 그런데 시민사회나 민중 진영은 유튜브에 접근하지 못하고, 보수 진영은 카톡을 많이 쓰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유튜브를 공유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카톡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거의 민중진영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거든요. 텔레그램은 폐쇄성이 굉장히 강해요. 확정성이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대중활동을 못 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매체에 적응해야 하는데, 온라인 거점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이것을 극복해야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해요.

Q4 활동의 효과와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대책위를 만들었다는 게 성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6가지 방향, 11대 당면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도 그 당시에 뉴딜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죠.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시민사회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방역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여전히 과제로 남은 어려움과 한계점이 있죠.

아쉬운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새로운 영역이라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야 하는데, 그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예컨대 키워커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재난은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우리의 네트워크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큰 한계죠.

두 번째는 있는 네트워크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부의 지원, 재원 마련 이런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하구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 단체들도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니 기존에 고유하게 해왔던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 대응까지 하려다 보니 어려운 거죠. 시민사회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모아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제로 남는 거죠.

3) 대구광역시

2월부터 급부상한 코로나19 대구지역 확산으로 대구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지며 사실상 모든 활동들이 전면 마비되었다. 특히나 초반 청도대남병원에서의 발생한 장애인 집단 감염과 다수의 사망자 발생으로, 장애인권운동단체들은 큰 정신적 타격을 입었다. 또한 대구시민사회는 대구로 쏟아지는 무수한 물품과 지원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대구시민센터와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진보연대,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구시민센터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구지역에 지원되는 물품 및 자원들을 집적했다 필요한 곳에 배포하는 활동을 했다. 이를 위해 상황실을 구성했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시민공유활동지원센터와 협의했다. 그러나 대구시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이미 갖춰져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것에 아쉬움이 컸다.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매뉴얼, 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대구지역에서 이루어진 시민사회 활동들이 일시적 재난구호활동이 아니라 지속적 대비의 의미로 남을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 인터뷰 작업을 진행하고 온라인 매체에 게재했다.

대구4.16연대의 경우 전국 4.16연대 및 가족협의회를 통해 모아진 성금 및 방역 물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노조와 함께 의료진을 위한 식료품,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공공서비스가 중지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개별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했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긴 했으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상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고 평가했다.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의 경우 지자체 방역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자가 격리 및 확진에 대한 지원 활동과 장애인, 활동지원자 대상 구호물품, 식료품 지원 활동을 했다. 또한 장애인 감염병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 제안과 매뉴얼 제안 활동을 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및 복지기관이 휴관하지 않고 역할을 고민하여 재난 비상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 및 기관이 실제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경우 정부의 방역 대책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다국어로 번역한 방역지침을 전달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문제 상담과 의료 상담을 진행했다. 구조적으로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대구 지역 네 개의 단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필요에 따라 중지된 공공서비스를 지적했다. 공공서비스의 부재가 만들어낸 공백이 취약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

다. 특히 취약계층의 긴급지원을 위해 활동한 단체들이 행정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및 체계가 필요하다고 회고했다. 또한 시민사회 차원에서 영역별 내부 소통과 협의는 잘 이루어졌으나, 서로 다른 영역 간 네트워크가 부재함에 따라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마련되진 못했던 한계를 아쉬움으로 꼽았다.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상임이사

Q1 코로나19 대응의 시작은 어떠셨어요?

첫 확진자 나오고 초기 하루 이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센터 내부적으로 산하기구와 법인하고 함께 상황실을 꾸렸어요. 이미 타 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 연합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현 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라인으로 계속 문의가 왔어요. 지역재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대구가 필요한게 뭐냐’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구요. 사실 센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보다,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연대의 움직임 신호가 더 빨리 온 거죠. 그래서 급하게 상황실 꾸렸죠. 시민센터에서 투입된 사람은 저하고, 사무국장, 매니저 3명.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센터장. 시민공유 활동지원센터에서도 센터장. 이렇게 해서 상황실 구성했죠. 근데 무엇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방도로 필요하고,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게 없었어요. 대부분 대구 지역에서 10~30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다 떨어져 있었던 거죠.

대구에 집단 감염 발생하고 초반에는 행정과 방역만 남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중지되어 있었어요. 못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복지시설, 돌봄 시스템 전부 문을 닫았고. 방역당국과 행정당국 제외하면 시민사회만이 살아있던 거죠. 그걸 인지한 후에는 시민사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초반에는 한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원을 집적하는 것, 그리고 외부지원이 어디에 전달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인가를 정보를 파악하는 것, 두 가지를 하기 위해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했죠.

Q2 행정과의 협력 사례를 더 얘기해주세요

지금 여기가 대구 중심가인데 당시 여기에 사람 한 명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그 정도로 이렇게 텅. 완전히 도시가 이런 거였고. 아마 대구시가 정신 차리고 움직일 수 있는 민간영역을 찾아내서 역할을 부여하고 같이 움직였다면 초반에 혼란을 상당 부분 극복을 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안 됨으로써 적어도 한 일주일은 원활한 대응이 안됐죠.

센터는 초기부터 대구시나 방역당국이 잘못하고 있다,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방역당국이 체계를 안정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찾자. 이런 의견이 좀 중심적이었죠. 대구시민센터 자체가 일상적으로

논평을 내거나 어드보커시 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어요.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처리 문제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데. 2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대구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니 문의를 했죠. 지금 가만히 놔둬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 갑자기 2-3천만 원이 막 들어왔어요. 10만 원 단위부터 해서. 그래서 대구시에 신청을 하니까 시청 입장에서는 허가를 못해주겠다. 왜냐 물으니까 공식적으로 기금 받을 수 있는 곳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난구호협회, 대구사회서비스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한다는 것은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가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설득을 하다가 실패하고, 물품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했어요.

그것 또한 초반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물품을 나눠주려면 배달해야 하는데, 대면을 해도 되는지. 뭐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전국에서 오니까 고속도로 중간에서 저쪽에서 5톤 트럭이 오면 우리 쪽에서 5톤 트럭 가지고 가서 휴게소에서 만나서 짐을 옮겨 신고 (...)

Q3 어려웠던 활동이나, 추후 재난이 또 터지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코로나라는 감염병 확산에는, 생활 방역으로 넘어왔을 때 시민 운동적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마스크 쓰기 운동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 외에는 우선적으로 어느 곳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매일 업데이트 하는 작업도 필요하구요. 어느 곳은 한두 번만 지원하면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느 곳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곳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건가, 누가 거기에 전달할 건가. 또 시외에서 오는 자원이 저희들 쪽으로도 오지만 시로 들어오는 자원도 굉장히 많은데 시민사회와 협의가 된다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어느 복지기관, 어느 쪽방 상담소, 어디에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두어야 해요. 행정은 그 체계를 잘 모르니까, 오로지 복지관에 연락해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세요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으니까요. 시민사회와 행정이 체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사회적 지지와 연대라고 할까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해요.

(...)

재난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데, 재난협치를 구축해서 민간의 힘으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재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재난에 따른 2차, 3차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도록이요. 또한 재난 일자리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무엇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필요한지를 파악해내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재난 시기에 공무원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 어느 마을 단위에서 활동하는 목사님이 청년 2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그 마을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시급히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정보를 취합해 달라’ 해서 활동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 개념을 좀 넓혀봐야 하지 않을까.

대구4.16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

Q1 코로나19에 사업은 잘 진행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은 거의 중지된 상황이라 1인 시위, 현수막 걸기, 세월호 6주기 시민대회는 드라이브 스루처럼 세월호를 이슈화하는 여론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죠. 드라이브 스루는 진상 규명 과제와 관련된 현수막을 차량에 붙이고 한 집결지부터 다음 집결지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홍보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 양식이 완전히 변화했어요.

Q2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인 면이 있었나요?

일단 공공 영역의 모든 지원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시민사회가 움직여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대구4.16연대 입장에서는 ‘세월호가족들과 4.16연대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건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지원했던 취약계층 모두에게서 ‘아, 세월호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인식의 확산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시민사회까지 확장하니까 지역에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됐죠.

Q3 코로나19 대응에 아쉬운 면은요?

저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도움을 줘야 할 곳은 너무 많이 눈에 보이는데요. 예로 쪽방 상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 대구에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에 1,000가구가 모여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의 담당인력이 빠져버리니까 이 1,000명이 굶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하다못해 도시락을 사도 1,000개가 필요하고, 라면 한 박스씩을 사도 1,000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분들이 라면만 드실 수는 없으니까 평소처럼 지원이 되게 하려고 하면 자원 확보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원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확장하면 쪽방만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장애, 여성, 아동,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공공 영역이 무너졌을 때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걸 느끼게 됐죠.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 영역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죠.

(...)

그래서 저는 대구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그런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조민제 사무국장

Q1 코로나19 대응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크게 3가지 정도예요. 장애인 자가격리와 확진에 대한 직접 지원 업무, 전체 장애인과 활동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호물품 또는 간편식품 배급하는 역할.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감염병 지원 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과 매뉴얼 같은 것들을 지역에서 만들어서 청와대, 복지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뉴얼은 최근에 복지부에서 발표했어요.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 1판이 발행됐고 저희 제안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건 장애인의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 매뉴얼이 포함이 안 되었어요.

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한 날부터 비상체계로 전환했어요. 4월 중순까지. 2월 18일부터 비상 체계를 운영할 생각은 없었는데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에서 활동가들을 재촉해서 긴급구호 SOS 같은 웹 포스터를 빨리 만들어서 뿌리자고 제안했어요. 당시 대구 사람들 경각심도 별로 높지 않았거든요. 벌써부터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하루 이틀 정도 논의해서 긴급 웹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모든 공공시설들이 휴관 조치 됐잖아요. 프로그램이 다 멈췄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봤자 뭐하겠냐고 하면서 일했어요. 하지만, 민간에 권한이 주어진 건 없었거든요. 단지 행정에서는 휴관조치하고 위생수칙 안내하는 정도였죠.

휴관조치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팀은 팀을 짜서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에게 위생 관리 수칙 안내하면서 장애인들이 격리됐는지, 확진됐는지 현황 파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계속 했어요.

Q2 집단격리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2월 28일에 저희 주택 발달 장애인 한 분이 확진 되요. 26일에 38도 넘게 열이 났어요. 걱정이 돼서 질병(질병관리본부, 현 질병관리청)에 전화하니까 ‘열만 있냐?’ ‘열만 있다.’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없냐?’ ‘없다’ 하니까 ‘그러면 며칠 기다려라’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다리기 어려웠고. 병원 가보자 했는데 일반 내과 같은 데는 열이 높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구청에 막 항의를 해서 검체 인력이 왔어요. 26일 저녁에 와서 검체 채취해갔고. 다행히 그때부터 주택 코디네이터들이 방호복 입고 지원 다 들어가기 시작했고. 혹시 모르니까. 27일쯤 열 떨어지기 시작하고 28일에는 거의 정상 체온 나오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28일

밤에 확진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부서장들이 전부 밤 11시에 모여서 구청, 시청 전화하고, 보건소 전화하고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다 보니까 대충 방법들이 나왔는데. **장애인 확진 케이스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구청 전화 안 받으니까 당직실 전화해서 당장 연락하라고 해서 통화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구청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시청 재난안전과 총괄 부서 전화해서 통화하는데 이 사람도 **‘보건소랑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토스하고. **실랑이를 엄청 했어요.** ‘장애인 분이 확진’이라고, ‘밀접 접촉하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병원 빨리 가야 된다’ 얘기하니까 시 담당 주무관이 약간 헛웃음 지으면서 ‘모자란 병상이 700개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냐’ 해요. 저희는 완전 멘붕이 왔죠. 그게 새벽 두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혼자 잘 기다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혼자 못 있는 분인데 말이죠. 그러면 ‘보건소랑 얘기해봐라’ 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요. ‘시에 물어보니까 들어갈 병상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방호복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에서 받아둔 것’ 하니까, 어떻게 입고 들어가고, 어떻게 폐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제야 확진자 동선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정리해놓고 들어갈 사람 추리는 거죠.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확진자 지원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상근자 네다섯 명이 소독기 들고 소독하면서 들어간 거죠. **발달 장애인 분이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설명 계속 드리고.** 그 주택에 같이 살던 분도 갑자기 새벽 5시에 와 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된다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시고. 또 여러 번 설명해서 이동시키고. 이 작업을 밤새도록 했고. (...)

Q3 다른 단체랑 협력한 것들이 있나요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모르겠고요. 시민단체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정도. 그때 시민단체들은 한 게 없다고 저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사실 위치 조정을 못하신 거죠. 저희는 직접적인 지원 대상자가 있는 단체니까 한 것 같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구호물품 어떻게 전달해줄지 네트워크 짜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도움을 받았고. 거기 말고는 연락 주고받는 데는 없습니다.

시민단체 지향을 가진 마을공동체, 마을모임에서 김밥 싸서 갖다 주시거나 동네 주민들하고 모금해서 간편식품 사서 배달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았어요. 생협도 많았어요. 흔히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들은 뭘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정신이 없어서. 생협, 마을 단위 공동체 조직. 시민공익센터 이쪽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 같아요. 마스크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고.

Q4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매뉴얼이라는 게 사람 목숨 구하라고 만든 건데 실제로 지금 있는 매뉴얼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거든요. 메르스 때 제대로 만들었다면 지금

이 꼬라지 안 났을 건데 말이죠.

대구는 장애인 14명 확진, 공식 통계도 아니에요. 대구시도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음알음 확인한 게 14명, 사망자 1명인데 나중에 보니까 신장장애인²⁾ 쪽에 한 10명 넘게 사망했더라고요.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통계가 없는 상황. 거버넌스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고. (...)

속상한 것은 3월부터 복지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만나고 했는데 제안한 게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고, 진행 정도도 확인이 안 되고. 저희는 사실 현장에서 나름 모든 걸 다 걸고 투입했는데 말이죠. 정부가 이 상황에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게 화가 나요. 대구시는 사실 총체적 난국이라서 평가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고.

민간에서는 재난재해에 관련된 게 복지서비스 기관들에 국한될 수 있긴 한데 좀 비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공공에서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모자랄 거고. 민간이 뭔가를 해줘야 될 건데 이번에 느낀 게 특히 장애인 쪽은 다 휴관, 중단 이런 조치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면 민간에서 뭘 할 거냐’에 대한 역할을 하나도 안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찾아서 하는데 미친 듯이 바쁘고 다른 데 노는 데도 많았거든요. 사무실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는 장애인 복지시설 너무 많았어요. 그것도 화나더라고요. 민간기관이 비상대응체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도 뭔가 주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강제 동원 형태로 되면 안 되겠지만.

서울은 그것 때문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던데.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을 주민센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업무에 다 투입해서 ‘복지사들이 공무원들 시다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요. 물론 안 좋은 사례도 있지만 그런 ‘역할 주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

Q5 본인 상태는 어떠세요?

코로나블루³⁾는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공황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울증으로 온 장애인 활동가들도 많고. 재난 상황 상 본인이 뭘 못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나는 아무 쓸모 없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제일 힘든 건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죠. 뭐. 특히나 발달 장애인 영역 쪽은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족한테 어마어마하게 전가되는. 살인사건 나잖아요. 발달 장애인 가족. 저는 이 정도 밖에 안 나는 게 사실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2) 신장장애인 : 만성신부전을 가진 환자로 보존적인 치료(식사나 약물치료)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투석(혈액투석,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사람 또는 콩팥이식을 한 사람

3) 코로나블루 :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겪는 우울감 또는 불안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요. 트라우마 상태인거 같아요. 확실히 양극단을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바닥도 보고. 반대로, 시민들한테 지나나 응원도 받고. ‘아, 이런 힘으로 사람들이 버티는구나’ 좀 느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장애인 운동판에 있으면 사실 시민들의 지지는 별로 느낄 일이 없거든요. 맨날 옥만 먹지. 도로 점거한다고 옥먹고, 뭐 한다고 옥먹고. 그러다가 전방위적으로 기운을 받으니까 좀 놀라기는 했어요. 하루에 전화가 많이 올 때는 언론사에서 15~20통. 시민들 후원 전화가 20~30통 계속 왔었거든요. 매일. (...)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김용철 노동상담소장

Q1 코로나19 대응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당시 대구지역 성서공단은, 2월 말 신천지 발 코로나 확산이 심각했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가짜뉴스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공포감이 극심했습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고 회사가 통제된 기숙사에서 밤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모든 문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할 때 지급받은 방진 마스크를 빨아서 쓰거나 겨울에 사용하던 면 마스크를 두세 겹씩 겹쳐 쓰고 비닐장갑과 라텍스 장갑을 이중으로 끼고서야 겨우 인근 마트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3월부터 시작한 정부의 공적 마스크 보급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요일별로 구매하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조차 일하느라 낮 시간에 약국 가서 줄 서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는 약국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구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

그간 성서공단노동조합(이하 성서공단노조)은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위해 주로 노동권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 생존의 위기가 심각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긴급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성서공단노조에는 8개국의 노동자 커뮤니티가 있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와 방역물품들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상담을 통해 관계 맺은 이주민들을 통해 재난 관련 정보를 11개 국어로 통·번역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의 각국 상점, 쉼터, 종교기관들과도 긴급 위기라는 인식의 연장선에서 연결과 협력이 잘 이뤄졌습니다.

Q2 아쉬운 점 혹은 한계점이 있다면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국어로 된 방역지침 홍보는 이주단체들의 몫이기 이전에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필요에 의해 초대되거나 유입된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서공단노조가 활동한 범위는 아주 작은 지역에 국한됩니다. 즉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단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지원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확충이 필요합니다. 3월, 미등록이주노동자 의료지원 병원인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됨으로써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지원받을 곳이 막혀버렸습니다. 제2의 대구의료원을 건설하거나, 코로나에 대한 긴급 대응을 하더라도 공공의료 차원에서 코로나에 대한 긴급 대응을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우선 마련했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소가 코로나 업무로 전담하게 되면서 그동안 진행되던 미등록 이주 영유아 무료접종도 지원 서비스 실종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있어야 고통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Q3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속하고 계신 활동이 있나요?

심각했던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대구지역 이주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건강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아프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증 질환에 병원비 부담으로 손도 쓰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대구지역에 제2의 대구의료원 건설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미등록 자녀들의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 전담사업으로 위상을 바꾼 후에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뉴노멀이 되어 있습니다.

4. 활동영역별 활동 분석 결과

1)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 활동에 246개 센터, 76만 명이 참여했다고 알렸다. 세부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손세정제 만들어 사용하기, 다중이용시설 내 향균필름 부착 캠페인을 비롯하여 마스크 제작 및 나눔, 방역물품과 식료품 지원, 심리방역 응원물품 전달, 방역봉사 및 열화상 카메라 운영 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에 매뉴얼이 없어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간지원조직, 봉사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연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감염 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이 없는 점에 대해 시급히 대응해야할 점이라고 손꼽았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자원봉사 현장에 지침과 뉴스레터를 보내 빠른 정보를 제공했으며 마스크 양보 캠페인, 지역농산물 소비 운동, 자가격리자 및 소외계층에 식료품 지원, 방역 소독 봉사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사랑의 열매, 농협, 이마트 등 모금조직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재난 시 마을 단위로 현장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방역체계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마을 조직, 사회적경제 영역과 초기부터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마스크 나눔 캠페인, 드라이브 스루 의료자원봉사자 모집, 재난 정보화 사업 활동 등을 진행했다. 자원봉사 수요가 넘쳐 수요처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평소에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미리 미리 파악해두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감염 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와 책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자원봉사 영역의 경우 공통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심리적 방역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이로 인해 사각지대에 도움이 손길이 닿지 못하는 현상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내에 다양한 영역들을 잇는 재난대응 네트워크가 있어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Q1 코로나19 대응활동에 특이점은 없으셨나요?

보험의 경우도 상해와 질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이러스 감염은 질병인 거예요, 상해가 아니고 질병인 거예요. 평가 기준, 판단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활동은 토닥토닥 힘내자 대한민국, 이게 의료진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한 거죠. 중앙센터랑 전국 센터들이 같이 했던 거고요. 대구를 지원하러 가지는 못했어요. 초기에 마스크 하나 구하기도 정말 힘들 때, 경기도 센터에서 대구로 마스크 한 트럭을 보내더라고요. 몇 톤짜리로.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저희 시민들 챙길 양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주시랑 안동시가 자매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응원 꾸러미를 만들고, 희망 씨앗을 껍에다 꽂아서 키울 수 있도록 씨앗 키트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바질이 희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질 씨앗과 힘내라는 문구를 달아서 만들었죠. (...)

센터에 제빵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빵 봉사자들이 와서 빵을 만들어서 공무원분들, 의료진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했죠. 여러 가지 키트를 만들어서 직접 신고 안동으로 가서 시장님께 전달을 했죠.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슬기로운 봉사생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곧 전주에 마음 치유 봉사단이 생기는데요, 이걸 원예 치료에 관련된 특화반으로 구성된 거예요. (...)

원예 시장이 또 침체되어 있었으니까, 그것도 팔아주려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봉사활동이라고, SNS에 홍보하는 거예요. 경제적 방역 활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상품 살리기, 착한 소비 촉진 활동, 골목골목 확진자 동선에 노출된 식당들이나 어려워진 식당들 찾아가면서 SNS로 계속 홍보를 했죠. 그리고 지역사랑 5% 캠페인은 중앙센터랑 같이 했던 건데, 급여의 5%를 지역 상품권을 사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제철 밀반찬 나눔은 공공 급식 납품 농산물 구입을 해서 반찬으로 만들었죠. 이걸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달을 했어요.

Q2 행정과의 협업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전주시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체 센터로 가지고 있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예요. 현장 자원봉사팀이 전국 최초로 생겼어요. 행정 담당 부서 자체가 전국 최초였고요. 그 팀이 센터에 출근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센터에도 계장급 한 명이 또 파견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팀이 현장 센터 사무실에 나와 있으니 유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어서

가 아니라, 사실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자원봉사 과가 97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렇게 시작되어서 센터는 작년이 20주년이었어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

Q1 코로나19 대응활동 어떠셨어요?

저희는 재난 대응하는 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산불이 나도, 홍수가 와도,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재난에 자원봉사 대응을 하는 조직이니까. 감염병 바이러스라는 상황에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할 것인가’ 논의하는 정책 포럼 등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감염병 시대의 자원봉사 활동 가이드라인이 올해 안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 백서가 제작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재난 시 자원봉사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갖춰내야 할지. 그야말로 마을 단위의 시민 중심의 방역 체계. 저희는 보통 커뮤니티 방역 체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추는데 자원봉사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나 주민운동 쪽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사전 학습과 토론, 훈련을 기반으로 한 체계를 갖추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그쪽 영역에서도 좀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2 아쉬운 점은요?

아쉬운 것은 사전에 마을 조직, 평생학습조직,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등의 조직들. 자원봉사 조직들까지 전부 초기부터 좀 모여서 각자의 활동 성과나 활동 방향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활동계획을 좀 같이 짜고. 그러면서 분담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대응이 어떤지 서로 현황들을 좀 공유하는 것. 그게 좀 핵심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초기부터 공동 대응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너무 각개 전투, 각개 약진을 했던 것 같아 가지고. 뭐 당시에는 매일매일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렇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라면 이제 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공동 대응했으면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원민 차장

Q1 코로나19 대응활동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한계점이 있다면요?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저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성찰이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서 때마다 잘 연결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상반기에 15일간 무료급식소에 도시락 40만 개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무료급식소들 열두 곳 정도를 네트워킹 했어요. 정말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소에 어디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다보니 도시락이 쌓였을 때 ‘어디다 줘야 하지’ 하고 찾아야 했어요. 인터넷 검색하고 주변에 묻고 수소문해가면서 찾았는데 이런 작업들이 미리 되어 있었다면,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알 수 있었다면 훨씬 원활했겠죠.

더불어 급식소 담당자 분들 만났을 때 느꼈던 건, 급식소 운영을 오래 했지만 담당자들끼리 네트워크가 없었던 거예요. 급식소에 갑자기 물품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들어오면 처리가 곤란할 때가 생기는데(생필품은 보관하면 되지만 식료품은 상하니까) ‘다른 급식소에 보내서 나누면 되겠다’고 대화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담당자 분들끼리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겠다 싶었죠.

(...)

자원봉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존에는 상해보험 지원이 가능해서 자원봉사 활동 중에 다치면 보험 처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심리적, 물리적인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해가 아니고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부터 센터 직원들 단체로 멘붕이 왔어요. 어느 시점에 투입해야 하느냐, 아니 투입할 수 있느냐, 아니 투입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행정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활동하지 마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는 도움이 못 가는 형편이에요. 복지기관도 문 못 열고. 청소년 시설 수련관이라든가 문화관 이런 곳들도 다 공식적으로 휴관이고 (...)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같은, 책임 소지를 누구에게 돌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들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학교, 자원봉사센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가 모이는 거죠. 우리 최소한의 이리이러한 안전수칙들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활동을 시작하자, 지침 만들고 합의 이루고,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같이 책임지자’해서,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연대체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해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에 대해 서로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서로가 위험상황에 있다고 판단될 때 서로 ‘STOP’을 외칠 수 있는 체계와 합의가 만들어져야, 활동들이 다시 지속되고 사각지대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민간단체들끼리 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호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서로 책임지자는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Q2 시민사회의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어떻게?

어렵겠지만 시도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 주도 하에 필요한 네트

워크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를 누가 맞느냐에 따라 관점도 접근방식도 다르잖아요. 연장선에서 보면 민간에서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만들고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일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 나은 보완책이랄지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못 찾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행정과 민간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그러려면 민간단체들끼리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재난상황이 생기면 각자가 각자 해야 할 과업들이 너무 과다하고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긴급성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연대해서 같이 살아남아야한다’라는 개념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각자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각자의 목소리를 연대하고 조율하는 작업들이 쉽지 않은 (...)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각자가 위급했고 각자의 이슈가 많았을 거예요. 각자가 각자대로 대응하고 나서 연대는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재난대응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해요. 각자의 문제들이 많고 버거울 수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고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2)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시장원리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따뜻한 사회’, ‘나눔/공유 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크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 영역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국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울산나비문고, 천안사회적경제연대를 찾아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경우 팬데믹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모금, 조사 통계, 사회적 소비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빠르게 대응했다. 자체 모금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임대료 지원 사업과 사회적경제 상생 마켓을 개최했다. 또한 회원기업들이 모여 ‘고용 조정 제로 선언’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체협력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지역, 업종, 분야별 소통의 틀이 미비한 점을 한계로 꼽았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인들의 공제회,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이 꾸려져야 하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 마련에 대해 힘써야 한다고 평가했다.

천안사회적경제연대의 경우 취약계층에 방역물품 지원 활동과 지역 내 농산물 상호구매 활동을 진행했으며 더불어 수익금 일부를 협동자조기금으로 기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상호구매 운동 과정에서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활동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시스템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근본적인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의 경우 노사 대표자들이 모여 ‘NO 고용조정, YES 함께살림’ 선언을 공동발표 했으며 자조기금으로 도움이 시급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출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서점, 출판, 인쇄 업체들이 모여 학교와 도서관이 닫아 책을 빌려볼 수 없는 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해 책드림 기부활동을 진행했다. 기자회견과 기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긍정적이었으나 아직 구조가 열악하여 실무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실행이 더딘 점을 한계로 꼽았다. 꼭 필요한 후속조치로 당사자 조직들의 협의체 마련을 꼽았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소규모 사회적기업이더라도 노동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우 공통적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한 고용조정 제로 선언과 어려울 때 긴급하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기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활동들을 진행했다. 이를 위한 기업들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고 아직 시작 단계인 곳도 있었으나 기본법 입법 마련을 위해서, 안전망과 자체기금 마련을 위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해서, 각각의 이슈로 행정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Q1 코로나19 이후를 어떻게 상상하세요?

좁아지는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계속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지역 좌담회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제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IMF나 이럴 때 개인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이 개인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일정 정도 효과도 봤죠. 이게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적 일자리’라고 했는데 거칠게 표현하면, ‘사회적 일자리 시즌2’가 필요한데 이거는 커뮤니티 단위로 그 커뮤니티에 필요한 문제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가 모였고. 여러 단체가 모이는 상황에서 그 일자리가 필요하면 그 커뮤니티에 일자리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노동자가 이 기업이 어려워서 일을 더 이상 못할 때 그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이 이 사람을 고용하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고용의 유연성이지만 커뮤니티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도입이 필요하고. 그런 방식의 우리 운영도 필요하다 해서 초기에 대응본부 꾸렸을 때 그것에 대한 제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화. 이런 쪽은 다 어려웠잖아요. 고용조정으로 선언할 때도 사실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최선을 다 해서 고용을 유지하려고 애는 썼지만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기업들이 연계 고용하는 방안들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Q2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때 어땠나요?

2월 말 정도에 심상치 않다 판단을 했고. 초동모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완전히 전국 단위 범사회적 경제에 대응 본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응 본부를 연대회의가 제안해서 꾸리게 됐고. 초기에는 현황 파악을 하면서 정책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 통계반이라고 하는 반을 꾸렸고. 2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십시일반 해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모금이었던 거고. 3번째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보니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누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한 것들로 봤을 때 사회적 소비. 우리 내부에 호혜 시장을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을 좀 확보하면서 장기적인 대안을 좀 모색해보자 이어서 3개 반으로 나뉘어서 대응을 좀 했고. 초기에는 조사 통계반이 중심이 좀 됐죠. (...)

자체적으로 모금한 건 한 1억 2천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코로나 대응 위기 자금이 있었던 것에 일부를 매칭해주셨고. 한 3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고용조정 제로 선언’을 했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제일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이 임대료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임대료 지원 사업을 진행을 좀 했고, 그것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일단락 정리를 좀 하고. (...)

천안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장동순 집행위원장

Q1 코로나19 대응에 지원이나 외부협력이 있었나요?

A. 천안시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실질적 거버넌스는 너무 안 되니까 민간 쪽에서 실무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줄 것을 육성위에 요청해서 된 거죠. 처음엔 많이 싸웠는데 ‘행정에서 어려운 걸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입장을 많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힘든 것, 성과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고받는 걸 계속 했더니, 신뢰관계가 굉장히 많이 쌓였죠. 저희가 센터 설립 준비 때 서울에 광진, 노원, 원주처럼 소위 사회적 경제 쪽에서 말하면 잘 된다는, 민간들이 되게 잘 움직인다는 곳들을 다 다녀봤거든요. 3군데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관계.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으니 광진의 박용수 센터장이 그러더라고요. “안 움직이면서 회의만 하니까 사람들이 관계가 안 만들어지지. 워크숍 회의 100번 해 봐. 안 돼. 3번만 찾아가. 그러면 회의 때 다 와.” 우리가 자기 곁을 내주는 것을 연대라고 하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려면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핵심은 사회적 자본 형성이잖아요. 상호 간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아, 이 사람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힘든 것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관계성이요. 회의 때 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오피셜한 얘기들을 하고 가잖아요.

Q2 코로나19대응, 계속할 수 있을까요?

A. 제일 고민 중 하나는 당연히 재생산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은 관계를 만든 거죠. 천안사회적경제연대 꾸리는 과정에서 관계를 만들고 핵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해외 연수도 갔다 왔어요. 일부러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어요. 연구 모임회도 같이 했었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운영위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모든 정책 생산 과정에서 제가 더 제안을 해서 내용들은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습모임을 계속 꾸리죠, 지금은.

Q1 어떻게 코로나19 대응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A. 사회적 기업들 일부하고 연대해서 (교보문고도 힘을 보태줬는데) 찾아가는 책드림 서비스라는 걸 했어요. 찾아가서 책을 나눠드리는 활동을 나비문고가 계속 해왔어요.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도서를 기증하고 이런 걸 원래부터 매일 해왔거든요. 그런데 1차 대유행 때 학교도 도서관도 다 닫았잖아요. 우리가 트럭이 있으니까 싣고 가서, 아파트에 가서 일정하게 거리 유지하도록 하고, 통제 하고 이러면서 홍보를 했죠. 오면 한 가구당 2-3권씩 책을 나눠주고, 한 5-6개 기업이 협력해서 했어요. 교보문고는 책을 주고, 다른 사회적 기업들은 일손을 보태고, 포스터 같은 것은 인쇄 영역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결합하고, 나비문고도 새책, 헌책,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래 가지고, 책을 찾아가서 기부해주는 활동을 한 거죠. (...)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처가 필요하잖아요. 서로 돕는 문화가 필요하고, 그걸 만들어보려고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제안해서 4월에 한 80개 이상 기업 대표자가 참여하는 추진위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죠.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건데 ‘NO 고용조정, YES 함께살림’이라고. 전국적으로 다 일자리의 불안 이런 것들을 느꼈던 시기였고, 이래서 21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하는 노사 대표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죠.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위기를 방어하는 측면도 있고, 사용자들한테도 일정하게 또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번 했어요. 지역사회에도 조그만 기업들도 이렇게 서로 일자리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

사회적경제 조직들 어려움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다 돈이거든요. 그게 전부 아니지만, 어쨌든 위기 조직에 긴급하게 좀 대출을 해주자.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 (재단법인 밴드 파운데이션의 사업으로 협약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지역에서 ‘울산 사회적경제 자조기금’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사회적경제 조직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고, 밴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상하게 여겨서 저희가 “월 부금을 한 천만 원 정도 조직하면 2억 4천만 원 정도를 매칭을 해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천만 원씩 24개 조직한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땐 100만원이 없어도 부도가 나거든요. 작은 조직한테는 천만 원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3.75%가 이자인데 2%는 추진위에서 좀 형편이 나은 데가 기부해서, 한 700-800만원 기부되어 있어요. 그거는 돈을 누군가가 이후에 빌려 쓰면 그 이자를 보존해주는데 쓰는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이제 좀 뜻 깊은 그런 행위이죠.

Q2 아쉬운 점,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인내 자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주고 기다리는 거죠. 은행도 비즈니스 조직이기 때문에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신용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크면. 그러면 그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 육성하려고 하면 싹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긴 시간 기다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어요. 밴드 파운데이션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이 의회나 지방정부 같은 공적 단위가 고민하게 만드는 촉진제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울산시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걸 자기 과업으로 가지고 있어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라 하면 운영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라고 할까. 그런 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힘이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아쉽죠. 알 만한 사람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경우, 얘기하면 그걸 잘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서 또 협력이 안 일어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답답하죠.

3) 인권/어드보커시

어드보커시(Advocacy)는 생각, 노선, 신념 등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옹호이다.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위기 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했다. 자세한 활동내용들을 듣고자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의 경우 방역지침 및 뉴스를 번역하여 전달하는 활동과 정부의 이주민 배제 정책 대응 활동, 난민 관련 언론 대응 활동을 진행했다. 이주민, 난민들의 심리적 공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 정책에 대응한 활동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중앙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없어 초기 단계에서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에 세부 내용을 반영할 수 없었던 점과 난민 당사자 커뮤니티와의 접점이 부족해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모으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경우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주민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방역물품 및 식료품, 생필품 지원 활동과 더불어 이주민 배제 정책에 대한 인권위 진정과 방역지침과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를 번역해서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전국적으로 이주민 관련 네트워크 80여개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고 서류작업을 도와 이주민 당사자가 긴급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언론의 이주민 혐오보도 문제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문제에 대한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경우 성소수자의 안전한 검진을 위해 홍보 및 방역 당국 모니터링, 대응 활동을 진행했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 대상 긴급 상담 활동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며 지자체와 처음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해봤다는 점과 언론 혐오보도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공포를 느끼는 성소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자체와의 네트워크가 파트너십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호소 창구로만 머무른 점, 방역의 긴급성이 떨어진 이후에는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한계 및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의 경우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팬데믹 상황을 경유하며 느낀 문제의식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방역 당국의 행정 조치에 대해 대응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발표했다.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대응했다는 점과 함께 매뉴얼을 완성했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공공기관이 방역을 이유로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중지시켜 놓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더불어 코로나19 생존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인권 감수성, 차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경우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 참여하며 방역 당국의 지침 및 행정 조치에 관련해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한 점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된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국민을 위한다는 거대한 명분을 가진 방역당국의 행정 조치에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한국의 방역모델이 국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기 때문에 참조할 모델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소통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과제로 꼽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정책의 문제 비판과 대안 제시 활동, 현장 의료진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보고서 제작 및 아카이빙 활동을 진행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정부에 재차 문제 제기했음에도 공공의료에 관한 예산 증액 폭이 적은 점과 한정된 자원과 인력 때문에 활동 영역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아쉬운 점 및 한계로 꼽았다. 앞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소통 및 시민 대상 콘텐츠 개발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인권/어드보커시 영역의 경우 공통적으로 방역당국이 배제한 소수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제도권 안에 포함되어 함께 보호 받도록 하는 활동에 매진했으며 발 빠르게 의제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대응했다. 정부 정책에 사각지대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없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으며 특히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점이라 꼽았다. 또한 지자체, 방역당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이슈에 따라 사안의 긴급성이 있을 때는 관련 단체와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가 긴급성이 사라지자마자 소통 창구를 닫는 형태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서로 협의하는 구조의 정착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

김영아 대표

Q1 코로나19 대응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정책이 바뀌어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역 보험비도 내야만 하는 등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출입국 연장을 하는 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가입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어요. 올해도 건강검진 행사를 하고, 건강 뉴스를 배포하고, 새로 도입된 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강검진 행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1월 24일에 바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당일에 배포했었는데, 그게 저희의 코로나 대응 활동의 시작이었죠.

Q2 기억에 남는 코로나19 대응활동이 있나요?

2월 말이 되면 이주민 관련한 정부와 공공서비스가 다 멈춰요. 심지어 문을 닫고, 무료 진료소도 문을 닫아요. 그리고 2월 말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유치원들이 문을 닫거든요. 난민들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한부모 난민가정의 경우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주르륵 나왔어요. 난민들 중에서도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대거로 잃었죠.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으면 당장 생계부터 문제인 거예요.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거죠, 2월부터. 또, 의료보험이 없는 난민들의 경우, 병원을 가야 하는데, 무료 진료소가 문을 닫으면서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어요.

(...)

3월 5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3월 5일 밤에 공적 마스크 배분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죠. 그전에는 모두의 재난이었는데, 이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분리가 되면서 방역 아이템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3월 5일부터는 저희단체가 마스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는 정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 마스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어요. 당장 난민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지역에 별로 없으니까 난감했어요. 대구에 연락을 하고, 수소문 해서 어디에 연락하고... 마스크가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는 공적 마스크를 난민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공적인 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

이주민 관련단체는 이주민인권 옹호 활동만 하시는 풀뿌리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단체들 중 다수는 구호품을 받을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에 등록이 돼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큰 단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다량의 물자를 받아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주민(난민) 관련 단체들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수한 시민단체에 서는요. 영세한 사업장인거죠. 영세한 사업장들은 구호물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주민 단체 중 여성인권단체들은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와 이미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기금을 만들어 생계비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동포, 난민,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관련 단체를 불러 간담회를 했어요. 지원의 기준을 정해서 가장 취약계층을 다섯가지 뽑아서 전국 220개 가정에 생계비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Q3 활동의 부정적, 긍정적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A. 정책 수정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이유? 이유가 뭘까요. 내셔널리즘, 국뽕? 저는 올해 국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서울시 비서실에 이 말을 했거든요. 어느 도시보다도 서울시에서 먼저 공표를 해야 한다고요. 이주민도 서울시민이다,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평상시에 민관 거버넌스가 없었던 것도 문제였어요. 이주민 단위들끼리 네트워크는 있고, 언론은 꽤나 저희들의 목소리를 잘 받아줬어요. 그런데 직접 중앙정부에 닿을 손이 없는 거죠. 논의들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서울시랑도 소통이 없고요. 서울시는 글로벌센터와만 이야기를 했었고. 난민은 더 작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청와대나 서울시와 직통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이 없다는 게. 서로 아직 신뢰 관계가 없는 거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교육팀장

Q1 '이주민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알려주세요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적십자 병원에서 이주민 지원하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종료되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특히 보건소나 적십자 병원은 이주민들 지원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당장 그곳들이 코로나 지정 병원으로 바뀌니까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부재하게 되고. (...)

위급 상황일 때 이제 방역을 위해서 조심하는 건 좋은데 다 닫아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마친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 지원하는 공공시설들이 위기 상황에 닫는 것으로만 대응하는 건 문제적이지 않나. 대안들을 마련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

지원시설에서 미등록 이주여성들에 대한 의료비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외국인이니깐. 의료비가 너무 높으니까. 시설에서는 거기 온 애들부터 이주여성들을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사용되는 의료비용이 100만원이면 보통 의료보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4-5천원에서 만원 내외에 돈이 들어서 그 예산안으로 충분한데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10배 이상 비싸잖아요. 그러면 의료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미등록 이주민 한 사람 의료 지원하고 나면 예산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지금 없어요. 실제로는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추가 비용도 드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들도. (...)

코로나 초기에 대림동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침도 함부로 뱉는다면 언론에서 보도했잖아요. 초기에는 누구나 다 그러고 있었어요. 대림동만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언론에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겪었던

차별이나 멸시 이런 감정들이 그냥 일상적인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방역을 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집단감염 없었다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애써서 방역을 했는지는 언론에서 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찍히기는 쉬운데 그걸 극복하려는 그 사람들의 노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고. (...)

이주민.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이주민 관련된 회의체계가 많아요.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도 있고, 글로벌센터들도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주 관련된 단체들하고 같이 MOU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 한 마디쯤 할 만한데 한 번도 안했어요. 정책들이 한국인 위주로 특특 분절 되어서 나오니까 이주민을 위한 정책,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쉽다는 얘기도 나왔고.

Q2 코로나19 대응활동 진행하면서 아쉬웠거나 한계를 느꼈던 점은 무엇일까요?

배제가 방역을 돕지 않아요. 코로나는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보호 조치 안에 있어야 그 방역이 전체적인 방역이 되는 거지 이주민을 다 배제한다고 해서 방역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됐는데 배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고립되게 만드는 게 실제로는 방역의 구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

현장에서 지원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혼 이주자나 이주 노동자,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실제로 안전망들을 좀 확보해줬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각지대가 아주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도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정책들만 내놓으니까 시민단체가 구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역할에 따른 시스템과 인력이 있는 건데) 상근자 3명 있는 단체에서 6억을 가지고 1800여명 구호 활동을 했으니까. (...)

구호 활동으로 근본적인 구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내고 그 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미등록자나 무국적 같은 부분들은 시민단체들하고 간담회 해서 현장 이야기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나가도 좋잖아요. 사각지대를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소위 K방역의 선구적인 모델이지 않나 싶어요. 국가적 안전망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좀 더 취약한 사각지대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요.

(...)

이번 활동을 계기로 다양한 영역들과 연결이 되어서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초기에 정부 및 지자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연결지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재난 초기 단계에서부터 논의 가능한 구조가 있었다면 정책이 나오기 전에 의견도 보태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결정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싶어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나영정 활동가

Q1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흥미로운 건 이번에 방역 당국이 미등록 이주민이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 차별을 해선 안 되고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익명 검사를 도입하고 이런 발 빠른 조치도 놀랐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5월 13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말 지나자마자 월요일에 박원순 시장이 익명 검사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11일에 젠더특보가 회의를 소집해서 인권담당관, 질병관리과, 시민건강국, 보건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이 다 회의를 와서 우리와 함께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거나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구나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회의하면서 인권 침해 관련해서는 인권담당관에서 계속 핫라인으로 소통을 하자, 검진 관련해서는 질병관리과와 긴밀하게 소통하자, 검진 홍보 관련해서는 시민소통담당과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됐고 특히 어플 홍보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대책본부 공동명의로 진행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쓴 건 최초일 거예요. 성소수자로서.

Q2 또 다른 점은요?

서울시 시장이나 고위급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좀 신중하고 섬세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협조를 잘 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겠다, 신천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했고,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것들이 있고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와 닿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진 홍보에 협조하자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 밖이었던 게, 시민소통담당관이 예산을 마련할 테니 어떻게든 하자, 서울시 명의를 넣어도 좋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했었어요. 따로 미팅을 잡아서 예산 규모, 사업 범위, 시기 같은 것들 협의했고, 어쨌든 단체들이 비영리라 직접 계약은 못하고 타 법인을 통해 우회해서 받았긴 해서 예산 흐름에 공식적으로는 안 남았을 수 있지만 홍보물에는 공동명의로 사업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어플 본사들이 연락을 늦게 받아 실무 차원에서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했죠. 모든 어플에 홍보를 해보자고 전투적으로 시작했는데 본사가 일본에 있다거나 미국에 있다거나 해서 광고 게시하고 싶다고 번역해서 메일 보내고, 밤낮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해서

좋은 경험이 됐어요. 광고를 통해서 ‘아 단체나 시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강압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검진을 같이 받자’ 이런 메시지였고. ‘인권 침해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같이 하겠다’는 메시지였으니까.

Q3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3주간 매일 만나서 상황실 운영하면서 농성하는 기분으로 (퀴어들이 이렇게 오전 회의를 매일 하다니 스스로도 놀라면서) 했어요. 근데 좋았던 건 매일 만나니까 좋다 그리고 단기간에 바뀌는 것들이 보이니까.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고 싸울 대상이 있고 하다 보니, 오히려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서로.

항상 혐오세력에 대한 대응, 그들이 십만 모이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모여도 무산되면 어떡하지 하는 피로감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자체랑 협력도 하고 성과도 만들고 커뮤니티에서 너희가 이런 거 하는지 처음 알았다는 평가도 듣고 압축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패배적이고 힘들기만 했던 과거의 활동들과는 달라서. 일 년에 2주 정도는 일부러라도 농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도 나누고. 함께 뭘 이겨낸다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무지개행동 집행위와 HIV네트워크 활동가 몇몇이 결합해서 만든 상황실이다 보니 이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보게 된 측면에서 좋았고. 상황실에 결합한 주체들도 아 우리 이번에 수고했고 잘했다 하는 경험들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랄라 활동가

Q1 코로나19 대응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3월 초에 첫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가 2월 말에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확산되던 때였는데 3월 초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인권단체들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안을 했었고.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뭔가 해보자고 했는데 온라인에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첫 모임을 3월 11일에 하게 됐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어떠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행정 지침에 대한 문제들이나 집회시위가 차단되는 문제들. 그리고 격리 및 강제 조치에 대한 것, 집합금지 등 다양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고. 또 각 영역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집단 코호트 격리 같은 문제. 그리고 이주 이민, 소수자들의 차별의 문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굉장히 한 3-4차례씩 진행을 했어요.

Q2 협력은 있었나요?

우선 인권단체들끼리 주로 했었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마음이 맞는 것도 있었고. 사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한 적은 되게 많았죠. 4.16이든 뭐가 하나의 단일한 사건에 이거 인권의 문제로서 같이 해결하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단일한 사건이긴 하지만 개별 인권 운동이 해왔던 자기 영역들의 이야기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이 하게 되는 또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던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운동은 어떤 고민을 했고, 성소수자 운동은 어떤 고민을 했고. 인권의 전반적인 부분은 어떤 문제였고. 기업과 인권, 언론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공동의 시각을 가질 것인가를 토론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Q3 특별하게 느낀점이 있었나요?

공공성이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문 닫은 게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특히 노인, 어린이들.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또 다른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을 먼저 폐쇄했는데 학교가 멈추니까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었던 거고. 공공기관이 멈추면서 그 공공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혹은 또 다른 감염의 경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제일 먼저 공공기관을 문 닫는데 유사시설들은 다 문 열고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옳을까, 맞을까. 그런데 옳고, 맞고는 둘째치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실 먼저 책임지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공공기관이 먼저 문을 닫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희우 활동가

Q1 기존에 하시던 활동과 코로나19대응활동이 다른 점이 있나요?

연계라면 연계인 부분이죠. 결국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인권 문제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잖아요.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것이긴 한데, 이게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개인정보보

호원칙 같은 게 계속 적용이 돼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활동을 해온 맥락에서 새로운 이슈라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K-방역이라는 게 결국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고, 심지어 동선 공개라는 시스템이 나오면서 정보 인권이랑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활동하게 된 거고요. 진보넷이 원래 정보 인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나 법령 개선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지침이나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Q2 정책 관련하여 정부와의 협의는 있었나요?

꼭 재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부와의 소통이 어떠했는지, 정부 부처 자체가 어떤 자세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와도 연계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해서만 했던 게 아니라 여러 정부 이슈에 대해서 의견서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때로는 같이 미팅도 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가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이런 민간협의체를 꾸려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하죠. 사실 시민사회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사실은 한 사회, 혹은 이 정부가 5년마다 바뀌니까 그 정부의 소통의 태도나 문화가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 물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보겠다고 그런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꾸리기는 하지만, 사실 정부가 바뀐다고 관료들의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새로운 협의회들이 꾸려지기는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토론하려고 하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들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여전히 힘들죠.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Q1 코로나19에 어떤 대응 활동들을 하셨는지 알려 주세요

보건의료단체로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방역 대응과 치료 대응으로 나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역 대응은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사실 초기에 방역 대응을 잘했고 유럽은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의료가 붕괴되었죠. 그런데 마치 유럽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문제였고 한국은 민간의료야 잘 되어 있고, 과잉 병상이 오히려 좋았다는 식의 시장적, 이데올로기적인 공세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초기에는 대안적인 목소리를 좀 내려고 많이 노력했
고요.

Q2 코로나19 대응활동에 필요한 지원이나 사람이 있나요?

보건의료단체연합 같은 경우 상근자가 저 한 명이에요. 저희가 보건의료단체
라서 되게 돈이 많고 자원이 풍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활동 의
사는 11만 명인데 저희 회원은 많아도 500명 정도이고 회비를 꼬박꼬박 내시는
회원은 그것보다 더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돈이 많지 않고 인력도 부족
하고요. 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매일 허덕이다 보니 성명서 쓰고 인터뷰하는 것
밖에 못하니까 너무 아쉽죠.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에게 확 와 닿을 수 있는
새롭고 재미난 콘텐츠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건 전혀 못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정책만 계속, 그것도 분석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
각이 들고요.

4) 마을

마을공동체는 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을 기점으로 마을의 주민들과, 마을의 리더, 시민 운동가들이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펼치며 생겨났다. 마을 곳곳에 펼쳐진 코로나19 대응소식을 듣기 위해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전주도시혁신센터, 연수구 코로나19 마을과 함께 이겨내기 모임을 찾아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았다.

강서시민협력플랫폼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방역 물품, 생필품, 식료품으로 구성된 응원물품을 제작하여 의료진 및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했다. 물품 준비를 위한 구매, 제작, 전달 전 과정에 시민, 중간지원조직, 노동조합들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의 모금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역 단체와 주민들의 협력 경험이 생긴 데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재난 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간 연결이 어려운 점을 한계로 꼽았다. 또한 민간과 행정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거버넌스가 필요하겠다고 평가했다.

전주도시혁신센터의 경우 마스크 포장 봉사활동과 물품 기부 캠페인과 지역 소비 촉진 캠페인 활동을 했다. 시민들의 후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점과 비대면 플랫폼 활용을 어려워하는 시민들이 많아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소규모 단위로 대면하여 할 수 있는 활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마을공동체 기본법과 주민자치회 조례 같은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수구 코로나19 마을과 함께 이겨내기 모임의 경우 도시락을 만들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활동과 취약계층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지역 내 마을 모임들과 협력하는 경험이 쌓인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예산 마련을 위해 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체계가 마을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처럼 유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마을 단위에서 재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대응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은 폐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픈하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마을 영역의 경우 공통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욕구와 후원 물품 및 성금들이 결집되어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 내부에 기 형성된 다양한 네트워크와 자원들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마을공동체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이 있었기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들어 본 소수의 케이스로 경향성을 가늠하긴 어려우나 행정과의 소통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곳도 있었고 행정과 협력했으나 오히려 경직된 구조와 체계에 소통하기가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곳도 있었다. 다만 지역 내 공공기관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방역을 이유로 중지된 것에 대해서는 꼭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Q1 코로나19 활동의 한계점, 아쉬움, 또는 개선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뭔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재난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저희도 같이 답답하기도 했고. 그리고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가 없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의 인적 자원들이 재난시기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고민들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필요성?

Q2 시민사회 안에서 큰 재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까요?

네, 시민사회 안에서 이런 큰 재난상황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게 정말 어려웠고,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강서구라는 지역 안에 있으니, 지역 내의 다양한 활동영역들이 각자의 영역을 나누고 구분 짓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 그림 속에서 역할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협력하면서 성과도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모일 수 없었잖아요. 공적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시 지침,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논의 자체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사실 코로나처럼 일상적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도 주요하지만, 분야와 영역을 뛰어넘는 시민사회와 행정의 상생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의 힘, 지역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고요. 상생 거버넌스 체계인거죠.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는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세심한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행정이 주도하는 자리에 민간이 배치되는 방식부터 바뀌어야죠.** 설계할 때부터 행정과 민간이 파트너십이 보장된 진정한 의미의 민관 거버넌스가 되어야죠.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거버넌스보다는 민간의 철학, 경험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하고, 행정체계 내의 칸막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진짜 실제적인 건데, 참여하는 주민들의 욕구나 논의구조, 접근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더 작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설계되고 작동되어야 해요.

Q1 코로나19 대응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오히려 전주시 주민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해온 분들이 먼저 저희한테 연락이 자주 왔었어요. 온두레공동체는 온두레공동체만의 사업을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팀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게 있으니까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집행이 힘든데,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돕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때 알아차렸죠. 아,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 반성이 되더라구요. 저희도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출발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Q2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에 차질은 없으세요?

힘들어요. 준비하고 기획해도 결국에 그때가 되면 다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비대면 생각을 해 보긴 했는데, 저희가 비대면으로 생각했던 게 영상통화였어요. 영상통화로 주민분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건데, 주민분들이 스마트폰을 워낙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각 동을 찾아가서 조별로 흩어진 다음에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 휴대폰을 들고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줌(ZOOM)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하더라고요. 차라리 저희가 필요해서 시간을 내서 단체로 다 하기보다는 차라리 소수로 만나서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Q1 코로나19 대응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돌봄이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들이 이런 재난 시에 더 필요한테 다 멈춘 거잖아요. 다른 것 다 멈춰도 공공기관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멈추고. 그러면 취약계층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들도 많고.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실제 난 거기서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또 거기 구조나 체계나 규칙이 있을 테니까 어렵겠지만. 신고해야 되고 보고해야 하고 절차라든가. 그걸 마무리 짓는. 재정 계획도 있어야 하고 (...) 마을에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자 싶지만 그게 다 우리의 몫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도서관도 문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도 문 열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봄이 안 되는 애들인데. 거기가 제일 마지막에 닫아야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차 대유행 지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만약 적정 인원이 20명이면 20명만이라도 계속 열고. 확진자 나오면 멈추고, 소독하고 다시 만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멈춰만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참. 밖은 난리가 났는데 그 구역만 확진자가 없다는 걸로 없어지는 게 아닌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없어요. 지금도. (...)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 장애인 분들도 못 나가고 집에 계속 있고. 그런 것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도 그래요. 학교. 우리 회원 한 분은 다문화 학교 교사예요. 애가 둘인데. 이제 학교 문은 열었으니까 애들은 안 가도 선생님들은 학교 가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집에 있고, 선생님은 학교 가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줄이고 그랬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다 개인한테 떠맡기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Q2 시민사회의 재난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데 가도 통장, 반장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틀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런 게 관이나 학교로 들어가면 좀 왜곡되잖아요.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왜곡됨이 있어서 그렇지, 보완해가면서 연습을 위한 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재난대응 네트워크 꾸리면 재난에 대한 교육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을지원센터에서 했던 교육 같이 들었는데 구호는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으면 좋더라고요. 어떤 집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아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택배기사나 지역 사람들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뭘 갖다 줘야 되는지 잘 아는 것들을 이용한다든가. 마을이 훨씬 더 유연하게 사각지대를 구호 보호할 수 있다.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우리는 구호하면은 막 물 줘야 되고, 먹을 것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은 사람 마음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든가 그런 얘기했는데. 아,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도 미리 미리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5) 모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표적인 모금활동을 펼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지역재단협의회를 만나 세부적인 코로나19대응 내용들을 들어보았다.

사랑의 열매의 경우 코로나19 특별모금을 진행했으며 전국적으로 방역, 취약계층 생계 지원, 의료지원을 위한 모금액 배분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국내 민간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대응활동을 취합해 해외 NGO에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위기를 맞아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과 교류하며 직접 배분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력파트너 및 협력 영역이 확장된 점과 기부 문화가 사회 곳곳으로 확대된 점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 부처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협의체 내에서 협의가 어려웠던 점과 한정적 자원 및 인력으로 활동이 제한되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경험을 확대하는 과정, 이를 위한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지역재단협의회는 대구지역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과 대구지역 활동가 인터뷰를 통한 자료집 제작 활동, 국내 민간 코로나 대응활동을 영문 매거진에 실어 해외에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재단의 역할이 홍보되고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공공 기관들이 휴관하여 취약계층 지원 시 정보 파악 및 선정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려는 목표가 있으며 지역 차원의 모금과 기부활성화에 지자체의 역할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모금 영역의 경우 쏟아져 들어오는 시민 후원금을 적재적소에 연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해야 할 영역과 선정해야 할 대상에 대한 정보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조직이 빠르게 판단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했다. 배분 사업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의료)자원봉사,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주민자치회, 이주민인권센터 등 다양한 영역과 활발한 소통을 경험한 것에 성과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했다. 적시에 필요한 곳에 모금액을 전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틀이 필요하겠다고 평가했다.

Q1 코로나19 대응활동에 특이점이 있었나요?

저희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실제로 지원이 되는데 까지 통상적으로 9개월이 걸립니다. 사업을 기획하는데 한 2개월 걸리고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한 4-5개월 걸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 논의를 시작하고 25일 만에 모든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은 단순하고 신속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프로세스의 기간을 줄인 것과 진행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간소화해서 진행했습니다. 큰 프로세스가 누락된 부분들은 없고요. 기간을 줄이고 단순화하고, 미리 협의해서 기관에서 고민할 내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2 평상시와는 다른 빠른 지원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2년 전에 모금회가 20년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던 내용 중 사업 방식과 대상, 파트너 확장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논의하고 점차 노력하던 차에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그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파트너로 일해 보는 계기가 되었죠.

Q3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사회문제가 생겼을 때 모금회가 빠르게 판단하고 협력을 확대한 점에 대해 만족하고 성과도 높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모금회가 한국의 소식들을 취합하고 국제 사회에 전하는 것도 해외에서도 정말 구하기 힘든 정보들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 되게 만족스러워 했고요.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아직 크게 부정적 평가로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는 모금회가 좀 달라졌다, 좀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금회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코로나19 모금이 이후 추가적인 모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외부의 불안감도 엄청 컸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성금을 빼고도 모금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기부의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그 다음 기부가 좀 쉬워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작년 오늘 날짜보다 오늘 날짜의 모금이 코로나 지원과 홍수 피해를 빼고도 5% 이상이 더 증액된 상황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기부의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Q1 다른 영역과의 협력 여부, 협력의 필요성 및 어려움, 개선 과제가 있나요?

부천지역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들 중심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부천시 주도로 공공네트워크만 구성운영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모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같은 공적기관이 적극 나서야 하나, 선거법의 제약 등으로 부천시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는 공적기관 등이 적극 나설 수 없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거나 기부를 촉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

코로나19로 복지관, 문화센터, 청소년기관, 어린이집 등 공적 기관들이 다 폐쇄되어 기관 직원들과 대면 협의 및 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죠. 실제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나 취약계층,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프리랜서 예술가와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수혜대상 파악 및 선정이 필요하나, 이러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강화되면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없이 위기 시 대상자 파악 및 선정이 매우 어렵죠. 그런 점에서 지역차원에서 지역재단들이 공적기관과 사전에 일상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재단과 공익활동영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해요.

6)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영역의 코로나19 대응활동들을 들어 보고자 했으나 여러 단체 섭외가 어려웠다. 인터뷰 요청이 수락된 국제의료구호기관 글로벌케어를 찾아가 코로나19대응 내용들을 들어보았다.

글로벌케어의 경우 대구지역 의료 지원, 의료진 식사 지원, 소외계층 방역물품 및 식사 지원 활동과 감염병 연구 리포트를 의료진 입장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대구동산병원에 중환자실을 설치하여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과 취약계층에 영양소가 갖춰진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과정에서 대구시와 협력이 어려웠던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관련하여 앞으로는 위급한 재난 시 지자체와의 협의구조가 있어 각 NGO들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협의하는 시스템 마련을 필요한 후속조치로 꼽았다.

글로벌케어

백은성 상임대표

Q1 어떻게 코로나19 대응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2월 말에 대구에서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대구 상황을 다 조사를 해서 '이거는 재난이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난구호 의료단체니까, 만약에 이게 가난한 나라에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서 대구고 국내지만 해외에 대응하는 것처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지역만 한국일 뿐이다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똑같거든요. 일단 사람 먼저 보내요. 가서 조사하자. 그리고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도와줄 현지 네트워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후원자이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대구에 계셨어요. 당시 대구동산병원 기획실장이셨는데 그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대구에 난리가 났다. 우리를 도와 달라. 연락이 왔고, 그래서 3월 3일에 2명을 동산병원에 파견했어요. 간호사 한 명, 보건 전문가 한 명. 파견해서 조사해보고 (...) 중환자실 세팅을 했어요. 중환자실 20개로 세팅했어요.

Q2 아쉬운 점,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NGO 워커 입장에서는 없는 대로 최선을 다 하는 것뿐이니까.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재난이 있으면 큰 NGO들이 평상시에 잘 했기 때문에 받는 거겠지만 NGO들 사이에서도 돈이 몇 군데로 쏠려요. 작은 NGO들이 하는 활동들이 마스크이나 대중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많지 않죠. 저희는 뭐 우리가 내달라고 이렇게 보내줘야지 조금 나올까 말까예요. 글로벌케어 치시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돈을 모으느라고 힘들었어요. 우리는 물건 보낸다고 약속을 했고, 돈은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

면 의료진 보내는데 돈은 줘야 되는데 없고. 어디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으니까.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알리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는 그나마 난 거죠. 우리보다 더 완전 힘든 NGO들도 많았겠죠. 모금함 열어도 잘 안 되니까. (...)

정세균 총리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대구동산병원 들렀어요. 저희는 중환자실 세팅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아, 이런 걸 국가가 해야지 왜 NGO가 하나. 국가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국가가 지원해라. 그래서 신문 검색해보시면 거점 병원 전국에 몇 개 병원 후원 재정 지원 이렇게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원래는 11억 5천인가를 줬는데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국가가 할 거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아주 난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9억 5천인가 이미 쓰고 2억 정도 사업비가 남았었는데 반환했어요. 반환. 그러면 이제 대구동산병원에서 국가에다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대구동산병원에서 알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에서 의료기기를 받으면, 자비를 일부 내야 되고요. 그걸 보고서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후에 몇 개월에 한 번씩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가 세금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이사회를 다 통과해서 받아야 되고. 받은 이후에 사후 보고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우리는 국가에 신청 안 하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 같은 자기네가 받을 수 있는 건 하지만 이렇게 기계를 받는 건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모금해 가지고 나머지 또 넣었어요. 반환 안 했으면 빨리 보낼 수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이렇게 했어요. (...)

제가 알기로는 많은 NGO들이 대구에 도우러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어요. 저는 일단 그 NGO들 다 모았을 거고, 연결했을 거예요. 각 구청마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다 있거든요. 복지관이랑 거기 도움 시급한 사람들이랑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총괄이나 연계시스템이 없으니까 NGO들이 알음알음 개인적으로 알아서 다 한 거예요. (...) 우리도 예를 들면 어디 재난 났다. 그러면 그냥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뻤던, 요원이 뻤던 아니면 거기에 헤드쿼터가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을 다 모으고 정보를 줘요. 그런데 대구 코로나 관련해서는 의료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대구시에 가면 거기서 딱 나눠주면 좋잖아요. 너네가 들고 온 게 뭐고, 뭘 할 거냐. 계획서 받아서 그러면 너네는 어느 지역에 가서 해라. 분명히 받은 사람은 여러 번 받았을 거고요.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을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IV

결론

1. 대응활동 총평
2. 대응활동의 한계
3. 제안

IV. 결론

1.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총평

1) 정부의 방역정책 지원 역할 수행

코로나19 대응관련 데이터와 담당활동가들과의 인터뷰에게서 확인되었듯,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영역별로 방역과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하고도 필요한 역할들을 자원했다. 국가적 보호와 지원의 취약계층, 즉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포함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여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온 점들이 자료를 통해 거듭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적 위기극복에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대응활동은, 정부의 방역대응의 한 축으로서 행정이 포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2) 공공서비스기관의 폐쇄로 발생한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1997년 IMF발생 이후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구호는 대개 민관협력, 혹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영역 아래 편입되었다. 하지만, 전염이 쉬운 감염병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선택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선제적인 폐쇄 조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하고도 많은 취약계층을 사실상 방치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취약계층은 공공의 부재 속에서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보완하고자, 각 영역이 가진 재원을 활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 하였다. 3월 대구지역 코로나의 확산에서도 대구지역의 장애인공동체 속 활동가들은 평소에 진행하지 않았던 직접구호활동과, 공동 자가격리 등을 통해 방역문제를 해결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비단 대구지역의 문제 뿐 아니다. 이주민과 난민이 지원받을 수 없는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난민/이주민단체들은 난민과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마스크를 사거나 후원을 받아 배분하는 활동도 지원하였다. 이는, 국가의 공공서비스의 부재로 발생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지원역할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권 및 사각지대 시민권 보호 및 지원운동 수행

① 성소수자 인권보호 및 사회적 공론 형성

5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 일부 언론은 특정 사회적소수자(게이,

게이클럽, 짬방)를 거론하며 혐오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5월 12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가 꾸려졌고, 23개 단체가 모여 상황실체제로 긴급한 운영을 시작했다. 대책 본부는 촘촘한 감시와 검열을 통한 K방역 속 성소수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아웃팅 문제 등을 사회적 화두로 부각시키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성소수자를 위한 익명검사를 알리는 홍보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 발빠르게 움직인 시민사회가 지자체와 적절한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며 방역에 기여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언론의 혐오적인 언론보도에 앞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며, 사회적 혐오의 분위기 속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지원체계를 재확인 시켜주기도 하였다.

감염병은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는 특별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배제 당하던 성소수자들을 부각시키고, 차별의 존재를 확대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② 이주민의 사회적배제 극복과 지원체계 마련

4월 경제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주민을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공적마스크 배포에 있어서 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대한민국 거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감염병의 위기와 더불어 찾아오는 사회적배제와 경제위기의 문제는 취약계층에게 더 어렵게 다가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포함한 난민/이주민 단체는 아름다운재단, 바보의 나눔으로부터 1억을 지원받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이주민/난민가구에 긴급생계비를 배분하였다. 공적서비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사회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난민/이주민 단체 내 연대협력을 통해 지자체와의 간담회도 진행된 점이 좋은 사례로 보여진다.

③ 공공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 장애인에 대한 협력적 긴급지원체계 마련

3월 대구지역 코로나확산 속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은 가장 먼저 장애인 시설수용소를 통해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공공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주춤하였다. 이를 지원하고자 전국에서 방역물품과 후원들이 대구로 모아졌고, 대구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로가 받은 자원들을 연계하는 등의 협력을 진행했다. 특히 대구지역 장애인공동체 같은 경우 시급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직접 구호활동이 빛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계에서 주창해온 것들이 시급하게 방역지침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 매뉴얼).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장애인을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은 또다 른 평가지점 이기도 하다.

4) 실업예방과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드보커시 및 연대운동 촉진

① 정부의 방역 및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재난 극복과 민간단체들의 연대협력을 위한 2020년 4월 28일 발족된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정부에서 발표된 방역대책과 경제위기대책들에 대한 비판 및 보완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4월 24일 진행된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6월 3일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zero운동의 방향' 토론회, 7월 28일 진행된 '한국판 뉴딜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시민사회 내의 의견을 조율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 이후의 교육 등에 대한 시민대책위 차원에서의 자리는 시민사회 내 각 영역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된 지점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비록 시민대책위가 정부의 방역, 경제위기대응 속도에 비추어 더딘 속도로 진행되었지만, 한국의 민간대응체계라고 할 수 있는 시민대책위의 발족과 합의를 마련하는 장이 제공된 것은 큰 의미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어떤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주목받느냐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난시기의 위기가 어떤 계층에 집중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면도 있다. 돌봄 노동, 돌봄 노동자, 취약계층어린이, 여성, 가정폭력피해자, 장애인, 재외동포,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성매매(성노동)종사자, 주거세입자, 홈리스,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계층들에게 감염병 확산 시 위기가 더욱 집중되는 것을 역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들을 통해 재분석 할 수 있기도 하다.

② 일상적 정보 공유를 통한 연대 촉진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5월에서 9월까지 8차에 걸친 뉴스레터를 통해 정보공유 활동도 이루어졌다. 다양한 단체들의 소식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응활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17] 뉴스레터 모음

- 1차 뉴스레터 (2020년 5월 14일 : <https://stib.ee/1WA2>)
- 2차 뉴스레터 (2020년 5월 20일 : <https://stib.ee/3KB2>)
- 3차 뉴스레터 (2020년 6월 2일 : <https://stib.ee/RHD2>)
- 4차 뉴스레터 (2020년 6월 10일 : <https://stib.ee/nSE2>)
- 5차 뉴스레터 (2020년 6월 24일 : <https://stib.ee/SVG2>)
- 6차 뉴스레터 (2020년 7월 1일 : <https://stib.ee/OqH2>)
- 7차 뉴스레터 (2020년 8월 31일 : <https://stib.ee/kBR2>)
- 8차 뉴스레터 (2020년 9월 10일 : <https://stib.ee/4IT2>)

5) 자원 연계를 통한 긴급한 위기 상황 극복에 기여

① 물적 자원연계 (마스크 등)

2-3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필두로 지역차원의 마스크 제작을 위한 협력, 각 종 방역물품 제작 및 배분/배포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물품들은 방역 물품의 품귀현상이 짙었던 대구 등 전국으로 지원을 가기도 하였다. 공공서비스 영역이 커버할 수 없는 감염병의 확산속도를 시민사회가 같이 감당함으로써,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펼쳐진 자체활동들은 코로나19 감염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주요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보공유 및 소통 (사회적자본 연결)

서울시는 3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와 서울시의 일상적인 소통과 협력 창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민관협력반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내 여러 영역(건강권, 돌봄·여성노동, 마을·자치, 이주민·난민, 인권, 자원봉사, 장애, 지역시민사회, 취약계층 등)이 모여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각 영역이 마주치는 재난 속 한계지점들을 공유하며, 추후 재난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지속되었다. 서울시 외, 타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 재난관련 민관협치기구가 구성되긴 하였지만, 민관의 효율적이고 빠른 연대와 협력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민관협력반 운영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재난대응의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시민대책위가 구성됨에 따라, 각 지역별 미간의 코로나19 대응관련 기구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해당 대책위를 통하여 지역의 협력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 : 코로나19 대구공동행동)

2.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한계

1) 자원 배분의 비효율로 인한 시민사회 대응활동의 어려움

대다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은 대부분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민간재단들의 지원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의 재빠르며, 행정이 간소화된 배분지원이 있었지만, 민관의 협력으로써 시민사회에 재원에 대한 지원과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의 불규칙적인 반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차원에서도 재난극복의 중요한 축인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영역을 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 전국적 대응네트워크 부재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영역 내 연대와 협력은 활성화된 반면, 영역 간 연대나 지역적, 전국적 연대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나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대체가 구성된 성과와 의미가 있고, 사회적경제 진영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마을만들기센터를 중심으로한 한국마을센터연합,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연합체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기존 연대조직들의 활동도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다만 이는 영역 내 연대와 협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시에는 영역과 지역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국적으로 실업극복운동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했던 사례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전국적으로 지역연대조직이나 모임이 구성된 사례에 비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전국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연대체가 구성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고, 중앙단위의 연대조직이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영역별 네트워크 조직이 참여하지 못했고, 광역연대조직까지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고,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달리 사회적안전망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구축된 측면도 있으며, 지역 시민사회가 약화된 점 등도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영역을 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간의 전국적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네트워크의 부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부재, 지역 내에서 영역을 넘지 못하는 소통체계, 영역을 넘지 못하는 소통체계는 재난상황 시 총괄적인 대응을 낼 수 없는 한계 사례로 꼽힌다.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는, 일상에서의 영역과 지역을 넘는 연대협력을 통한 재난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 내 재난대응 전문단체 대응데이터 부재

한국사회도 다양한 재난을 경험하면서 재난대응이 이전보다 훨씬 체계화되고 있다.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보건의료대응체계가 강화되었고, 자원봉사진영도 이제 재난을 일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구조체계가 상당히 구축되어가고 있다. 전주시의 '재난이 있으면 달려가는' 사례와, 일상 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의 배치와 협력에 대해 고민하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일상에서의 재난을 대비함으로, 평상시에 위기관리를 연습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과거 IMF와 태안 기름유출사고, 금융위기, 세월호 등 수많은 사회적 위기와 재난을 경험하였지만 그 경험이 축적되거나 네트워크 대응체계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매번 별도의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전문적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상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나 연구가 필요하다.

4) 민관협력 시스템 부재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민관협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민관협력체계가 구성은 되었지만 주로 보건의료계 중심이었고, 시민사회의 참여는 1-2차례 의견수렴 외에는 전무하였다. 그나마 노사정 거버넌스 협의테이블이 있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좌초하면서 사실상 이번 코로나 방역에서 민관거버넌스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에서도 대부분 지방정부 주도의 방역대책은 있었으나 민관협력으로 방역 및 지원대책을 마련한 곳은 손에 꼽힐 정도도 미미하였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민관협력반 구성운영과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한 전주시와 노동계가 협력한 사례 정도가 유일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민관협력반의 경우 다양한 영역이 일상적으로 만나 정보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정보공유 거버넌스라는 점에는 매우 긍정적이나 사회적 재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거버넌스로서는 기능과 역할이 없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난기본법에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관리민관협의회’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안전관리민관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작동한 지역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극복해결과정에서 민관협력 실패 경험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시민사회 코로나 위기극복 활동상의 한계

① 자원봉사자 안전 대책 부재

2020년 상반기 자원봉사진영은 전국에 약 70만명의 자원활동이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현재 자원봉사자를 위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상해보험만으로는 자원봉사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 결과 이는 자원봉사자의 파견과 그들의 봉사활동을 오히려 막아야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긴급지원이나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위기 극복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② 비대면 방식의 활동전환의 어려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비대면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하였으나 시민사회는 아직 비대면 활동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기반이나 경험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대책회의 운영에서부터 긴급지원 과정에서 비대면 방식은 많은 어려움

과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시민교육이나 회원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의 경우 비대면 사업으로 인한 실무부담 증가로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집중하기에 벅찰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일상의 위기극복은 물론 시민사회 생존과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제안

1) 사회적 위기 대응 상시적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사회적 재난과 위기는 어느 한 영역 즉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의 각각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다양한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전 예방과 발생 시 효과적인 대책 등을 일괄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상시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기본법에는 재난극복을 위한 일상적 거버넌스로 ‘안전관리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안전관리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의회는 행정과 관변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안전을 관리하는 민관협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민관협의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 민관거버넌스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위기와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민안전’이 국정과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며, 인권 보호 및 정부의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과 대응활동을 조직적으로 연계할 영역별 민관협력 거버넌스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시민사회가 정부 및 지자체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및 강화하고자 한다면 일상적으로 민관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상호 신뢰기반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상호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전국적이고 통합적인 재난대응 민간네트워크 구축 필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각 영역별로 자체 네트워크와 연대, 협력은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영역을 넘어선 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에 기반한 전국네트워크는 사실상 부재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특히 재난과 관련한 전문성이 취약해 정부 및 상황 대응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특히 과거 IMF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사회적 위기와 재난에 시민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그 경험과 자료 등이 축적되지 않아 새로운 사회적 위기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도 지적되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시민사회가 사회적 재난과 위기에 보다 주동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 재난대응을 상시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재난과 사회적 참사가 일상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대응 시급성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사회적으로 시민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극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사회적 위기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기반한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재난과 관계없이 HK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위기 혹은 재난 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작성하고, 활동한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민사회의 전국적 통합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와의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원의 합리적 분배와 정보의 교류, 역할 배분등과 같은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민주적으로 효과적인 자원분배 방안 마련

민관거버넌스와 민간네트워크 구축이 재난과 위기 대응의 조직적 대응방안이라면 조직적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의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배분과 사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 재원을 분배하기는 하지만 공적분배의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시민사회의 공적활동에 대한 재원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적전달체계에 포함되어 활동하는 민간영역에게도 정당한 자원배분을 통해 공적서비스를 전달해야하나 순수 자원봉사형태로 공적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질적 효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사회적 재난과 위기에 정부와 시민간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조직들의 다양한 활동을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로 보아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코로나19로 후원, 보조금, 기부수익이 줄어든 시민사회의 경우 단체 운영이 어려워 공적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위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이에 비해 영국이나 미국 등은 정부와 시민 사이 중간 역할을 하는 비영리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사회 조직들로 하여금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책임 있게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만이 아닌 이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시민사회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분배도 중요한 정부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재난과 위기 시에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재원을 모으는 기부금품법도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1천만 원 이상 모집 시 모집등록이 의무적이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아 기부금품 모집을 제약하고 있으며, 세제혜택도 매우 취약해(아시아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세액공제제도 운영) 기업이나 기부자들의 기부를 촉진시키고 있지 못하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비해 기부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기부자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과는 대조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기부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적 위기 시에 기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노력도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 및 자자체 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같은 공적모금기관들의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일부 공적 모금기관들이 기부금의 절대액을 모집하고 있어, 공적모금기관들의 배분과 사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의 기금이 주로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되어 사회위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이나 공적 기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 모금재단들은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과 배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부록

1. 심층인터뷰 질문지
2. 심층인터뷰 참여자 목록
3. 심층인터뷰 답변 내용

1.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사례 심층인터뷰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인터뷰는 사회적재난 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체계 구성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귀 단체의 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

1. 인터뷰 대상자의 소개 : 직책, 주요업무
2. 인터뷰 대상자 소속 단체 소개 : 단체 목적 및 성격, 주요활동 및 사업 등

나. 코로나19 대응활동에 대한 질문

1. 코로나19 관련 주요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 (2-5월 사이)
 - 주요 활동 및 사업, 지원대상, 활동기간, 참여인력(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2. 재원마련 방안 : 예, 자체조달, 정부보조, 재단지원, 기업모금, 시민모금 등
3. 기존에 단체에서 활동하던 내용과 연관성(일상사업 또는 코로나19의 특별활동 등)
4. 다른 영역(또는 단체)과의 협력 여부 및 협력정도, 협력의 필요성 및 어려움 등 개선 과제 등

다. 자체평가에 대한 질문 (개인, 단체 측면에서)

1. 활동의 효과와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면?
2. 활동의 어려움과 한계점, 아쉬움 또는 개선점이 있다면?
3. 활동 지속성 여부 및 추후 재난대응 후속사업 여부 (예: 매뉴얼 등)
4. 기타

2020년 7-10월

주관 : 코로나19타파연대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사례 심층인터뷰 참여자 목록

[표15] 심층인터뷰 참여자 목록

No	단체명	인터뷰 대상	쪽수
지역/ 중앙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제준 공동상황실장	105
지역/ 대구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센터장	107
	대구4.16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	109
	대구 장애인 지역 공동체	조민제 사무국장	112
	성서공단 노동조합 상담소	김용철 소장	114
자원봉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	117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	12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원민 차장	124
사회적 경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	127
	천안사회경제연대	장동순 집행위원장	130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나비문고	이영도 대표	132
인권/어 드보커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김영아 대표	13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팀장	140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나영정 활동가	14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랄라 활동가	145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희우 활동가	149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152
마을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윤성미 총괄국장	154
	전주도시혁신센터	김도훈, 김경호 공동체지원팀원	157
	연수구 코로나19 마을과 함께 이겨내기 모임	장수진 대표	159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진곤 팀장, 김희정 과장	162
	지역재단협의회,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	164
국제개발	글로벌케어	백은성 대표	170

3.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사례 심층인터뷰 답변 내용

(1)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제준 공동상황실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주제준
- 직책 :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주요업무 : 코로나19 상황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워크숍, 기자회견 등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설립 : 2020년 4월 2일 (발족)
- 소개 :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취약 계층 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방향, 요구 등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인 연대체, 한국사회 시민사회 포괄하며 민주운동, 사회적 경제 단위 등 280개 단체로 구성됨
- 활동 : 특수고용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코로나19의 취약계층 지원 / 6대 방향과 11대 당면 요구 발표 / 코로나19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 등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사각지대 제로 운동

-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조직화할 수 있도록 도움
- 취약계층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강화하고,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는 기존의 취약계층+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롭고 다양해짐. 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정보를 모으고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각지대 발굴 사업 중요함
- 사각지대 발굴이 되면 취약계층의 추가적 지원, 직접 지원이 가능해짐

(2) 정부 정책 모니터링

- 정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 만들고 제안 (한국판뉴딜, 기본소득(재난지원금), 전국민고용보험, 교육정책 등)

② 자원조달 방법

- 자체 자원 (참여 단체 분담금으로 마련), 어려운 상황이라 상황실 활동가 7-8명이 회의 후 식사를 하기도 힘든 상황.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 기초 비용으로 인해 적자 상황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민생과 연대라는 큰 틀은 유지
- 코로나대응은 새로운 영역. 기존의 시민사회가 진행했던 집회와 시민모금이 감염 위험으로 인해 불가능함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코로나의 취약계층은 기존의 취약계층과 다른 형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추가적 지원과 직접적 지원 의도하였으나, 서울시와의 협력이 안 되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보건의료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짐. 보건의료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고, 사회 안전망과 관련하여 복지 체계, 인권 문제, 돌봄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들 등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구축해야 함. 다양한 부문의 새로운 키워커들과의 연대가 중요한 과제임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코로나 대책위를 만들었다는 점. 정부가 뉴딜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대책위에서 먼저 제안함. 시민사회가 취약계층 지원, 방역 체계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있음

② 활동의 한계

- 새로운 영역이라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야 함. 키워커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됨. 재난은 빠르게 다가오지만, 네트워크가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
- 현재 구축된 네트워크 활용의 제약. 정부의 지원이나 자원 마련 측면에 대한 어려움.
-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으로써 기존에 해온 단체들의 고유 역할과 코로나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움
- 코로나 대책위가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라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마련을 이유로 재단 지원 사업에 응모할 때 신뢰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함

③ 후속사업 여부

- 각 분야별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워크숍, 발표 기자회견 등 지속할 예정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키워커와의 만남 지속
-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정책과 법안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 예정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시민사회 내에서 모색한 대안들을 정부 정책과 법안으로 반영하는 과정 필요.

(2)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상임이사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윤종화
- 직책 : 대구시민센터 대표 및 상임이사
- 주요업무 : 총괄 업무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대구시민센터
- 설립 : 2009년
- 소개 : 시민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산하에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있음. 마을공동체 연합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음
- 활동 : 시민사회 활성화, NGO/풀뿌리 주민조직 발굴 및 활성화, 교육 매뉴얼 작성,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기금 관리(힘내라 활동가, 미혼모 활동 기금, 장학 기금, NGO 임대료 후원 기금)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대구지역 지원 물품 및 자원 집적

- 지역재단협의회,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등 대구 밖 조직들이 대구지역의 집단감

염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물품과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함

- 마스크, 식료품 등을 취약계층 및 의료진들에게 전달함

(2) 지원 단위 물색 및 정보 파악

- 어떤 물건이 어디에 얼마나 전달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음
- 전방위적으로 사각지대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함
- 전국적으로 들어온 지원물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류 및 리스트 작업 및 업데이트를 함. 지속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활동가 인터뷰 및 뉴스 기사 업데이트

- 대구 시민사회에서 쪽방 상담소, 노숙인 지원센터, 미혼모 지원 그룹, 이주여성 센터 등 현장과 지원그룹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한 20여명의 현장활동가들을 인터뷰함
- 인터뷰 내용을 뉴스민에 기사화하여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시민들에게 알림

② 자원조달 방법

- 후원금 2500만원, 후원물품 등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기존의 대구지역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특히 사각지대의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데에 역할을 했던 네트워크에 지원을 함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대구시로 들어오는 자원의 경우,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협력했다면 코로나19 확산 초반부터 체계를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었을 것임
-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자 했으나 2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대구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대구시는 재난 관련한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난구호협회, 사회서비스원이 있다며 대구시민센터에는 기부금 관련한 허가를 해주지 않았음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대구지역으로 쏟아지는 기부물품들을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연결하여 사각지대와 취약계층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사각지대 지원 및 대변 활동 하느라 많은 노력을 쏟은 활동가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지역사회에 이들의 활동과 이들이 대변하는 취약계층의 실태를 알림. 해당 인터뷰와 기록은 재난을 지속적으로 대비하자는 의미로 진행되었음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감염병 위기와 대응방향성을 고민함

② 활동의 한계

-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음
- 재난상황에서의 역할을 파악하기 힘들었음
- 대구시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행정과의 연결이 실패함
- 초기에 방역과 돌봄이 충돌했음. 방역을 하려면 비대면 상황이 되어야 하고, 그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존 문제가 발생함. 대구시와 민간이 함께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해 아쉬움

③ 후속사업 여부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감염병 위기를 고민하고, 대응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함
- 재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함
- 재난관련 일자리를 고민하려고 함.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리스트업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함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시민들의 안심을 위한 방역작업
-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리스트 작성과 꾸준한 업데이트
- 후원품목 전달자 논의
- 물품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필요함
- 재난대응 매뉴얼, 훈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후변화 대응 필요

(3) 대구4.16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김선우
- 직책 : 대구4.16연대 집행위원장
- 주요업무 : 지원물품 배분, 재난 대응 네트워크 구축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대구4.16연대
- 설립 : 2018년
- 소개 : 세월호 유가족이 시민, 단체와 함께 꾸린 4.16 참사에 대응한 통합적 상설 단체.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활동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동의 서명운동, 안전사회 건설, 세월호 희생자 추모 등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4.16연대 및 가족협의회 통한 성금 및 물품 지원

- 2월 18일 대구 내 첫 확진자 발생 후 대구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및 4.16연대가 협의하여 마스크 500개 지원함
- 3월 2일~6일, 5일간의 모금으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모은 성금 약 6천만 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대응활동을 위해 지원함
- 대구 내 취약계층(여성, 장애, 아동, 이주민 등)등에 방역물품 우선 지원함

(2) 지원/파견 의료진 지원

- 전국에서 자원해 온 의료진에 대한 도시락 및 간식, 생활용품을 지원함
- 보건의료노조 및 의료연대노조와 연계함

(3) 재난 대응 연대기구 형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마련함
- 경험을 모아 지자체에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취약계층(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함
- 제2의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활동 진행함.

② 자원조달 방법

- 시민 모금 (현물 포함)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큰 연관성은 없지만 세월호가 가지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상징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코로나도 사회적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없다면 대구 4.16연대를 통해서라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인권, 여성, 의료노조 등 다양한 단체와의 연대활동이 있었고 외부에서도 물품 지원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지역 내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취약계층 담당 공무원들도 방역 업무에 총동원되면서 취약계층(여성, 이주노동자, 아동, 장애 등) 지원에 공백이 발생. 당시에는 이를 메울 수 있는 시민사회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없어 방역물품을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시민사회 자발성을 활용하여 조금씩 극복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대응 연대회의 구성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방역 등 의료 현장 대한 직접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 활동만 가능하다는 사실상 자원봉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그러나 지자체가 인력 배분에 관한 상상력을 발휘했다면 물품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공공의 지원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움직여 직접적인 지원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대구4.16연대(시민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됨

② 활동의 한계

- 재난상황 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 시민사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재난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자원봉사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상상력 필요

③ 후속사업 여부

- 연대기구 형성을 통해 활동 경험 아카이빙, 정책제안과 이를 위한 토론회 진행
- 대구 동구에 4-500병상을 확보한 제 2의 공공의료원 설치 요구 및 이슈화 활동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안전과 관련된 물품들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도 안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물품들을 충분히 물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지자체-시민사회와 상시적인 협업 시스템이 마련 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이전의 재난 경험들을 교훈 삼아 대구사회가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4) 대구 장애인지원공동체, 조민제 사무국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조민제
- 직책 : 대구 장애인지원공동체 사무국장
- 주요업무 : 실무 책임자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대구 장애인지원공동체
- 설립 : 2000년 3월
- 소개 : 장애인 인권 단체로, 2011년 대구시 사단법인으로 전환함. 장애인 인권 업무가 핵심인 사단법인 단체. 부설기관으로 50여명이 다니는 질라라비⁴⁾ 장애인 야학,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자립주택 및 상담을 제공하는 다릿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중장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있음
- 활동 : 법인에서 사업들을 총괄, 관리하며 지역의 장애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분석하고, 제안함. 직원은 총 33명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자가격리 및 확진자 직접지원

- 장애인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수칙을 안내, 격리 및 확진자 현황 파악 및 직접지원
- 장애인 자립주택 9채에 코디네이터 상주하며 개별 관리
- 센터 내에서 장애인 및 활동지원사 확진으로 소규모 공동 자가격리
- 장애인 확진자 격리시설 이동 및 자가 방역

(2) 장애인, 활동지원사 대상 구호물품, 간편식품 공수 및 배급

- 구호물품 체크 및 정리와 배분 (장애인 1400가구, 활동지원사 700가구)

(3) 장애인 감염병 지원 대책에 대한 정책 및 매뉴얼 제안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제안

② 자원조달 방법

- 시민 모금, 이베이코리아,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등 지원
- 후원금 6500만원, 후원물품 1억 3~5천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장애인 자립주택에서의 확진자 발생하여 격리를 위한 즉각 대응 진행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대구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구호물품 전달 네트워크 형성
- 대구지역 생협, 마을공동체 등에서 김밥, 간편식품 및 방역물품 지원받음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체계적으로 팀을 나누어 역할을 배분함
- 평소 느끼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를 인지하게 됨

② 활동의 한계

- 보건복지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음. 현재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함
- 민간단체 및 복지기관이 휴관하지 않고, 재난 상황 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며 재난 비상체계를 만들어야 함

③ 후속사업 여부

- 재난 대응을 위한 내부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재난 상황 시 민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재난 상황 비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함
- 장애인 돌봄을 가족에게 부담하지 않는 것
- 활동지원사가 확진 사실을 숨기거나, 말없이 그만두는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인력을 구할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함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격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4) '질라라비'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역셈을 상징하는 새로서, 우람한 몸집과 우렁찬 울음을 지닌 날지 못하는 닭의 본래 모습을 뜻하는 우리 옛말

(5)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상담소, 김용철 소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김용철
- 직책 :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상담소 소장
- 주요업무 :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폭행, 산재, 사업장 변경, 의료지원 등의 상담사업과 이에 따른 대책 활동을 담당함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상담소
- 설립 : 2002년
- 소개 : 지역노조로, 성서공단과 인근 성주군~고령군까지 포괄하고 있음. 성서공단은 대구에서 가장 큰 공단으로 노동자는 약 6만 명, 이주노동자는 5천 명이 넘음. 대부분이 영세사업장, 하청공장이라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고 있음
- 활동 : 이주민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활동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생활임금 쟁취 활동, 근로기준법 준수 활동, 산재와 산업안전 대처활동, 이주노동자 사업(무료진료실, 한글교실, 노동상담, 투쟁과 조합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주노동자 당사자 2명을 포함하여 상근자는 5명이며, 조합원은 8개 국가의 이주노동자 80여명, 정주노동자 20여명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평등 마스크”, 손 소독제 무료 배포

-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조차 일하느라 낮 시간에 약국으로 직접 갈 수 없었고, 농어촌 지역은 약국을 찾기도 쉽지 않았음. 심지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입이 불가했음
- 방역 불평등을 폭로하는 마스크 무료 나눔 행사를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공단대로에서 진행함. 5만 장 정도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포함
- 농어촌지역에는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공장 기숙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기도 하며, 인근 이주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가게, 종교시설, 쉼터, 전통시장 등에도 배포함

(2) 다국어 방역지침 전달

- 긴급재난 문자 및 코로나 정보, 자가 방역 지침이 대부분 한국어라 정보 접근성이 낮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코로나에 걸리면 강제 출국이 된다는 가짜뉴스가 돌아 발열이 있어도 숨기는 경우가 많았음

- 코로나 자가 방역 대책과 코로나 의심 증상시 대처 요령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더라도 추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11개 국어 번역 홍보물(2만 매), 현수막(수십 장)을 공단 곳곳에 게시함

(3)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상담 활동

-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 금지 등으로 주변의 상담소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음
-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갑자기 귀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체불임금, 퇴직금 상담을 진행함
-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대구의료원을 무료로 이용해왔으나,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환자 입원 병동으로 전용됨으로써 무료 진료가 중단되었음. 중증 질환자와 긴급 진료가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등의 의료지원 활동과 의료 상담을 진행함

(4) 이주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사회적 여론화

- 코로나로 인해 고통은 함께 받지만, 정보의 전달이나 마스크 보급 등의 차별과 배제 속에 처해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알리며, 코로나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비자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감염될 수 있음을 알림
- 대구지역 방송과 신문에 이주노동자 현실과 관련하여 많은 보도가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됨

② 재원조달 방법

- 마스크, 손소독제 (시민, 노동단체 물품지원)
- 1천만 원 정도의 마스크 구매비용 (시민사회단체들 후원)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성서공단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위해 주로 노동권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해옴
-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생존의 위기가 심각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킨다는 측면으로 긴급 활동을 진행함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기존에 연대해 온 노동자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전달, 방역물품 전달, 다국어로의 통번역을 진행함. 또, 평소에 관계를 맺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상점, 쉼터, 종교기관들과도 연결과 협력이 잘 이루어짐. 마스크 보급 행사 등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음. 성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활동도 지속함
- 하지만, 전국적 관점에서의 ‘이주민 관련 단체’들의 코로나 공동대처는 부족했음. 더불어, 이주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은 부족했음, 이주노동자들이 방역물품의 수혜자가 아니라 방역에서 차별받

지 않는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 다시 만나게 될 위기에 대한 전국적 수준의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배포, 손 소독제 배포, 자가 방역 지침의 다국어 홍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봄.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릴 수 있기도 했음
-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들의 위기를 도움으로, 많은 신뢰를 받게 되었음. 조합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조합의 소식을 자국어로 알리거나 배포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점 조합의 주체로 성장하게 됨
- 전국이주단체들의 코로나대응활동으로, 비자유무와 관계없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정책이 개선되었음. 코로나 무료검사도 이주민들에게 확대됨

② 활동의 한계

- 코로나 확산 초반,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여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었음. 그 와중에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을 기숙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폐쇄하기도 하였음. 방역물품이 현저히 부족하여 작업용 방진마스크, 면마스크, 비닐장갑, 라텍스 장갑 등을 겹겹이 착용하고 하루를 견뎠음
- 성서공단노조가 활동한 범위는 아주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배제함.

③ 후속사업 여부

- 코로나 1,2차 대유행 시기를 지나면서, 대구지역에는 이주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건강권 모임을 진행하고 있음. 아프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 질환에 병원비 부담으로 손도 쓰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음
- 대구지역에 제2의 대구의료원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며, 대구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④ 필요한 후속조치

- 한국의 필요에 의해 초대되거나 유입된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에 대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은 한국 정부의 몫임. 방역지침 홍보 또한 마찬가지임
-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의료공백을 막으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확충이 필요함. 제2의 대구의료원을 건설하거나, 공공의료 차원에

- 서 긴급재난대응 중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함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있어야 함

(6)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박정석
- 직책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 주요업무 : 자원봉사센터 업무 총괄, 전주시역 통합자원봉사지원 단장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 설립 : 1999년
- 소개 :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변화를 주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사업들을 진행 중
- 활동 : 자원봉사 역량강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중추적 역할 등 4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진행 중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방역봉사활동

- <손세정제 만들어 사용하기 캠페인> 2.14~현재까지 15회, 144명 참여하여 세정제 6,300개 지원. 휴대용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키트 형태로 제작하여 관광객과 재난 약자,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없는 대민서비스근로자(버스 기사, 야쿠르트 판매상)에게 제공
- <골목골목 찾아가는 방역봉사> 2.24~현재까지 39회, 397명 참여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생단체와 함께 방역소독활동, 취약계층 대상으로 집 소독 등 방역 봉사
- <열화상 카메라 운영 자원봉사활동> 3.2~4.17, 35회, 210명 참여하여 외지인 유입 관문인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3곳 1인 2교대로 단체별 요일제로 활동 (공무원과 봉사자 2인 1조)

- 〈구석구석 빈틈없는 자원봉사향균히어로 캠페인〉 6.19~현재까지 4회, 95명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전국 캠페인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향균필름 부착 캠페인, 특히 관내 파출소 19곳 방문하여 방역 지원

(2) 다국어 방역지침 전달

- 〈마스크 우선보급대상자 마스크포장〉 3.6~3.19 3회, 410명 참여하여 마스크 대란으로 수급이 어려운 시민 대상으로 우선보급대상자 4만 5천명(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게 10장씩 전달, 마스크 5개씩 소포장 봉사활동, 비대면 봉사활동의 장점으로 많은 봉사자 참여, 45만개 포장
- 〈마스크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기〉 3월 9일 1회, SNS로 온라인에서 마스크가 더 필요한 의료진과 기저질환자 등에 먼저 양보하자는 운동,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전국 자원봉사센터 동시 진행
- 〈공적마스크 구입 방법 안내〉 3월 9일 1회, SNS로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하는 5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
-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지원〉 3.11~3.13 3회, 225명 참여하여 공적마스크 포장, 판매, 대기인원 질서 유지, 구매 시스템 입력 등 1일 79개 약국 지원, 전라북도청과 진행
- 〈면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 3.16~4.29 45회, 900명 참여하여 마스크 부족현상 해결하고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 일회용 마스크 구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면마스크 1만개 제작, 원단업자 재단 재능나눔으로 진행

(3) 심리적 방역 봉사활동

- 〈토닥토닥 힘내자 대한민국〉 3월 4일, 5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현장 의료인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는 캠페인,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는 응원 캠페인 진행
- 〈안동시 코로나19 희망물품 전달〉 4.6~4.9 4회, 90명 참여하여 자매도시 안동시에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바질 희망씨앗 화분 키트 4000개와 직접 만든 빵, 급식 농가 농산물로 만든 열무 얼갈이 김치 등 5,600개 전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난기금으로 마련
- 〈생활 속 거리 두기〉 5월 6일, SNS로 개인방역 기본수칙 실천 메시지 전달
- 〈슬기로운 봉사활동 안내〉 5월 18일, SNS로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안내 수칙 전달
- 〈마음치유봉사단〉 전주시 마음치유전담반 5개 분과 48개 기관 참여하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원예치료, 심리상담, 예술치유 특화반으로 운영 예정

(4) 코로나19에 의해 새롭게 파생된 경제적 방역봉사활동

- 〈지역상권 살리기 착한소비 촉진 캠페인〉 2.26~현재까지 66회, 770명 참여하여 SNS와 병행해 지역경제 촉매제 역할 수행하고 확진자 동선 노출 식당 및 골목 식당 이용하는 착한소비 촉진 캠페인 진행
- 〈지역사랑 5% UP 캠페인〉 3월 13일, SNS로 전 직원이 급여의 5%를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살림의 5%, 용돈의 5%를 지역에 환원하는 캠페인
- 〈전주산 친환경농산물로 제철 밑반찬 나눔〉 3.26~현재까지 2회, 48명 참여하여 코로

나19 피해농가 돕기 및 복지관 휴관으로 끼니를 거르는 소외된 이웃에게 4찬, 김치 5kg와 마스크 400세트 지원

- <“안녕, 봄!” 전주푸드 열같이열무김치 판매> 4월 8일부터 김장 1일, 홍보 3일 20명 참여하여 코로나19 피해농가 돕기 위해 열무열같이김치 5kg 500개 김장 및 홍보 판매
- <전주농가 농산물 가족꾸러미 포장> 5.11~5.19 6회, 180명 참여하여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돕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 자원봉사자는 포장 활동에 참여

(5) 재난 약자 지원

- <중국 입국 유학생 사랑의 꾸러미 전달> 2월 28일, 2회, 28명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어 외출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꾸러미 130개 전달
- <코로나19 현장 간식 및 도시락 전달> 3.2~현재까지, 1,178명 참여하여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재난 약자에게 지역의 후원을 받아 간식 및 도시락 17,600개 전달
- <감염 취약계층 목걸이형 손세정제 지원> 6.26~7.8, 20명 참여하여 목걸이형 용기 구입 후 손소독제 채워 1,000개 장애인에게 전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액 및 전주시 손소독제 지원
- <재난약자 반찬 및 김치 등 지원> 6.3~현재까지 4회, 140명 참여하여 소외 이웃 반찬 및 김치 지원
- <재난약자 세탁봉사활동> 6.10~현재까지 2회, 25명 참여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 위생적인 생활을 위한 이불 등 세탁 봉사

② 재원조달 방법

- 평상시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연합모금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음. 그 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연계한 기부금품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재난대응 활동을 펼침

기관명	사업명	금액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재난 기금 (손세정제, 밀반찬, 계절김치)	2천만원
	코로나19 극복 감염취약계층 손세정제 나눔	3백만원
전북은행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전주의 착한소비'	1천2백7십만원
	코로나19 소외계층 계절김치 나눔 활동	1천만원
	, 사랑의 쌀나눔	1천만원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코로나19 확산방지 종사자 간식 전달	3백만원
	재난 소외계층 아동 운동용품 나눔 활동	1백5십만원
KT&G전북본부	재난취약계층 도시락 나눔활동	9백만원
전주 시설관리공단	독거노인을 위한 플러스 밀반찬 나눔	1백5십만원
하이트진로 전북본부	코로나19 극복 간식꾸러미 배달	1백5십만원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역할 중 하나가 재난재해복구 봉사활동임. 특히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자원봉사 센터장을 지원단장으로 지명하여 재난 상황에서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봉사 분야를 배치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전주시의 다양한 단체들과 평상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시 빠른 소통을 할 수 있었음. 특히 마스크 품귀 상황에서 마스크를 소포장하여 취약 계층에 전달하기 위해 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전주시도시혁신센터 등과의 빠른 소통을 통해 빠른 마스크 포장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전북도청으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봉사자 배치를 요구 받은 적이 있음. 하지만, 공적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있는 사업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것은 자원봉사 기본가치에 위배됨. 더불어, 개인약국이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음. 그래서, 봉사자 상해보험에 기본적인 감염병 보장을 협의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약국에만 자원봉사자를 배치함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심리방역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직접적인 현장 활동이 아닌 간접적인 활동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방역봉사 활동임.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

② 활동의 한계

-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이기에,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이 없어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했지만,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정부의 대응체계 변화에 맞춰 5차례의 대응 지침을 배포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됨
-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활동의 사례들을 취합하여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한 표준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나아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함
- 감염병에 대한 봉사자 안전 문제가 심각함. 바이러스 감염은 상해 보험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의 감염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음

③ 후속사업 여부

- 심리적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원예치유 봉사단 양성 계획 중임. 원예농가 에도 도움이 되고, 재난 속 지친 심신을 식물을 통해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 시 현장봉사활동’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준비 중, 선진국의 ‘생존빌딩(자가발전이 가능하여 대정전이 발생하여도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빌딩)’ 사례를 참고하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설치 및 축전 시스템 구비 예정

④ 필요한 후속조치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감염 위험에 대한 예방책과 보험보장체계가 필요함. 상해보험만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함
-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 가이드라인을 미리 준비하여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

(7)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권미영
- 직책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 주요업무 : 자원봉사센터 업무 총괄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설립 : 2010년
- 소개 :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2005년에 재정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의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국적으로 하는 인프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 기초 228개, 광역 17개, 그리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중앙 단위로 설치되어 있음
- 활동 :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 전국 사업, 전국적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 (1) 정보 전달

- <자원봉사 현장지침 전달> : 기존 자원봉사 활동이 대면, 팀, 스킨십을 통한 공감과 배려가 주요한 활동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봉사 방법을 고민함. 전국 자원봉사센터 246개와 등록된 자원봉사자 1300만 명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 지침을 6번에 걸쳐 전파함

- <굿바이 코로나 자원봉사 뉴스레터> : 19회 정도 전국으로 뉴스레터를 전파함.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된 우수한 자원봉사 사례들을 알림과 동시에, 지역에 맞게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활용한 물품 기부, 소수가 조를 이루어 택시나 대중교통 차량을 10분 안에 소독 방역하는 방역 정류소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전파함

(2) 캠페인 활동

- <마스크 양보 캠페인> : 마스크 400만장 제작하여 나눔, 공적 마스크 부족 사태일 때 “더 필요한 분들에게 공적 마스크를 양보하겠습니다. 수제 면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등의 마스크 양보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함

- <안녕키트/응원키트> : 초기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로 안녕 키트를 만들어 배포함. 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확립되었을 때, 해당 메시지와 키트 발송을 취약계층에게도 보냄. 의료진, 소방인력, 청소노동자들에게 건강식품과 간식, 감사 메시지를 담은 응원 키트를 만들어 전달함

- <안녕키트/응원키트> : 초기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로 안녕 키트를 만들어 배포함. 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확립되었을 때, 해당 메시지와 키트 발송을 취약계층에게도 보냄. 의료진, 소방인력, 청소노동자들에게 건강식품과 간식, 감사 메시지를 담은 응원 키트를 만들어 전달함

- <지역 농산물품 팔아주기 운동> : 학교 급식 농산물의 판로가 코로나로 인해 막히자, 지역 농산물을 우선으로 소비하는 운동 전개함.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2월 말부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부터 급여의 5%를 지역 상품권으로 사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함

(3) 방역 소독 봉사활동

- 골목, 재래시장, 소규모 상점 등 규모가 작은 시설이나 기관 등에 방역봉사단이 지역 별로 구성되어 소독함. 지역사회에서 소독을 담당하는 방역봉사단으로 활동함

② 재원조달 방법

- 2~3월에는 물품 기부가 많았고, 대구경북지역이 봉쇄되었을 때는 생필품 등을 전국에서 모아서 대구경북으로 전달함.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들이 조직적으로 진행함. 후원물품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것을 기대한 후원자들이 평상시보다 많은 기부와 물품을 많이 전달함

- 자체 재원은 별로 없고, 기부 조직의 기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 비롯한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음. 방역키트, 소독액, 소독통 장비, 도시락 등을 지원받아 전국에 분배하는 역할을 함. 기업, 정부 보조금 등을 요청하여 재원을 마련함. 농협에서 도시락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금 지원, 이마트의 에브리데이 배

송시스템 지원, 주식회사 유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지원, 유튜버 쓰양이 직접 기부 등 여러 방면에서 기부가 이루어짐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자원봉사 영역의 고유 활동을 계속 이어갔고, 대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조심하며 역할을 이어나감. 특히 자원봉사단체는 재난 대응이 중요한 사명이며, 산불이나 홍수, 태풍, 지진 등에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하였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주민자치와 마을 활동가 등과 많은 협력이 이루어짐
- 마을 조직, 평생학습 조직,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의 조직들과 코로나 확산 초기에 모여서 각자의 활동성이나 활동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좋았을 것임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자원봉사센터들이 상반기 동안 마스크 제작, 캠페인, 방역 소독, 취약계층 지원, 심리적 지원 등 10개 분야에서 약 76만 명 정도가 참여했음. 도시락, 마스크 등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들이 약 348만 명임
- 코로나 확산초기에 존재하던 서로를 배척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서로를 응원하는 활동들 및 선한 자원봉사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생각함. 자원봉사자들의 연대와 협력을 중요하게 가져가고자 함

② 활동의 한계

- 기부를 받으면서 행정 처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부전문조직과 협력하면서 기부금을 나눠 쓰고, 그러기 위해서 기부 전달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 등의 노력을 가해야함. 기부금을 직접 받으면서 드는 행정력이 만만치 않음.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기부조직으로부터 받고자 함. 기부전문조직에 제안서를 내거나, 기부조직이 먼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재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비대면 사회에서 활동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사회가 계속 변해가니,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음

③ 후속사업 여부

- 감염병 시대의 자원봉사 활동 가이드라인 작업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 백서를 제작 중임
- 재난 시 자원봉사 대응체계와 마을단위, 주민 중심의 방역체계 및 커뮤니티 방역 체계

를 갖추는데 자원봉사가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임

④ 필요한 후속조치

-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전국적으로 1,300만 명임. 지역주민의 20% 정도는 자원봉사자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교육이 필요함. “재난이란 무엇이고, 재난 시에 우리는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가”, 재난 시기에 총괄을 맡은 사람이 마을단위로 위험요인들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함
- 각 재난 유형별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피신할 것인지도 미리 교육하고, 장애인이나 독거 어르신처럼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체크하고, 안내를 누가 할 것인지 정하는 등의 세세한 활동들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이 됨. 이런 체계가 갖춰지면 재난 시기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음. 이런 커뮤니티 방역을 평상시에 진행해야함
- 시민사회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함. 재난에 대한 대응은 이슈에 대한 대응에 추가적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함께 있어야 함. 전국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응활동을 한눈에 보고, 서로 파악하면서 필요한 섹터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판을 벌려내는 것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나 주민운동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학습, 토론, 훈련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함

(8)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원민 사업총괄부 교류협력팀 차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김원민
- 직책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업총괄부 교류협력팀 차장
- 주요 업무 : 재난 안전 정보화 사업, 재난 안전 캠페인, 재난복구활동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 설립 : 1999년
- 소개 : 독립된 사단법인이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되어 주로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조율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하며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근거로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음

- 활동 :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운영기반 지원,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 자원봉사 활동 관리체계 고도화, 전산 시스템 및 관리자 역량 강화, 정책개발 연구 및 국제 협력, 온라인 플랫폼 운영 활성화, 서울 재난안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

- 3월 16일~4월 3일 3주간 100여곳에서 캠페인 진행. 자원봉사센터가 시작하고, 다양한 단체와 기업의 참여로 확산됨. 서울시가 제공한 면마스크를 사용하고, 공적 마스크 구매를 취약계층에게 양보하는 시민운동으로 진행. 기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 소방관, 감염 취약계층 등에 우선 전달

(2) 드라이브 스루 검사 의료 자원봉사자 모집

- 2월 말~3월 간 서울시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 의료지원단 모집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함. 개방된 옥외 공간에 이동식 진료소를 설치하여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함

② 재원조달 방법

- 자체 재원 활용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2017년 충북 괴산 수해재난과 포항 지진을 기점으로, 재난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과 시각 변화함. 재난자원봉사는 도시회복력을 키우는 일로, 재난 시 작동하려면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함. 따라서, 일상 프로그램으로 재난 구호소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심리방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대구지역 집단감염시기에 자원봉사자와 함께 센터의 관리 및 운영팀이 파견되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함. 비상 상황 시 재난현장으로 직접 지원 협력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 1차 대유행 시기,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시민들은 몰려 들었음. 하지만, 재난 발생 시 가장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구체적 파악해 두진 못했음. 필요 시 기존에 연대해 온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보거나, 지인을 통해 수소문해서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함. 평소에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잘 알아놓는 작업이 필요함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심리방역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물리적인 방역활동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민들에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컸다고 생각함

② 활동의 한계

-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에 해당하여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리됨.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해보험처리만 가능한 상황임. 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데 문제가 발생함. 행정 쪽에서 책임질 수 없으니 자원봉사센터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도 해서, 도움이 절실한 사각지대에는 도움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자원봉사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방관하면 안 됨. 책임 있는 주체들끼리 연대가 필요함. 협력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곳곳에 도움이 갈 수 있을 것임

③ 후속사업 여부

- 재난정보화사업을 진행 중임. 자원봉사활동이 통계수치로만 남지 않고, 각 재난시기에 어떤 도움들이 있었고, 여러 케이스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질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이 필요함
- 비대면 구호소캠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가격리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센터에서 식료품 보내고, 캠프 참가자와 직접소통하면서 실제 재난 시 어떤 세부운영 내용들이 필요할지 훈련 해보고,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격리상황을 경험해보면서 가족들끼리 오랫동안 붙어 지내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만상황, 이웃과의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겪어보는 것도 중요함. 관련한 소통 키트를 제작할 예정
- 가치소비캠페인도 운영 예정. 가족들끼리 밖으로 나가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해 직접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려고 함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시민사회 재난대응 네트워크가 꼭 필요함. 행정 쪽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나, 주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접근방식과 실행방식이 달라짐. 행정이 보지 못하는 문제나 사각지대를 챙길 수 있는 민간단체들끼리의 네트워크가 필요함
- 민간단체들도 코로나19 같은 사회경제적 재난이 발생하면, 각자 살아남기 바빠 연대가 어려움.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우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작업을 해나가야 함

(9)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하재찬
- 직책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 주요업무 : 사회적경제 지원 및 활성화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설립 : 2006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결성,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통합하여 2012년 발족
- 소개 :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운동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연대조직
- 활동 :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들의 정보 공유,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 등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코로나19 대응본부

- 2월 말부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사경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범사회적 경제대응본부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구성하게 됨
- 조사통계반이 코로나 초기에 현황을 파악 및 조사하고, 해당 통계를 정리한 뒤, 실행반으로 전환하여 중장기적 정책을 실행함
- 모금반은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 자체모금 1억 2천과 사랑의 열매의 코로나 대응 위기자금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함
- 사회적소비반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부의 호외시장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 6월 말까지 모금과 배분을 진행함. 향후 활동을 고민 중임

(2) 임대료 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재정적지원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유

지를 위한 임대료지원으로, 4월에 각 사회적경제 기업당 100~300만원을 지원함

(3) 코로나 관련 현황점검 및 사업제안 워크숍

- 이슈별로 현황을 점검함. 전국민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등이 왜 필요한지,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및 노동계와 사회적경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함
- 노동계와 사회적경제가 협력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의제와 현안을 정리하여 노동계에 제안하기도 하고, 노동문제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학습회를 진행함. 이것들을 바탕으로 11개 시도를 돌며 전국 순회 좌담회를 진행함
- 8/21 사업제안 워크숍을 진행함. 정부의 한국판뉴딜 정책에 앞서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제안과 사회적경제의 사업계획들을 발표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함. 하이브리드형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간의 사업자들이 서로 거래하고 돕는 것을 공정거래법상 처벌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4) 고용조정 제로 선언

- 300여개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여 고용조정 제로 선언을 함
- ‘고용조정 제로 선언’은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행위이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 울산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도 함께 선언함. 또한, 남양주시와 고양시 등 경기도의 두 군데 정도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와 함께 고용조정제로 선언을 진행함

(5) 사회적 경제 상생 마켓

- 사회적경제 상생 마켓을 진행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물품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특별전으로 열어 7~8억 정도의 매출을 도움
- 한살림, 두레생협 등 생협들이 모여서 지원함.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② 재원조달 방법

- 자체 모금액 1억 2천만원
- 공동모금회가 고용조정 제로 선언을 의미있게 보고, 코로나 대응 위기자금 일부를 매칭하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진행함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정보공유,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모두 기존의 활동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어짐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노동계와의 협력을 고민하는 중. 사회적경제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의 가치

임. 노동시장이 줄어들고, 노동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노동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학습 및 토론 진행함. 노동과 사회적경제의 협력이 새로운 노동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고용의 유연성이 고용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함. 어려워진 기업의 노동자가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고용되는 형태 등의 사회적 일자리 시스템이 필요함.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영세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커뮤니티단위로 기업들이 연결되어 노동을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함. 이를 노동계와 논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살림과 두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사회적경제를 돕기 위한 상생마켓을 진행하며 이 기준의 범위를 확대함.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가치를 인정하며 품질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는 등 협력이 진행됨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고용조정 제로 선언’이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이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음. 이런 의지들이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함. 더불어 사회적경제 영역의 각 주체들이 이번 선언을 기회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인함

② 활동의 한계

-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소비시장이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 하지만 생협 회원들을 중심으로 상생마켓을 열어 7-8억의 매출을 올렸음. 그중 6개 기업은 생협의 생산자조합원으로 가입함
- 지역, 업종, 분야별로 소통 연대의 틀을 갖추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음
-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는 한계점. 기업과 기업을 돕는 상생 협력기금의 필요성, 개인이 사회적 경제 랩에 있는 개인을 돕는 공제의 필요성이 부각됨

③ 후속사업 여부

- 향후 또 다른 재난 시기, 우리는 어떻게 작동하고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이 규모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단체를 위한 기금, 개인을 위한 공제가 필요함
- 8/21 워크숍을 통해서 향후 의제를 설정했고, 의제들을 사업화하여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이루어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과 제도개선도 필요함. 국회에 사회적경제 포럼을 제안했음
- ‘고용조정 제로 선언’이 지방정부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226개 기초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자체와 함께 선언을 이어갈 것임

④ 필요한 후속조치

- 기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4개 유형을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들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사회적경제영역의 연대활동은 업종이나 분야별, 혹은 지역 단위로 작동되어야 유의미함. 이를 위한 사경연대회의의 역할과 활동 또한 중요해짐.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도 중요한 과제임
-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조합으로 묶이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사경연대회의, 사회적경제가 품을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함. 예를 들어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꾸려서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10) 천안사회적경제연대, 장동순 집행위원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장동순
- 직책 : 천안사회적경제연대 집행위원장
- 주요업무 : 업무 총괄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천안사회적경제연대
- 설립 : 2018년
- 소개 :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의 부설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음. 천안의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임. 개인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회원가입은 단체만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주를 이룸. 다만 사회적경제에 동의하는 경우, 일반 소상공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함
- 활동 : 회원조직의 이해 대변 및 옹호 활동,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자본 형성, 정책개발 및 제안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취약계층 물품 나눔

- 의류 공방, 리사이클링 공방 등과 주간보호 기관,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들과

협력하여 면마스크 제작 및 취약계층에 지원함. 면마스크 제작을 위해 오전, 오후, 저녁 타임으로 나누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함. 해당 활동은 사회적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활동을 진행하였음

(2) 대구지역 지원

- 네트워크에 소속된 조직들 중 개별적으로 대구지역에 물품, 방역 등을 지원함

(3) 상호 구매

-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지 못함. 천안사회경제연대 회원사 혹은 우리동네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농산물들을 상호 구매함
- 로컬 농산물 유통업체 씨씨팜과 천안시가 협업하여 멜론을 상호 구매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약 20만원)를 협동자조기금으로 씨씨팜에 기부함. 더불어 수익금의 일부를 협동자조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회원사들에게 많은 권유를 진행하고 성과도 있었음

② 재원조달 방법

- 자체 재원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회원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금이나 물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함. 이전부터 형성된 행정(천안시)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천안시와 상호구매 등의 활동을 진행함
- 회원단체와 협력단체에게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위해 공동자조기금을 기탁할 것을 요청함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구매 활동을 진행함
- 활동가와 활동단체의 재생산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관계형성, 학습모임을 병행하는 중임
-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역 내 사회적경제 영역을 제외한 시민사회에게 연대를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시민사회가 사회적경제와의 관계에서 정확한 스탠스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음. 서로를 후원하는 것 이상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사회적경제 영역이 스스로를 사경대상 정책적 지원의 수혜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코로나19 대응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 스스로 사회적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더불어, 천안지역 내의 사회적경제 영역과 관련된 시스템이 작

동되는 성취감과 효능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② 활동의 한계

- 지역사회가 선도적인 의제를 가지고 필요한 욕구들을 모아 연대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연대활동은 표면적이고, 단순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 아쉬움

③ 후속사업 여부

- 코로나19 재난상황은 공동구매, 연대기금 등을 실험해보는 장이었음. 실험을 통한 체계를 남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함. 추후 전체모임에서는 연대기금 마련과 상호거래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 이런 사회경제적 재난과 위기가 또 찾아올 때를 대비해 사회적경제 영역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과 내용들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야함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재생산을 위한 시스템화 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안전하게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이 필요하고, 논의가 재개되기를 바람

(11)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주식회사 나비문고, 이영도 이사장, 대표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이영도
- 직책 :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이사장, 주식회사 나비문고 대표
- 주요업무 :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실무 업무, 나비문고 사업 기획 및 총괄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 설립 : 2020년 6월 30일
- 소개 : 더 좋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동 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되고자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울산 지역, 광역 단위로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 협의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2~3월부터 준비하여 6월 30일에 창립함. 현재 50개 기업이 있고, 연말까지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활동 : 사회적 경제 조직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 도우며 협동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협의함
- 단체 : 주식회사 나비문고
- 설립 : 2016년
- 소개 : 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짐. 책이라는 사물로 다양한 사회 가치 구현에 도전하는 기업조직. 독서문화 및 양질의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 활동 : NO플라스틱 공모전, 다큐멘터리 상영회, 건강토론포럼, 전태일 50주기 기념 독선토론회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나-1. 코로나19 대응활동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① 주요 활동

(1)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추진위원회

- 4월, 80개 이상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함. 전국적으로 ‘No 고용조정, Yes 함께 살림’ 캠페인 진행. 일자리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21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하여 노사대표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캠페인 진행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함

(2) 울산사회적경제 자조기금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긴급대출 진행하고자 함. 밴드 파운데이션과의 협약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신용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기조직 긴급 대출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함

② 재원조달 방법

- 재단법인 밴드로부터 밴드 내 설치/운영 중인 울산사회적경제 자조기금에 자금이 매칭되어 지원 예정임. 이 자금으로 위기조직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실행하고자 함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최근 설립하였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 협력과 연대 활동이 절실한데, 쉽지 않아서 안타깝고 고민이 많음

나-2. 코로나19 대응활동 (주식회사 나비문고)

① 주요 활동

- 코로나 1차 대유행 시기 책을 트럭에 싣고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방문하여 일정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홍보를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가구당 2~3권씩 책을 나누어주는 서비스를 울산 내의 5개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진행함. 나비문고를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교보문고로부터 책지원, 인쇄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부터 포스터인쇄 지원을 받아 주민들에게 책을 기부함

② 자원조달 방법

- 현재는 자체조달로 운영하고, 책드림 서비스의 경우 여러 사회적기업들의 협력과 교보문고의 물품 기부로 진행하여, 자체재원이 많이 들지 않음
-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재단법인 밴드로부터 밴드 내 설치/운영 중인 울산 사회적 경제 자조기금에 자금이 매칭되어 지원 예정임. 이 자금으로 위기조직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실행하고자 함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도서를 기증하는 활동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매달 진행했음. 평소에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돕는 하나센터, 장애인 부모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기부했음. 비영리단체에는 현금을 기부하기도 함. 매출의 1%는 항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인쇄와 디자인을 하는 사회적기업 ‘코끼리를 키우는 사람들’, ‘비잇’이라는 디자인하는 젊은 예비 사회적기업,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협동조합,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차랑’, 당시 예비 사회적기업이었던 ‘나인 도어스 공정여행’ 등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진행하고, 교보문고가 학용품이나 책을 기부하여 협력함

다-1. 자체평가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

① 활동의 효과

- 사회적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 추진위원회에서 함께 만난 사이끼리 같이 ‘책드림 사업’을 하기도 함

② 활동의 한계

- 상근자가 한 명도 없고 임원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진행하는데, 임원들 또한 본인들의 업무가 바빠서 실무가 제대로 나누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분장한 뒤에 재촉하기도 하고, 직접 진행하기도 함
- 밴드 파운데이션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서, 당사자 조직 특유의 능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쉬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나 대출 등을 은행에서 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 요청함.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사회적기업이 갖는 가치가 조금 흐려질 수 있음.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의체가 중요함

③ 후속사업 여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만들어 사회적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추진하는 중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도 하고, 좋은 인적자원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남아서 파트너로서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사회적기업들의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임. 현재는 개인적 의지로 많은 일들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자발적인 활동의지만을 기대해서는 활동지속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함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연대협력을 위한 시간들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서로 바빠서 연대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성원이 부족해서 회의 성립조차 힘든 상황이 되면 연대 자체가 무의미해짐

다-2. 자체평가 (주식회사 나비문고)

① 활동의 효과

- 공동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신뢰가 생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였으며, 지자체를 대할 때 설득력이 생김

② 활동의 한계

- 연대활동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함으로써 각자의 기업들이 원래 상시적으로 해오던 활동들이 부실해질 위험이 커짐
-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역할이 잘 배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연대활동 시 필요한 일감을 분배하기가 어려움. 또한, 연대활동 시 구성원 개인의 활동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③ 후속사업 여부

- 현재로서는 없음.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 사업진행이 어려움. 적자가 계속 되는 상황이라 코로나19 대응활동을 지속하기는 어려움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연대협력을 위한 시간들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서로 바빠서 연대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성원이 부족해서 회의 성립조차 힘든 상황이 되면 연대 자체가 무의미해짐

(12)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 김영아 대표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김영아
- 직책 :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대표
- 주요업무 : 사업 계획, 총괄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igration to Asia Peace, MAP)
- 설립 : 2015년
- 소개 : 이주민 중에도 주로 난민에 집중하여 지원 및 옹호활동을 함. 한국에 온 난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함. 또, 시민들을 만나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 병행하며 공익 변호사, 인권 변호사 단체와 함께 난민인권네트워크로 활동하기도 함. 실무자 4인
- 활동 : 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 도서관, 민주시민교육, 평화인권교육, 아동이나 난민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연구, 사례 스터디, 난민 건강 증진 사업(건강 정보 카드뉴스 배포, 난민 정기 건강검진 행사 등)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정보 전달 카드뉴스

- 1월 초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및 뉴스, 방역지침 등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전달함

(2) 난민/이주민 직접 연락 및 지원

- 2월부터 난민, 이주민에게 직접 연락하여 한부모 가정의 돌봄문제, 실업문제, 월세 및 의료비문제 등 생계문제를 밀접하게 파악함
- 4월부터 8월까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기금으로 한부모가정, 5인 이상 가구, 장애 질병이 있는 사람, 소수민족, 기타 5대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 진행함. 아시아 평화

를 향한 이주(이하 MAP)를 통해 전국 220개 가정, 26건 케이스가 지원을 받음

- 4월부터 방역 마스크, 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 직접 지원함. 건강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보하여 신청을 받은 후 데이터 정리, 직접 택배로 물품 배송 지원함

(3) 정부정책 대응활동

- 3월 6일, 공적 마스크 제도 ‘마스크수급 안정화 대책’ 으로 인한 외국인 차별 규탄, 대책 촉구 성명
- 3월 26일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이주민 배제 규탄 성명 발표

(4) 난민 관련 언론 대응 활동

- 3월 21일, 외국인 마스크 지원 문제에 대한 언론 대응활동으로 인터뷰에 난민 당사자를 연결하여, 난민의 현실과 실태를 널리 알림

(5) 토론회 및 간담회

- 3월에 코로나19 방역에서 실종된 난민과 관련된 토론회, 4월 서울시 비서실, 협치과 등과의 간담회 진행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중국동포, 난민,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분야의 여러 단체가 모인 회의를 통해 이주영역 쪽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기준 및 대상 등 마련” 간담회 진행함. 5대 취약 계층(한부모가정, 5인 이상 가구, 장애 질병이 있는 사람, 소수민족, 기타)등을 논의

② 재원조달 방법

-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난민 건강증진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카드뉴스 제작 시 번역자에게 번역료 등의 비용 지원
- 마스크, 식료품, 박스, 현금 등의 시민 모금 (난민에게 마스크를 보내긴 위한 배송비를 위해 현금으로 모금)
- 다문화 단체로부터 마스크 및 현금 모금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한 이주민 생계비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한국이주인권센터, 희망의친구들, 이주민 건강 단체 등이 여성단체들과의 협력으로 기금 마련하여 사업 진행)
- 세이브더칠드런 난민 아동 지원 사업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평상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며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병원비 지원연계와 통역제공 등의 역할을 해왔음.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도 건강사업 카테고리 안에서 비슷하게 진행함
- 아동가정 모니터링 및 유치원 연계하는 일을 해왔는데, 원래 지원하던 난민관련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한 가정과 난민아동들에 대한

상황 및 정보 파악이 원활했음. 또한, 전국 단위로 진행한 사업이었기에, 각 지역과 가정, 난민공동체의 상황들을 파악하여 언론 및 다른 시민단체 영역에 전달할 수 있었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이주민이나 난민 단체들끼리는 평소의 네트워크가 끈끈하고, 전국 이주민 활동가 대회를 하는 등의 활동가들끼리의 교류가 활발해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연대가 원활했음. 청와대나 서울시 등에 연락을 할 때에도 개별 단체가 독점해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로서 활동이 가능했음
- 서울시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다양한 영역의 시민단체들을 모아 서로의 일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연결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아쉬움
- 글로벌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처럼 지자체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역할이 커졌고, 해당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되면서 현재의 시민단체의 역할이 축소됨. 난민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난민의 생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리는 역할을 하면, 정작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지자체 산하의 네트워크로만 이루어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음
- 학교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학교를 통해 등교하지 못하는 위기에 놓은 난민가정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교회공동체들이 물자를 후원하면서 난민가정과 결연을 제안했으나,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가정방문조차 어려워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못함
- 여수YMCA에서 전남 지역의 이주민,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음.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전남지역의 자원들이 대구로 모두 쏠리는 바람에, 전남지역의 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평상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며 난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문제나 위기가정의 경우 병원비 지원연계, 통역제공 등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 평소에 연대하던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의 소외계층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음
-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난민과 이주민들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직접 지자체와 만나서 대안을 요구하며 이주민 인권 진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활동을 하였음. 이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한 조치를 시정하게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이후 한 달 동안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음

② 활동의 한계

- MAP은 난민과 복지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단체로, 직접구호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난민들을 위한 자원도 부족하고, 감염병 확산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체에서 직접 구호품을 전달했음. 평소에 더 자세히 난민들의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달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임. 특히 마스크 배부 같은 경우는 아동과 성인까지 구분해야 하는 등 더 세밀한 데이터들이 필요했음
- 상반기에는 공적마스크 행정조치에 외국인 배제로 인해 이주민과 난민들이 심리적으로 공포심을 크게 느꼈던 것이 아쉬움. 난민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인종, 종교적 낙인으로 존재하는데, 정부에서 공적마스크 배부에 난민을 제외한 것에 대한 난민들의 실망과 공포가 심각했음
-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난민인정자⁵⁾에게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경기도, 대구, 안산 등을 조사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이주민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실망스러움
-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일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남.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들의 생계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음
- 긴급한 구호활동을 진행했지만, 옹호활동이나 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체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지는 못했음. 특히 이주민 단위 네트워크가 공동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직접 중앙정부에 닿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정해내지는 못했음

③ 후속사업 여부

- 건강정보 전달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코로나19 대응활동들을 이주민 진영에서도 따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음
- 난민당사자, 난민커뮤니티와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음. 난민커뮤니티, 난민당사자들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④ 필요한 후속조치

- 난민단체들은 워낙 영세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고, 외부모금이나 후원을 받더라도 운영비로 쓰기가 어려움. 외부지원이나 사업들이 사업비가 아닌 일상운영비로 쓸 수 있기를 바램

5) 난민인정자 : 난민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 자유로운 취업과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교육팀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김혜정
- 직책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팀장
- 주요 업무 : 실무전반 및 상담, 법률지원, 쉼터관리, 이주여성 한국어/폭력예방/인권 등 교육 프로그램 진행, 이주여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안과 캠페인 진행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설립 : 2000년
- 소개 : 전국 5개 지역 지부 및 부설기관 쉼터 6군데, 충북, 전남, 서울지역 상담소 운영
- 활동 : 이주여성 단일주제로 활동했으나, 때에 따라 아동지원 및 인권침해 사안, 이주관련단체와의 연대활동도 진행하고 있음.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함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 (1) 지자체 정책 중 이주민 배제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정부의 공적마스크 정책 및 지자체의 긴급 생계비지원에서 이주민이 계속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생기고,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는 가족구성원 숫자만큼 마스크를 보급했는데, 이주민은 제외되는 등의 소외현상이 발생함
 -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긴급생계비에 이주민을 제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서울시의 경우 정책을 변경하여 이주민을 포용하게 됨
- (2) 이주민을 위한 방역물품 및 생필품 지원 (4월~8월)
 - 전국 67개 이주민단체 및 이주민쉼터에 생필품과 방역물품을 지원함
 - 1200여명의 한부모가정 등에게 기저귀, 분유 등의 생필품을 직접 지원함
- (3) 소외 이주민 긴급 생계비 지원 (7월~8월)
 - 전국에 있는 이주민 중 소외된 이주민들(한부모가정, 5인 이상 가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성소수자, 소수민족)을 위해 긴급 생계비 30만 원을 1749가구에 지원함
 - 전국적으로 이주민 단체, 교회 등 다양한 단위 80여개 단체에서 직접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상담한 후, 추천서류를 통해 신분증 등의 서류가 없이도 기존 상담 데이터 등을 통해 신변을 확보하여 1900여명의 신청을 받음
- (4) 이주민을 위한 방역 지침 및 코로나 정보 번역 제공

- 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코로나19 초기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불편함을 겪는 이주민을 위해 번역작업을 하여 이주민들에게 전달함
 - 여성가족부에 번역작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안하여, 다누리 콜센터에서 지침과 안내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함
- (5) 이주민 긴급 재난지원을 위한 토론회 (7월 28일)
-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정책대응, 긴급생계비 지원, 대구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평등한 재난지원을 향한 방향모색 등에 관한 토론회 진행

② 자원조달 방법

- 아름다운재단 5천만 원, 바보의나눔 5천만 원, 사랑의 열매 5억 원을 지원받아서 방역 물품, 생필품,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활용함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들의 실태가 심각하여 구호활동까지 함께 하게 됨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전국 이주민관련 네트워크 단체 80여개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 생계비를 1749명에게 지원할 수 있었음. 지역의 단체들이 직접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이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을 상담하고, 신청서류 작성까지 도와주어 센터에서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음. 지역단체들과 센터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
- 난민, 이주민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지자체의 정책을 수정 및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평소 정책제안, 교육, 상담 등의 업무만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구호활동까지 하면서 포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됨

② 활동의 한계

- 이주민에 대한 언론의 혐오보도와 전반적인 이주민 혐오 정서가 너무 심했는데, 이를 해결하지는 못해서 아쉬웠음. 특히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해 대립동의 중국인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낙인을 피하기 위해 과할 정도로 방역을 했음. 이런 노력 덕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방역을 위한 노력과 결과들은 언론이 조명하지 않았음

- 배제가 방역을 돕지 않고, 코로나는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음. 외국인도 정부의 보호조치 안에 있어야 방역이 제대로 되는데, 이주민들이 배제되어서 아쉬움
-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각지대를 더 만드는 정책을 펼쳤음

③ 후속사업 여부

- 제도개선과 정책 제안활동을 지속할 것임. 이주민 관련 기관들과 MOU를 제안하고 있음. 연대활동을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예비변호사들과 헌법, 지자체법, 외국인지원법 등에 대해 공부하며 외국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음
- 난민, 이주민 단체들과의 연대 지속할 것임

④ 필요한 후속조치

- 미등록이주민 중 여성의 경우, 의료비 지원 및 책정이 어려웠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주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정부의 지원조치가 필요함
-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정부의 이주민 센터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고민, 토론 등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외국인 포용과 배제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되었어야 함
- 외국인 관련 긴급재난시의 보호법령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
- 정부가 이주민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직접 등록된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미등록 외국인들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배제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14)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나영정 활동가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나영정
- 직책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활동가
- 주요 업무 : 긴급대책본부 실무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 설립 : 2020년 5월 12일 발족

- 소개 : 2020년 5월 7-8일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 관련 언론 혐오 보도들이 양산됨에 따라 성소수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움',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등 무지개행동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모여 대책본부를 꾸림. 5월 12일 출범 기자회견 이후 공식적으로 23개 단체가 모여 본부 체계로 운영 중
- 활동 : 성소수자 혐오 보도 및 정책 관련 모니터링, 상담운영 등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방역당국 및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 5월 이태원 발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성소수자가 검진을 받을 때 혐오나 차별 없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익명검진 등의 방안을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고 혐오나 차별사례를 직접 모니터링함
- 검진 대상이 성소수자일 경우 당연하게 HIV의심군으로 대하여 강제로 HIV테스트를 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에 대응하여 중단하도록 요구함
- 언론의 혐오보도 관련하여 기자회견, 성명발표를 통한 즉각 대응을 진행함

(2)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성소수자 앱 등에 검진 독려 및 홍보

- 5월 이태원 발 집단감염 시기 서울시와 협력하여 성소수자들이 익명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앱 내 홍보사업을 진행
- '우리를 지키기 위해 검진을 같이 받자, 인권침해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함께하겠다' 등의 평화적 메시지를 발행

(3)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상담 운영

- 검진과정에서 당한 차별 및 혐오 발언에 대한 상담진행
- 확진자 신상 공개 및 동선 공개로 인해 발생한 사생활 침해, 정체성 공개 등에 대한 상담 진행

(4) 모든 활동을 기록하여 백서로 제작

- 모든 활동과정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백서로 제작하고 평가하는 인권 포럼을 개최 예정

② 재원조달 방법

-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개인 후원금 (모금을 따로 하진 않음)
- 홍보사업의 경우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과 예산을 사용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5월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성한 연대 체임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동선공개 모니터링 중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이주민이 이태원클럽 다녀오신 분이 있었음. 부천시장이 이 이주민에 대해 ‘베트남 국적자이며 이태원 클럽 다녀와서 확진됐다’고 개인 SNS에 글을 올린 사건이 있었음. 부천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동선공개 지침에 따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천시장은 ‘그럴 수 없다. 불법체류자라 역학조사에 협조 안 하고 있고, 말이 계속 바뀌어서 큰 일 났다. 베트남이라고 쓰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검사 안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수정 요구를 받지 않음. 직접 해당 이주민을 찾아서 상담을 하거나 지원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함. 이주민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못한 부분들 중 하나임
-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연결과 질병관리본부와의 연결이 있었으나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지자체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부재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면이 있었음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앞으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확장해야 할 필요를 느낌
-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을 통해, ‘아 단체나 지자체가 우리를 위해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 검진만을 목표로 한 강압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검진을 같이 받자, 인권 침해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는 유효했다고 평가함
-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확산 당시, 정보공개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검사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지침이 도입되고, 방대본의 확진자 동선공개 관련 가이드라인이 수정된 점은 긍정적임. 현재 3차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성별, 나이, 직장, 국적까지 명확하게 가리라고 지침이 내려진 상태임
- 기존에도 혐오세력에 대한 대응, 인권침해 대응을 주로 했는데, 이번 활동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이 매우 컸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고 싸워야할 대상이 명확하다 보니 연대와 협력이 빠르게 이루어짐. 성소수자 진영 내의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대책본부에 참여한 활동가들끼리 서로 합이 잘 맞아서 가능했다고 생각함. 지자체와 협력하는 전례 없던 과정도 있었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지지도 많이 받음. 단기간에 바꾸어낸 성과들도 존재하다보니, 기존의 패배적이고 힘들기만 했던 활동에 비해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은 측면이 있음

② 활동의 한계

- 지자체와의 관계 수준은 낮다고 평가함. 소수자 및 약자들이 차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음.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사태로 지자체와 한 달 정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사안의 긴급성이 떨어진 이후에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음. 처음으로 지자체와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해봤지만 방역을 위함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음. 이후 다른 차별시정 관련한 공동사업이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③ 후속사업 여부

- 이번 활동을 기록해서 백서형태로 제작하려고 준비 중
- 성소수자 인권포럼 개최 예정.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평가하는 세션 준비 중
- 언론대응 및 고발 등 법률사건도 계속 팔로우할 예정

④ 필요한 후속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나와서 이후 예상되는 대유행에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인권침해요소 없이 방역을 하게 해야 함

(15)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랄라 활동가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랄라
- 직책 :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활동가
- 주요업무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인권활동 전반, 네트워크 회의진행 등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 설립 : 2020년 3월
- 소개 :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 침해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다가 모임을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함. 코로나19 관련한 인권대응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현재 20여개 단체들과 함께하고 있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

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활동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인권침해 이슈마다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함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인권단체 활동가 집담회

- 3월 11일 첫 모임 : 2월 말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확산되던 때,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모임을 제안하여 회의를 개최함. 코로나19 상황에서 강력하게 집행되었던 행정지침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집회시위가 차단되는 문제들, 격리 및 강제조치와 집합금지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토론함
- 영역별 문제공유 및 토론 : 각 영역별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공유함. 장애인의 집단 코호트 격리,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문제 등을 다루며 전체 3-4차례 토론을 진행함
- 사회적 가이드라인 작업 : 코로나19 상황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 인권침해의 문제들을 토론하며 그를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과 감염병·공중보건 위기의 상황에 지켜져야 할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작업함

(2) 행정 조치들에 대한 성명/기자회견 등 대응 활동

- 4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안심밴드로 감시 및 관리”하는 지침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의료와는 전혀 무관한 징벌적 격리를 도입한 것은 위험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조치”라고 비판함. 서울시 민관협력반에 참여하며 문제제기도 동시에 병행하였고, 밴드 관련 조치는 무산되었음
- 5월 이태원 코로나 확산시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문제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함
- 5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에 대해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함

(3)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 인권 침해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사회적재난과 감염병·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필요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함
- 6월 11일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발표회를 진행함

(4) 의료공백 TF팀

- <의료 공백 TF팀> : 아무런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산 정유엽 청소년 케이스를 계기로 의료공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함. 의사집단이나 의료체계의 진료 거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임. 설문조사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협이 진료거부 등으로 잠시 멈춘 상태

② 재원조달 방법

- 소속단체들로부터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게 할 수 없어서, 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함. 행사 때마다 자비로 식사하였음. 각 단체의 고유활동도 함께 진행되었고, 코로나19 대응활동이 급박하였기에, 모금기획을 마련할 수 없었음
-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행사의 경우,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의 기금 2백만 원을 받아 발표회 행사를 진행하였음
- 정부나 기업지원을 받으면, 단체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고민이 있음. 단체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외부 지원을 받는다면 단체의 목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음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인권활동은 누군가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함.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인권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데, 기존에 활동하던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는 활동이었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네트워크에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공동작업을 진행함. 정보인권,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집회 및 시위, 노동권 등 다양한 단위와 함께 각 분야의 인권침해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하여 활동함.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았고, 어렵지는 않았음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예: 4.16 세월호)은 많았으나, 코로나19는 개별 영역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진행하는 형식의 활동이었기에, 또 다른 경험이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성소수자, 전반적인 인권들이 각각 고민했던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며 공동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의미 있었음
- 네트워크가 의원실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태원클럽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네트워크 외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서 진행한 것 정도의 느슨한 협력이 있었음
- 서울시에서 확진자 동선공개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대책본부 등과 함께 동선공개, 정보축적 관련 매뉴얼 작업을 진행 중임.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도 참여 중임. 정부나 지자체와의 협력, 혹은 다른 영역들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진행하기 어려움. 이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공중보건의 위기는 사람들을 혐오로 몰아넣었음.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사회는 포섭되고, 그 안에서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문제가 심각했음. 개별 단체로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꾸려 공동으로 긴급 대응하게 됨. 공동으로 대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각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막막함을 공동의 의제로 가져와 서로 협력하는 점이 잘 되었던 것 같음
-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임. 다음 위기가 찾아 왔을 때,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이 보고서를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② 활동의 한계

- 회의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온라인 토론 소통방식이 아직 낯설고, 깊은 고민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회의들을 대면으로 진행함.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음. 온라인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이 듬. 회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의 형태와는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함
- 예산이 없다보니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기 어려웠음
- 각자 개별영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로 모이는 단위가 많지 않았음. 느슨한 연대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음

③ 후속사업 여부

-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 이제 인권운동이 내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할 예정임. 의제중심으로 구호만 외치는 인권운동이 아닌, 또 다른 인권운동의 전환이 필요함.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 느슨한 연대체로서 공동대응을 지속할 예정임. 지금도 인권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 의료공백 등 해소되지 못한 이야기가 있고, 이에 대해 공동으로 힘을 모을 예정임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 조금 더 여유롭게 서로의 고민을 나눌 시간이 필요함
- 코로나19 생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네트워크 차원에서 하기에는 개인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함. 질적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별 반응은 없음. 생존자에 대한 인권, 생존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문제, 완치하고 돌아왔을 때 생활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음

- 공공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자 함.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가장 먼저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는데,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사회적 소수자, 약자, 특히 노인, 어린이들이 많았음.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임. 공공기관을 먼저 폐쇄하고 학교가 멈추면서 돌봄이 사회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됨. 공공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어서, 보호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짐.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가기관이 멈추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일이 멈춰버리게 됨.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 방역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지만, 구상권 청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부, 지자체가 방역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함
- 질병관리본부에 인권담당관이 있어서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가이드를 만들고, 지자체들에게도 배포하는 식으로 인권침해 대응활동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음

(16)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희우 활동가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오병일
- 직책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주요업무 : 정책 분야 총괄 및 참여

- 이름 : 희우
- 직책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업무 : 정책담당, 정보인권 분야 전담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진보네트워크센터
- 설립 : 1998년
- 소개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영역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옹호를 위해 1998년 출범했음. 전체 상근자 7명,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활동 : 정보인권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이슈 및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 정보공유 문제 등 다양한 정책 활동 전개함. 사회운동 영역의 정보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 개인 등을 위한 웹 포스팅 서비스,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운동에 유용한 플랫폼 개발 및 제공(소셜 펀치), 유튜브 채널 운영(따오기)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참여 활동

- 2020년 3월부터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를 만들고 방역지침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정보인권, 정보권리에 대한 옹호활동을 진행함
- 여러 분야에서 침해되고 있는 권리에 대한 학습회, 토론회 등을 진행함.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권학술대회를 주최함

(2) 서울시 정보인권 회의 TF팀

-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방역담당자, 전문가, 감염의학과 의사 등이 참여하여 서울시 확진자 동선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함. 정보인권 관련 동선공개 지침을 발제하고, 조례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함

(3) 코로나19 정보인권 관련 성명 및 민원 등 언론 발표

-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성명 발표 (3/26)
-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발표 (5/26)
- [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개민원] 민원 신청 (6/2)
- [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되어야] 질병관리본부 공개질의 (6/3)
-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7/30)
- [확진자 동선공개, 왜 개선되지 않는가] 보도자료 제출 (10/7)
-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개인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기고문 작성 (10/20)

② 재원조달 방법

- APC 국제네트워크의 정책캠페인 프로젝트로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수집, 확진자 동선추적 등에 대한 영문보고서 작성하여 지원금 받음
- 코로나19에 대한 별도의 재정은 없었고, 모금을 진행하지도 않았음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정보인권 분야는 원래 활동했던 내용이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음.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이 원래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정책개선, 법령개선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방역당국이 발행하는 지침이나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탐색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 장애인, 인권변호사 등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모여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리침해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음. 다만, 너무 방대한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팀을 꾸려 집중 활동 중임
- 서울시 정보인권 회의 TF에 참여해 확진자 동선 공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발제를 하고, 서울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함. 현재는 서울시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후속 모임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오픈넷 등과 함께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함
- 진보넷의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연대활동을 주로 해옴. 민변, 참여연대, 보건 의료 단체 및 소비자단체, 인권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고민을 나누며 새로운 연대를 만들 수 있었음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에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고하기도 하면서 법령까지 심화해서 생각할 수 있었음. 활동분야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음
- 메르스 때에도 확진자 동선추적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이번에는 언론대응 등 다양하게 대응을 하면서 정부의 지침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꼈음.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규범들이 많이 생기고, 향후에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함

② 활동의 한계

-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단체입장에서, 방역당국의 '국민을 위한다'는 거대한 명분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한국의 방역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독특함. 국내의 정책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오롯이 활동가들이 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음

③ 후속사업 여부

-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인권 이슈 및 사례들을 정리해서 영문보고서를 만들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 배포할 예정임
-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입법대안을 만들어서 입법캠페인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운동을 이어갈 예정임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서울시 뿐 아니라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들과의 협력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음.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끝나는 협치가 아닌, 심화된 활동과 협력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음. 정부의 필요에 의해 꾸리는 방식보다, 꾸준히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함

(17)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전진한
- 직책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주요업무 :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 전반, 정책 생산 및 제안 활동(기자회견, 성명서 작성 등), 연대사업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보건의료단체연합
- 설립 : 2001년
- 소개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의료 강화 및 노동자 투쟁 지원, 민주주의적 문제에서도 건강권 관련 사안들에 대해 활동하고 있음
- 활동 : 보건의료 정책 관련 공공성 강화 활동,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투쟁 지원(민주노총 투쟁, 병원노동자 투쟁 지원 등),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 운동, 성소수자 탄압 및 차별에 대한 의학적 대응, 반전운동,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권 관련 활동, 무료 진료활동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코로나19 관련 정책 대응 및 제안

- 병상 및 공공의료 확충 주장, 공공의료기관 및 인력 확충에 대한 대안 제시, 비상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 대응, 유급병가, 상병수당, 가족돌봄 휴가 및 돌봄인력,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제 확대 등 사회정책 확산 운동, 저소득층 생활보장 요구, 의료민영화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의료 정책 비판, 개인정보 활용, 개인에 대한 차별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 성소수자 및 외국인혐오에 대한 대응활동 등
-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방송출연, 토론회, 기자설명회 등을 통한 이슈화 활동
- 정책 대응활동을 위한 연대활동 (코로나19 시민대책위,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2) 코로나19 관련 아카이브

- 현장의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함

② 자원조달 방법

- 자체재원 (회원단체 분담금)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기존에 해왔던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인력 확보, 상병수당 등에 관한 활동이 코로나19확산 시기에 평소보다 공론화되고, 인식이 확산되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사게 된 것 같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공공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단일의제를 다루는 ‘우리동네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구성을 계획 중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코로나19 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음. 시민대책위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많은 단체들이 신속하게 참여한 점은 의미 있다고 생각
- 그러나 시민대책위가 다양한 민간영역의 목소리를 풍부하고, 영향력 있게 발화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함. 집회 등 정부를 물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다양한 목소리를 발화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보장받고,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공공의료의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기여함. 정부를 압박하여 피상적으로나마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반응을 유도하였다고 평가함

- 시민사회 운동진영의 인력이 정부 주요직책에 참여하고 있어서, 공공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배분하는데 기여함

② 활동의 한계

- 공공의료 관련한 예산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함
- 단체의 한정적인 재원과 인력으로 인해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한 상황. 인력 확충이 필요하나, 그럴만한 재원은 없음

③ 후속사업 여부

-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마련, 공공의료기관 및 간호인력 확충 등에 관한 의제 대응활동 지속할 예정임
- 저소득층의 의료공백을 실제로 채워줄 수 있는 활동(실태 조사 및 공론화)
- 지역사회에 공공의료,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운동본부 구축하고 지역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준비 논의 진행 중임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특허에 대한 각국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및 논의
- 간호인력 부족 원인과 개선책, 법률 제·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자 발행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인력확충이 필요함. 의제대응을 위한 대외협력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개발 등을 활발하게 하고 싶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정책분석 수준의 활동만 유지하는데 아쉬움이 있음

(18)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윤성미 총괄책임자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윤성미
- 직책 :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총괄책임자
- 주요업무 : 강서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원, 협력촉진,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강서지역 커넥터 역할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강서시민협력플랫폼
- 설립 : 2017년
- 소개 : 강서시민협력플랫폼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강서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통한 지역 협치 활성화를 비전으로 활동함. 개방성, 연대성, 자립성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민·민간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를 도모함
- 활동 : 강서지역 시민사회의 소통과 지역 네트워크 조성, 시민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협치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연대를 촉진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코로나19 강서 응원꾸러미 (십시일반 모금 및 응원꾸러미)

- 코로나19의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공적의료진, 담당공무원, 청소/방역 비정규직 노동자,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응원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함
- 응원꾸러미의 물품은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윤리적 가치가 담긴 물품(강서지역 4개 생활협동조합(강서아이쿱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환경연합에코생협,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이외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 상생상회 등)으로 선정하고, 꾸러미를 받는 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지역단체에서 손수제작한 면마스크, 십시일반 지원된 마스크, 핸드크림과 마스크팩,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영양제, 업무 중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 종류로 채움
- 4월 16일에 시민모금에 참여한 개인,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사람중심 컨베이어벨트 꾸러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준비물품 꾸러미를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받은 메시지 스티커를 부착함
- 응원꾸러미 전달 대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구지부(보건소 공적의료진 및 청소/방역 비정규직 노동자 및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노조이화의료원지부(선별진료소)에서 선정하여 이대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 30개, 강서구청 안전관리과 등 주민을 대면하고 담당하는 부서에 20개, 강서구보건소에 200개, 지역단체를 통해 방문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4월 17일에 전달함

② 자원조달 방법

- 4월 8일~12일 시민모금활동으로 강서지역 내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25개, 지역주민 12명이 참여함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기존에 지역시민단체 및 영역별 네트워크 활동, 지역정보 수/발신 등 지역 협치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해왔음.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활동, 소식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5일 간의 모금기간 동안 지역의 시민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지역 내 노동조합들의 참여로 짧은 시간 내에도 연대의 마음이 잘 모아졌음. 단순히 모금 참여만이 아니라 꾸러미 준비를 위한 구매, 제작, 전달의 전 과정에서 함께 참여해 단순협력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경험함.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 상황에서 중반에 모금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미 자체적으로 모금/지원 활동을 했던 단체/기관들이 존재했고, 특정 분야에서는 주최하는 기관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협력이 어렵기도 했음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재난상황에서 지역의 단체/주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협력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음. 지역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재난발생시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잘 연결됨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의 경험을 통해 재난시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음. 코로나19 시민사회 비공개집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구성의 욕구 및 필요성을 확인함
- 재난상황에 강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확인함

② 활동의 한계

- 재난상황에 의지와 능력은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들이 있었음. 재난상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지역의 인적자원들이 재난시기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역 내의 다양한 활동영역들이 각자의 영역을 나누거나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지역 그림 속에서 역할을 찾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함께 협력하여 성과도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코로나 상황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거리두기 등의 지침으로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이 아쉬움

③ 후속사업 여부

-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하는 시민사회 비공개집담회를 진행하고, 추후 공론장을 제안할 예정. 후속사업으로 <재난시대 지역사회 전환>에 대한 강의를 계획 중임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일상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분야와 영역을 뛰어넘는 시민사회와 행정의 상생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의 힘을 만들어야 함.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 시에는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세심한 관계 맺기가 필요함. 행정이 주도하는 자리에 민간이 배치되는 방식이 아닌, 설계할 때부터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보장된 진정한 의미의 민관거버넌스가 되어야 함. 또,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거버넌스가 되기 보다 민간의 철학과 경험이 존중되어 행정체계 내의 칸막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참여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논의구조, 접근성을 고려하면 더 작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설계되고 작동되어야 함

(19) 전주도시혁신센터, 김도훈, 김경호 공동체지원팀원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김도훈, 김경호
- 직책 : 전주도시혁신센터 공동체지원팀원
- 주요업무 : 마을 계획 사업 (온두레공동체 발굴, 육성 지원)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전주도시혁신센터
- 설립 : 2001년
- 소개 :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공동체, 도시재생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조직
- 활동 : 전주시의 공모사업인 온두레공동체를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팀. 2월부터 코로나로 기존 사업(체육대회 등)들의 무산으로 코로나 대응활동을 진행함. 전주시 산하 활동 조직 구성,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운영함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착한 소비 챌린지 캠페인

-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코로나19를 지역에서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로 진행함. 5만원 이상 물품 구매 후 영수증을 촬영하여 SNS(네이버 밴드)를

통한 인증으로 캠페인 진행. 현재 6백만 원 이상 인증되어 120여명 참여 추정됨. 1명이 2명 이상 추천하자는 취지였으나, 자발적으로 5~10명 지목하며 확대됨

- 소상공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 센터에서 시작을 했으나 마을공동체로 퍼지면서 자발적으로 확산됨

(2) 물품 기부 캠페인

- 센터에서 물품기부를 받아 행정단체에 전달하고, 행정단체가 직접 주민센터나 배부처를 통해 물품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45개 공동체가 참여하였고, 취약계층이 많은 동네로 배부처를 설치하거나, 세부적으로 직접전달하기도 함. 김치 등 음식물은 기간에 맞추어 나누어야 해서 긴급하게 움직임

- 시청 주무관과 연결된 네트워크로 원활한 소통 및 효율적인 전달이 가능했음

(3) 마스크 포장 작업 봉사활동

- 3월 8일에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배부하기 위한 개별포장 작업을 진행함. 마스크 8만개를 포장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필요해 전주시내 60~80개 공동체가 모인 온두레공동체 카카오톡방에 도움을 요청해 100명을 모아 5시간 만에 작업을 완료함

- 이후 두 차례 정도 작업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자들과 인원제한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물품지원을 받음

② 재원조달 방법

- 정부 보조금 및 시민후원금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마을계획 사업으로 진행예정이었던 플리마켓 야호시장, 체육대회 등을 대체하고 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긴급한 일손에 투입 및 지원함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복지재단 산하 복지공동체, LX, 커뮤니티 센터, 노인인력개발원, 전주시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함

- 전주시 상황실에서 중간지원조직단체들이 현안을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회가 있었음. 민간영역끼리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견 차로 진행하지 못함. 협업체계는 있지만, 많은 공동체들을 만나지 못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움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빛났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돌려

함. 마을 계획사업을 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온 센터로 주민들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코로나대응활동의 참여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음

② 활동의 한계

- 코로나시기 대면활동의 제약이 있었으나,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영상통화 플랫폼을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워해 소규모로 직접 대면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음
- 재난환경에서 어떤 활동들을 이어나가야 하고,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③ 후속사업 여부

- 추후 대응과 활동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음

④ 필요한 후속조치

- 후속조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함.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과, 비대면을 선호하지 않는 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더 활발한 주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함. 특히 마을공동체 기본법, 주민자치조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20) 연수구 코로나19 마을과 함께 이겨내기 모임, 장수진 대표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장수진
- 직책 : 코로나19 마을과 함께 이겨내기 모임 대표, 인천여성회 연수구지부장
- 주요업무 :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함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연수구 코로나19 마을과 함께 이겨내기 모임
- 설립 : 2020년
- 소개 : 송도국제도시 맘카페, 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 인천여성회 연수구지부, 인천

시민재단 등 마을공동체와 짱뚱이 어린이 도서관, 연수평화복지연대, 언니네 반찬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인 모임

- 활동 : 취약계층(노인, 아동 등)을 위한 물품 및 음식 나눔,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마을주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함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의료진 도시락 지원

- ‘언니네 반찬’의 도움을 받아 1개월 동안 보건소에 배달함. 자원봉사를 하는 의료진들 20여명을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서 배달함
- 코로나 상황에서 모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을 모아 도시락을 싸고, 모자라는 반찬들은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부에서 만들어 보충함.
- 주말에는 도시락배달을 하지 않았는데, 마을상가에서 후원이 들어오기도 해서 후원받은 음식들을 전달하기도 함

(2) 물품 기부 캠페인

-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때, 외국인들의 경우는 공적마스크에서도 배제되어 마스크 착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외국인 혐오와 차별까지 이어지자, 마을도서관에서 바느질을 하던 모임과 함께 마스크 만들기를 진행함
-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마스크를 만들고 전달함

(3) 행복꾸러미 전달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지원을 고민함. 급식을 먹던 아동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가져다주고자 했지만, 아동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꾸러미로 만들어 전달 함
- 연수구 1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월 30일에 모두 전달함

(4)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 선학중학교(혁신 학교) 다문화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고자 오전, 식사, 오후 프로그램을 기획함. 목공 수업 등 방과후 수업들을 배치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다문화청소년들 이외에도 선학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확대하여 2주간의 방학기간 동안 식사와 수업 등 프로그램을 진행함

② 재원조달 방법

- 행복꾸러미 전달 사업은 인천시민재단 지원금으로 진행함
- 도시락사업은 개별 후원금으로 진행함
- 청소년 방학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 보조금을 받아 진행함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2019년 어린이 식당사업을 하면서 마을학교 교사들이 음식을 만들어 두면, 주민들이 찾아와 1천 원씩 내고 식사하는 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진행했었음.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 의료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이 가능했음
-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을 하고, 어린이 식당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그 만남이 도시락사업으로도 이어짐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도움을 줌
- 인천시민재단은 사후 재정정리 등의 문제가 협력에 큰 장애가 되었다고 함. 인천시에 신고를 하는 행정절차 등이 복잡해서 힘들었음. 관의 구조나 체계를 따르는 게 힘들고 조심스러웠음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마을공동체들 여럿이 모여 사업을 실행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이 함께하면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기운을 얻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조금씩 상황에 맞게 바뀌가면서 진행했음. 마을공동체였기에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② 활동의 한계

- 마을주민들과 공동체 안에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고, 서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곧바로 실행했기 때문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음. 사업의 주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사업 진행 시 잡음이 있었음. 완벽하지 않더라도 체계를 갖춰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음. 이를 연수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도와줌

③ 후속사업 여부

- 청소년 방학프로그램의 경우 겨울방학 때 예정되어 있음
- 작년 이후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식당을 진행하고자 함. 어린이 식당과 함께 식생활 개선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 8월 말에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뤄짐

④ 필요한 후속조치

- 누구에게나 재난대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재난현장에서 마을공동체들이 어떻게 역할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상적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등 재난상황에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진행했었고, 큰 의미가 있었음. 이외에도 재난 후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 보면 좋겠음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김진곤 소통협력팀장, 김희정 과장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김진곤
- 직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통협력팀장
- 주요업무 : 국제협력, 대정부협력, 대시민사회 협력 업무
- 이름 : 김희정
- 직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통협력팀 과장
- 주요업무 : 국제 협력, 대정부 협력, 대시민사회 협력 업무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 설립 : 1998년
- 소개 :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 공동으로 모금을 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단체, 개인들에게 배분을 하는 기관
- 활동 :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모금 및 배분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코로나19 모금 및 배분

- 2월부터 4월까지 특별모금을 진행하여 배분함. 총 1,079억 원이 모금되었음. 현재는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모금을 진행 중임
- 방역, 위생관리, 취약계층 생계지원, 복지서비스 공백 지원,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 지원 등에 약 1천억 원 지원함
- 서울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배분을 실시함

(2)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춘 국제 및 시민사회 협력

- 복지계 및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정보를 취합하여 웹진을 발행함. 이 정보를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 NGO에 배포함
- 카카오 임팩트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제인식 및 솔루션을 찾는 워크숍을 진행함

② 재원조달 방법

-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업, 개인, 단체 참여로 현금, 현물 포함하여 1,079억 원 모금함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기존 활동의 연장선에서 사업을 진행. 다만, 기존사업과 달리 행정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배분 프로세스를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함. 또한 사회복지영역 외의 다양한 단체로 협력대상을 확장하였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직접 배분사업을 실시하며 의료진, 봉사자 등 협력파트너를 확장함. 또한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을 취합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및 공유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뉴스레터를 통한 홍보협력도 협력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카카오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문제정의 워크숍 진행하며 카카오에서 콘텐츠를, 미스크에서 워크숍의 결과 및 성과 정리에 도움을 받았는데, 기존보다 교류의 영역이 한 단계 확장되었다고 느낌
- 기관내부에서도 협력의 여부, 정도,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음. 사회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기관들만의 협력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보조금을 받는 특성상 점점 서비스 전달자의 역할로 고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된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윈-윈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기존에 협력하던 단체들과는 형식, 관계 면에서 익숙한 부분이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는 용어, 관점 등에 차이가 있어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변화를 시도 중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특별한 사회문제가 생겼을 때 모금회가 빠르게 판단해서 지원협력을 확대한 것에 대해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모금회가 달라졌다는 내외부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임
- 한국의 소식들을 취합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린 활동도 만족스러웠음

- 코로나19 모금이 이후 추가적인 모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성금을 제외하고도 평소보다 모금이 더 많이 되었음. 이는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기부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자기효용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경험하고 복지의 개념이 확장되는 계기였음

② 활동의 한계

- 각 기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의 내용과 범위를 협의하는데 한계를 느끼기도 함.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부딪혀야 하는 부분임. 각자의 역할에 대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③ 후속사업 여부

- 코로나 관련 배분사업 추진 예정
- 협력의 경험을 조금 더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임
-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다뤄지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사회복지와 연결할 수 있을지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
- 시민사회와 협력을 이어가며 느슨하게나마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④ 필요한 후속조치

-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경험의 확대와 이를 위한 네트워크

(22) 지역재단협의회,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운영위원장, 상임이사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김범용
- 직책 : 지역재단협의회 운영위원장/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 주요업무 :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직책 사무처장으로서 1인 실무체계이기 때문에 기획, 운영, 예산 관리까지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함. 현재는 2020년도 제3기 지역재단학교 운영을 준비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점검 및 온오프라인 강의계획을 설계하고 있음. 부천희망재단의 모금 및 대외협력을 담당함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한국지역재단협의회
- 설립 : 2017년
- 소개 : 2013년 4개 지역재단(천안, 부천, 성남, 안산)이 지역재단협회의 모임으로 출발해서 2017년 사단법인(한국지역재단협의회)로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의 허가를 받아 발족 법인으로 성립됨. 지역재단 활동을 통해 회원단체 간 연대, 교육, 모금기법을 증진시키며 지역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민간단체,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활동을 주축으로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함
- 활동 : 지역재단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임직원워크숍, 지역재단학교, 회원공동 모금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지역재단 실무자의 역량을 높여 지역재단의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정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2020년도 기준 회원재단 코로나19 공동모금, 지역재단학교 3기 운영 등의 이슈가 있음
- 단체 : 부천희망재단
- 설립 : 2011년
- 소개 : 2010년 부천 시민 90여명이 시간과 재능, 자원, 공간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나눔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공익적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지역재단 창립. 80만 부천 시민의 1%인 8,000명이 월1만원(연간 10억)기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 스스로 기부금 조성을 통해 지역의 빈곤과 차별 등 공공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함
- 활동 :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5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아동, 노인 등 부천 지역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활발히 전개함

나-1. 코로나19 대응활동 (한국지역재단협의회)

① 주요 활동

(1) 대구지역 지원 공동 모금

- 3월, 대구지역 대유행에 대한 지원을 결정, 코로나 전국 확산에 따른 각 지역재단의 상황 및 사업운용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재단이 참여하여 모금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함
- 부천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남동이행복한지역재단, 강원살림, 인천시민재단 5개 지역재단이 모금하여 3월 중 9,550,000원 및 쌀 330kg 모아 대구시민센터에 긴급 지원함

(2) 활동가 지원 및 인터뷰 자료집 <대구시민사회 응원 프로젝트> 제작

- 4월부터 대구시민사회와의 소통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적 시민사회 역할과 과제를 정리하는 활동을 하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단체, 활동가 등을 파악하고 일상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인터뷰 자료
집 제작 진행

(3) 국내 민간 코로나 대응활동 영문 매거진 배포

- “힘을 내요 대구경북! 함께해요 시민사회!” 프로젝트와 국내의 민간 코로나 대응 활동을 영문 매거진(United way 네트워크)을 통해 41개국 활동가들에게 배포됨.
(<https://eng.chest.or.kr/html/renewal/ENG-index.htm>)

② 재원조달 방법

- 각 재단별로 자체 모금 진행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2019년 강원산불피해지원 공동모금, 공동지원의 경험이 있어서 대구지역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했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구지역지원과 동시에 개별재단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코로나 지원사업을 병행하기로 어려웠음

나-2. 코로나19 대응활동 (부천희망재단)

① 주요 활동

(1) 부천지역 마스크 지원사업

- 2월 코로나 유행 초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마스크제작, 배포를 추진함, 부천희망재단에서 재봉틀 8대 구입비 8백만 원을 지원하고, 부천자원봉사센터가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마스크 부족사태에 긴급지원을 추진함. 그 외에도 부천소재 마스크기업과 연계하여 수만 개의 마스크를 후원받아 배포하고, 성당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손세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2)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사업

-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기업후원을 받아 라면박스크기로 10만원 상당의 생필품키트 100개를 제작하여 18세 미만 취약아동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천지역사회 소재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생계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함

(3) “내가 도울게요” 기금

- 부천시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내가 도울게요” 기금 약 5천만 원으로 노인 가정 103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함
- 부천소재 3개 광역 노인복지관과 협의연계해 외부출입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을 지

키기 위해 가정마다 1개 1만원 상당의 식물을 배달해 키우도록 하였음

(4) 대구지역 지원 공동 모금

-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에서 기금을 모아 대구시민센터에 전달하여 대구시 공익활동가들을 도왔는데, 이때 15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

② 재원조달 방법

-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이 조성됨. 전체적으로는 약 5억 원 정도의 현금과 물품을 조성해 지원하였음. 기업 모금이 60~70%, 부천시 복지정책과와 공동으로 조성한 “내가 도울게요” 기금 4800만원, 그 외 시민모금과 일부 자체기금 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시민모금은 소액 기부라 비중이 높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 기금사용액 중 부족 부분에 대해 희망재단에서 모은 자체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함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코로나19 기간 중 실행한 지원사업은 지원명분은 다르나 사업 대부분은 부천희망재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노인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지원사업, 시민사회 지원사업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상사업이 코로나19로 바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긴급특별사업으로 배분하여 진행되었음
- 대구 코로나19 지원사업은 지역재단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긴급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2019년 강원도 강릉 고성 산불화재시기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차원에서 각 재단이 자체 모금을 통해 강원도 지역재단인 강원살림을 통해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네트워크로 강원시민사회조직에 지원한 사례가 있음. 지역재단이 위기지역에 지역연대 차원의 특별모금을 진행하는 것은 부천희망재단과 같은 지역재단의 존재 이유이자 지역재단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단체임을 확인시키는 계기라고 볼 수 있었음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영역별 협력이 많이 진행되었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스크제작 및 지원은 자원봉사자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취약아동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어려운 어린이들 지원은 어린이집연합회와, 취약노인계층 지원사업은 노인 관련단체 및 노인복지관들과 협력하였고, 부분적이지만 부천주민자치회와도 협력을 추진하였음. 또한 부천시를 비롯해 부천문화원, 부천박물관, 만화영상진흥원 등의 공공기관과도 협력을 추진하였음. 지역 내 많은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였음. 그런 점에서 개별적인 영역과는 매우 다양하게 협력관계를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부천지역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들 중심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부천시 주도로 공공네트워크만 구성운영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모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같은

공적기관이 적극 나서야 하나, 선거법의 제약 등으로 부천시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는 공적기관 등이 적극 나설 수 없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거나 기부를 촉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음

- 코로나19로 복지관, 문화센터, 청소년기관, 어린이집 등 공적 기관들이 다 폐쇄되어 기관 직원들과 대면협의 및 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실제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나 취약계층,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프리랜서 예술가와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수혜대상 파악 및 선정이 필요하나, 이러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특히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강화되면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없이 위기 시 대상자 파악 및 선정이 매우 어려움. 그런 점에서 지역차원에서 지역재단들이 공적기관과 사전에 일상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재단과 공익활동영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함

다-1. 자체평가 (한국지역재단협의회)

① 활동의 효과

- 코로나19 재단 모금사업을 계기로 조직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느낌. 현실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과 체계를 만들고자 비대면 사업과 소통의 운영을 차근차근히 진행 중임

② 활동의 한계

- 기존의 모금은 긴급지원일 경우, 모금의 목적과 활동, 특히 지원영역과 수혜자선정이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대구지역지원 공동모금은 이전에 겪지 못했던 형태의 지원, 특히 대구 외에도 2차, 3차 피해와 영향력이 계속되는 과정 안에서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모금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이 특정되지 않고 모금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③ 후속사업 여부

- 대구시민센터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대구지역 코로나19대응관련 활동가 인터뷰 자료집 발간이 예정되어 있음

다-2. 자체평가 (부천희망재단)

① 활동의 효과

- 부천희망재단이 부천지역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알려지고, 홍보된 것이 가장 큰 성과임.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부천시민과 취약계층에 대해 부천희망재단의 매우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천시 공무원들과 주민자치회 위원들, 함께 협력했던 기업 및 여러 공적기관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들 등으로부터 부천희망재단의 활동상이 잘 알려지게 되었음. 지역재단이 지역사회에 이로운 일을 도

맡아서 하는 좋은 단체임을 확인함. 부천희망재단이 부천지역 내에서 보다 확고한 지역재단으로 성장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임

② 활동의 한계

-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특히 각 동의 주민자치회와의 연계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주민자치회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시기에 적극 참여한다면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도 시민자치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위기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수많은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임. 실제 주민자치위원 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이 많고 기부하는 위원들도 많음.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 형성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함. 시민사회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부천희망재단은 주민자치회와 공동기금(예, 아동소원기금, 노인소원기금, 범죄피해지지원기금, 지역공동체기금 등)을 조성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임. 부천희망재단은 지역기금을 조성해서 좋고,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음. 주민자치회와 매년 10~2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협력구조가 필요함. 현재 부천시에는 10개 광역동 주민자치회가 조례로 만들어져 2020년부터 운영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36개 마을자치회가 유기적관계로 활동 중임
- 코로나19 위기 시 시민사회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마스크지원사업 외 특별한 지원사업은 추진하지 못했음. 부천지역 시민단체 상당수가 어드보커시 단체다 보니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음. 한국의 경우 지역의 어드보커시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화 되어 공적기구로 편입되어 있음. 사회서비스 상당부분을 일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서구선진국의 경우는 코로나19 위기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긴급지원이 활성화되었으나 한국의 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들 대부분 민간위탁 형태의 공적기구로 편입되다보니 어드보커시 단체를 제외한 비영리민간단체가 그리 많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많음. 부천희망재단과 같은 지역재단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직접지원보다 복지관 등 중간지원조직이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이 중심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음

③ 후속사업 여부

- 코로나19 관련 큰 지원사업은 마무리되었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 부분적으로 있어 일부 진행되고 있음
- 부천희망재단이 코로나19에 활동한 내용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임. 어디서 어떻게 모금되었고, 누구와 협력하여 어떤 대상과 기관에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이 누구에게 왜 지원되었는지,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여건이 되면 보고회나 토론회 등도 개최도 검토하고 있음

④ 필요한 후속조치

- 민간재단 자체적으로 아무리 홍보해도 모금확산에는 한계가 큼. 그런 점에서 위기 시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차원의 모금과 기부활성화에 역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민간영역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단설립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대응에 지역재단을 활용하여 모금과 나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3) 글로벌케어, 백은성 상임대표

가. 개요

① 인터뷰이 소개

- 이름 : 백은성
- 직책 : 상임대표
- 주요업무 : 글로벌케어 실무 책임자로서 모금, 사업 발굴, 네트워킹 등 총괄

② 소속단체 소개

- 단체 : 글로벌케어
- 설립 : 1997년
- 소개 : 1994년 르완다 내전에 의료진들이 진료봉사를 하면서 한국의 국경없는의사회를 만들고자 의료진들을 모아 재난지역에 의료봉사를 함. 재난응급의료구조 NGO로 시작하였으나, 국제보건 NGO로 점점 영역을 넓히고, 인도적 지원사업을 함
- 활동 :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결핵예방사업, 전염병사업, 식수사업을 진행함. 서아프리카(모로코, 모리타니아, 나이베리아, 니젤), 중미(카라비아, 온두라스, 아이티), 아시아 최빈국 등 10개 나라에서 인도적 지원사업과 국제개발사업을 진행함

나. 코로나19 대응활동

① 주요 활동

(1) 대구 의료 지원 (3월 3일~6월 1일)

- 재난전문 NGO로서 대구에 직접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를 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찾음. 글로벌케어 후원자 및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대구동산병원 부원장의 요청으로 보건전문가 2명을 파견함(3월 3일)
- 대구동산병원의 중환자실을 맡아 중환자실을 20개로 세팅함
- 대한중환자의학회 의사들을 설득하여 의료진을 확보함. 7차에 걸쳐 일주일씩 의료진을

지원. 1차로 의사 5명, 간호사 5명을 파견하여 중환자실 운영, 코로나 중환자들을 치료함. 3개월 동안 총 의사 21명, 간호사 11명이 파견됨

(2) 대구 의료진 지원

- 의료진을 위해 간식을 지원함. 초반에 간식이 많이 배달되다가 나중에는 부족해져서 배달이 가능한 햄버거, 피자, 치킨 가게에 선결제를 해놓고 의료진들이 필요할 때마다 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함
- 하루 종일 방호복을 입고 병실에 있으면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조배터리를 지급함

(3) 대구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

- 사회복지사 2명을 파견해 대구시 내 5개 복지관과 연락하여 노인들을 위한 키트를 살펴봄. 라면, 햇반 등으로 구성된 키트에 대해 조사하여 노인들이 밀반찬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받아 밀반찬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했으며 전달과정에서 방문 문진도 함께 진행함
- 센터 근처의 밀반찬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들에게 의뢰하여 비대면으로 전달
-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을 600가정에 나눔
-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주의 딸기농장과 연계하여 과일과 영양제를 노인들에게 배달함

(4) '세계화 시대의 감염병, 감염병의 세계화' 리포트 작성

- 전문가 그룹으로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함
-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에도 배포 예정

(5) 구로구,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청소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소외계층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돌봄이나 식사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는데, 코로나19가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에어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50개 센터에 전문 업체를 불러 에어컨청소를 진행함. 약 1천만 원 지출

(6) 해외 8개 국가 코로나19 지원 활동 (4월~)

- 모로코, 모리타니아, 레바논, 방글라데시, 네팔, 아이티, 온두라스, 필리핀 8개 국가에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활동, 교육 활동 등을 진행함
- 취약계층에 식량, 위생용품 등을 배분하고 있음
- KOICA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자체 모금도 진행 중

② 재원조달 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에서 10억 원 지원받음
- 글로벌케어 자체모금 2억
- 대구 동아쇼핑에서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나눔 물품들을 할인해서 공급

③ 기존 활동과의 연관성

- 국제개발, 국제의료보건 사업을 주력으로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구를 해외 재난지역 사업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함

④ 협력여부 및 개선과제

- 대구 의료지원 때 경증치료센터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와 협의하려 했으나 병원이 아닌 의료NGO에는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 결국 경증치료센터는 설치하지 못했음
- NGO들이 재난상황에서 개별모금을 하고, 각자의 네트워크와 방식으로 지원을 함. 대구의 경우, 많은 NGO들이 대구지원을 하고 싶어 했지만 감염병 상황에서 모두의 지원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음. 지자체에서 NGO들과 협력해서 기관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지원물품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모두 맞추는 방식이 필요함. 연장선에서, NGO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수혜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리스트 확보가 어려움. 구청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연결되었다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 확보와 전달이 훨씬 쉬울 것임

다. 자체평가

① 활동의 효과

- 코로나 환자용 중환자실 20실을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음. 서울지역도 중환자실이 3~5개밖에 없는데, 대구지역의 코로나 확산시기에 적절한 대처였음
- 대구지역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의 경우, 노인들이 과일이나 반찬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접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았음. 대부분의 구호물품들이 라면이 주를 이루는데, 어르신들의 경우 라면을 선호하지 않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전조사를 통해 기호를 맞춘 것이 큰 호응을 이끌어냄

② 활동의 한계

- 중환자실을 꾸리는 것 자체가 힘들었음. 공동모금회를 설득하기도 힘들었고, 설득해서 의료기기 및 인공호흡기를 미국에서 주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봉쇄해서 당장 기계가 없어 데모버전 기계를 이용하기도 함
-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중환자실 기계를 구입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문 이후 국가가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하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음. 병원에서는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모금액으로 운영할 때보다 더욱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음

③ 후속사업 여부

- 원래 진행하던 지역아동센터 심리상담치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한 명씩 검진을 하

고자 구로구,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50개에서 30명씩 1500여명을 1:1로 심리상담치료 진행 예정

④ 필요한 후속조치

-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큰 NGO들 위주로 후원금이 쏠리고, 작은 NGO들의 활동들은 언론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단체들은 모금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임

2020 NPO참여예산제 결과 자료집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연구조사 보고서

펴낸날 2020년 11월 30일

펴낸곳 코로나19타파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발행인 코로나19타파연대

편집팀 김모드, 류홍변, 박진, 백송이, 서민영, 여진, 이승훈

디자인 차지애

표지디자인 전수빈

인쇄 연일문화사

주소 0308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68 호은빌딩 3층

전화 02-734-3924

팩스 02-6280-3924

이메일 civic21@civilnet.net

2020 NPO 참여예산제 결과 자료집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연구조사 보고서



이 자료집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2020 NPO 참여예산제' 로 제작 되었습니다